

신남방 4개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투자환경 분석

2019. 11.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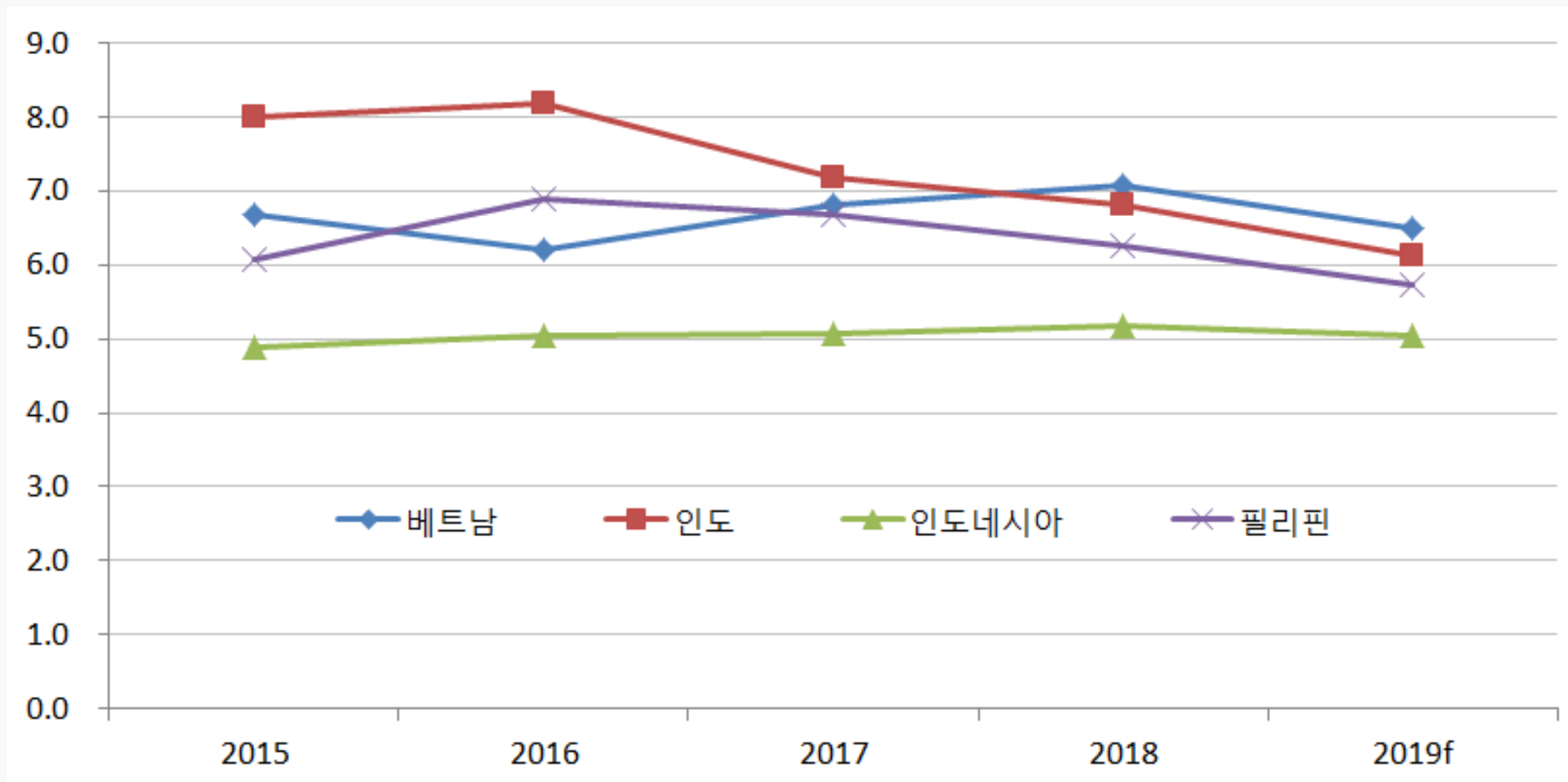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지역연구팀장 오경일

1. 신남방 4개국 경제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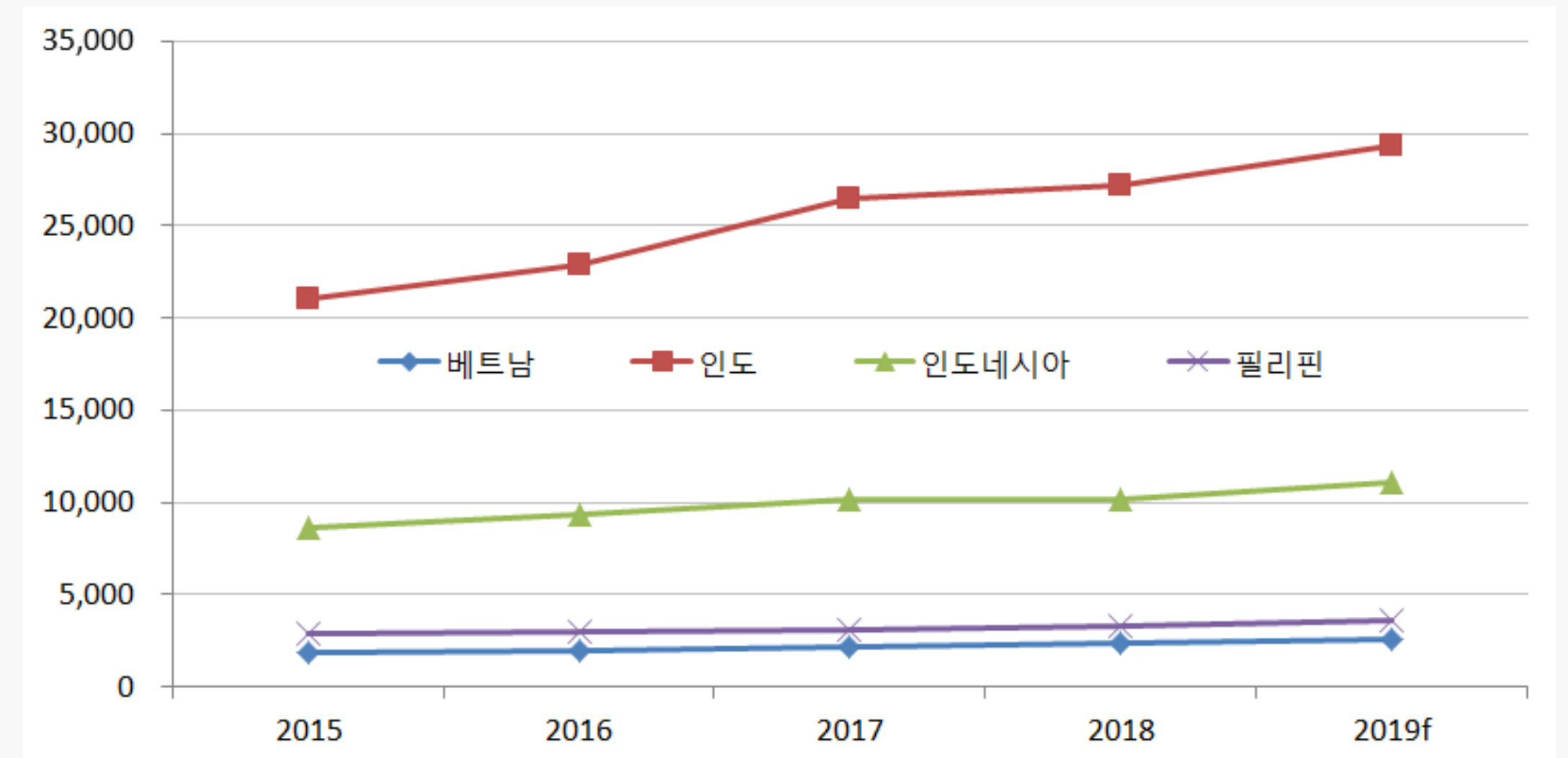
- 신남방 4개국 GDP 총액(2018년) : 4.3조 달러
- 전 세계 GDP의 5.1%, 아시아 개도국 전체 GDP의 22.5%
- 국제유가 불안정, 중동의 정치적 불안,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등 악조건 속에서도 4개국 모두 6% 내외의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속



[그림 1-1] 경제성장률 추이(% , '15~'19f)



[그림 1-2] GDP 추이(백만 달러, '15~'19f)



1. 신남방 4개국 경제 개관

신남방 4개국 경제 개요

- 인도 13.5억 명, 인도네시아 2.7억 명, 필리핀 1.1억 명, 베트남 1.0억 명의 인구(전 세계의 23.9%, '18년 추정치)를 바탕으로 생산능력 및 소비시장의 지속 성장 기대
- '20년 추정 청년인구 비중 20%대 중반 :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 1차산품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지 않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4개국 모두 제조업 기반 확장,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 추진 중

[표 1-1] 4개국 GDP의 천연자원 비중 합계(2017)

국명	신남방 4개국	중동아프리카 산유국 ^{주)}
비중	9.7%	146.0%

자료: 세계은행(data.worldbank.org)

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성장잠재력 (인구구조, 산업구조)

[표 1-2] 2020년 추정 전체 인구 대비 연령층 비중

구분	청년인구 비중 (15~23세)	생산가능인구 비중 (15~64세)	노령인구 비중 (64세 이상)
전 세계	23.1%	65.2%	9.3%
신남방 4개국			
인도	26.5%	67.8%	6.6%
인도네시아	24.5%	67.8%	6.3%
필리핀	27.4%	64.4%	5.5%
베트남	22.5%	68.9%	7.9%
유럽	16.3%	64.8%	19.1%
북미	20.2%	65.1%	16.8%

[표 1-3] 부문별 GDP 점유율(2017)

국명	농업	산업	서비스업
인도	15.4%	23.1%	61.5%
인도네시아	13.7%	40.9%	45.4%
필리핀	9.6%	30.6%	59.8%
베트남	15.3%	33.4%	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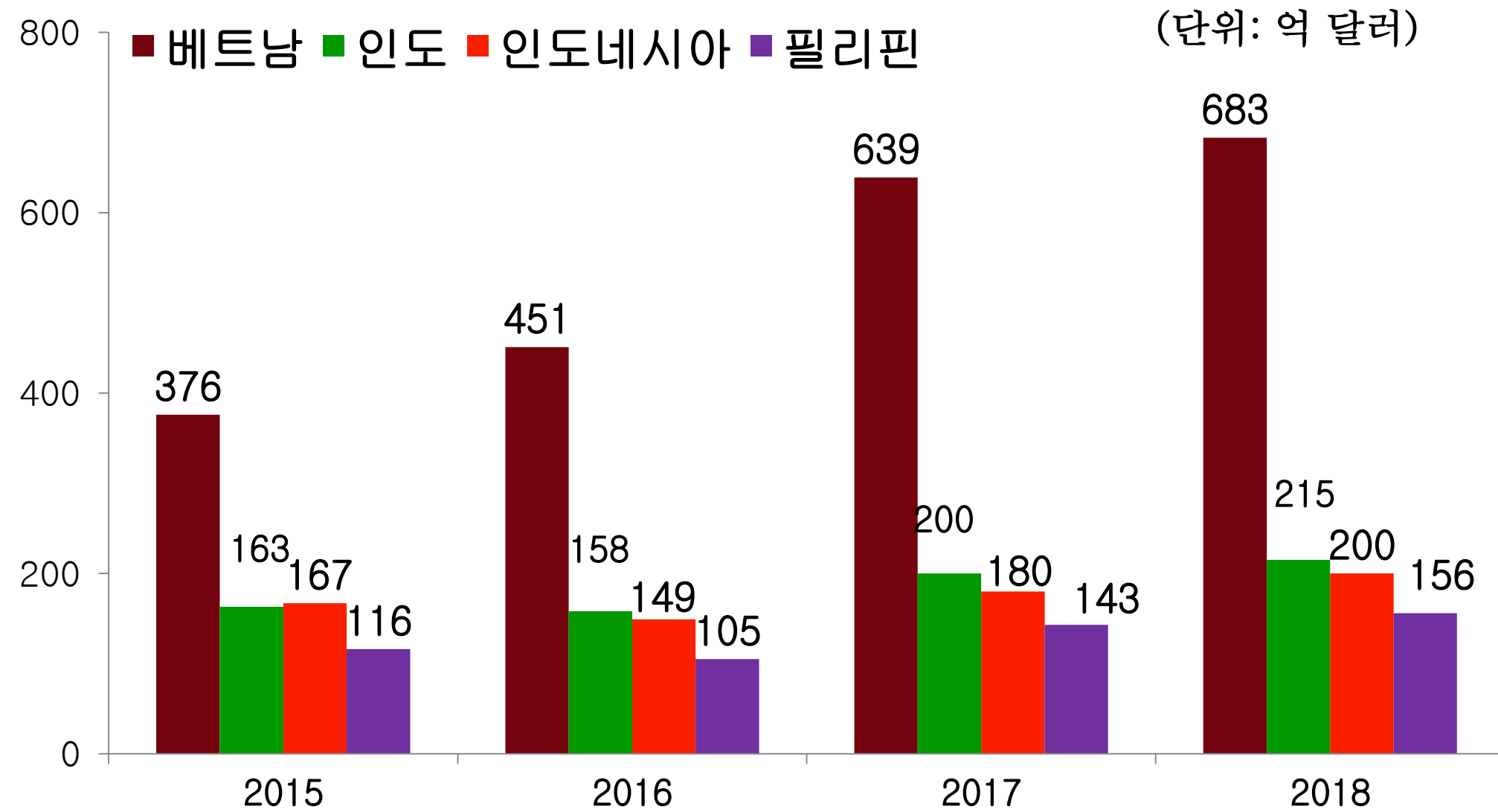
자료: [표 1-2] UN World Population Products 2019

[표 1-3] 세계은행(data.worldbank.org)

1. 신남방 4개국 경제 개관

우리나라의 교역 현황

[그림 1-3] 신남방 4개국과 한국의 교역규모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은 4개국 중 유일하게 수출/수입/교역 모두 최근 4년 간 증가 추세 지속('18년 기준)

[표 1-4] 한국의 국가별 수출/수입/교역 비중(2018)

국명	수출액	수입액	교역규모
중국	1,621 (26.8)	1,064 (19.9)	2,686 (23.6)
미국	727 (12.0)	586 (1.0)	1,315 (11.5)
일본	305 (5.0)	546 (10.2)	851 (7.5)
신남방 4개국	850 (14.1)	402 (7.5)	2,507 (11.0)
베트남	486 (8.0)	196 (3.7)	682 (6.0)
인도	156 (2.6)	58 (1.1)	214 (1.9)
인도네시아	88 (1.5)	111 (2.1)	199 (1.8)
필리핀	120 (2.0)	35 (0.7)	156 (1.4)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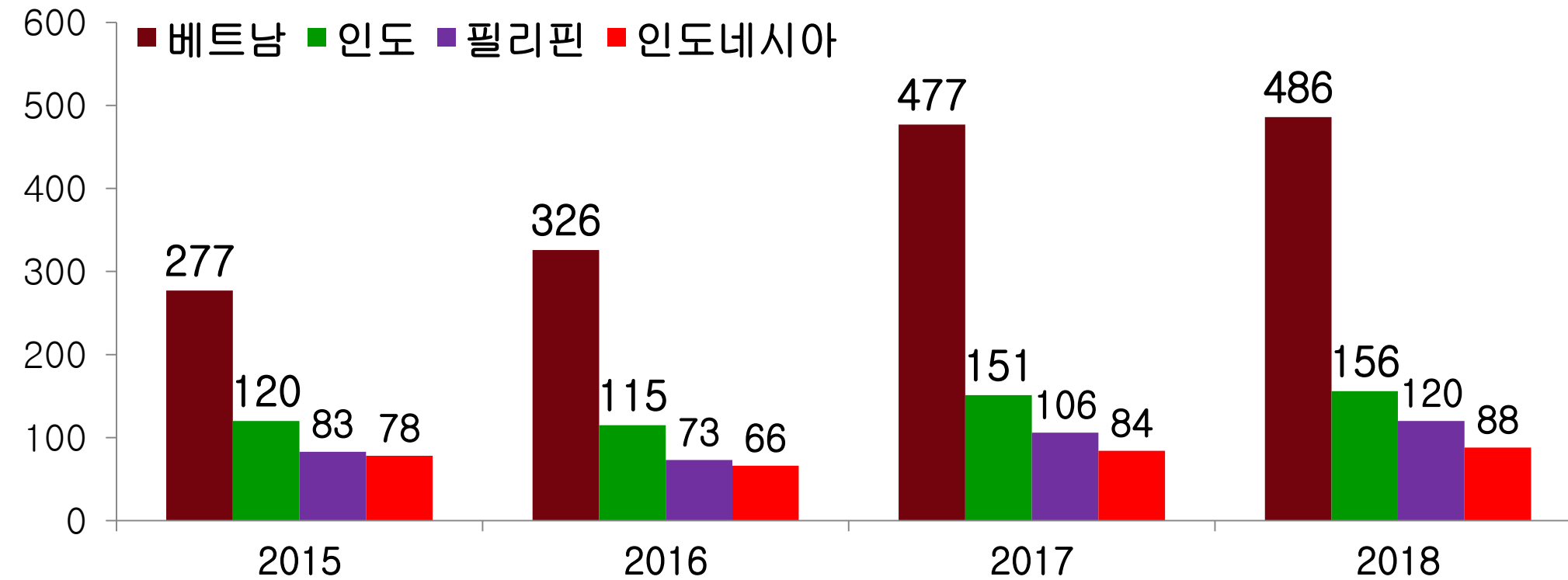
(): 비중, %

- 신남방 4개국과의 교역규모 = 1,253억 56백만 달러 : 대외교역 총액의 11.0%(2018년 기준)
- 수출액 : 850억 달러, 수입액 : 402억 달러
-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대 베트남 교역규모는 682억 달러로 대외교역 총액의 6.0%(전체 4위) 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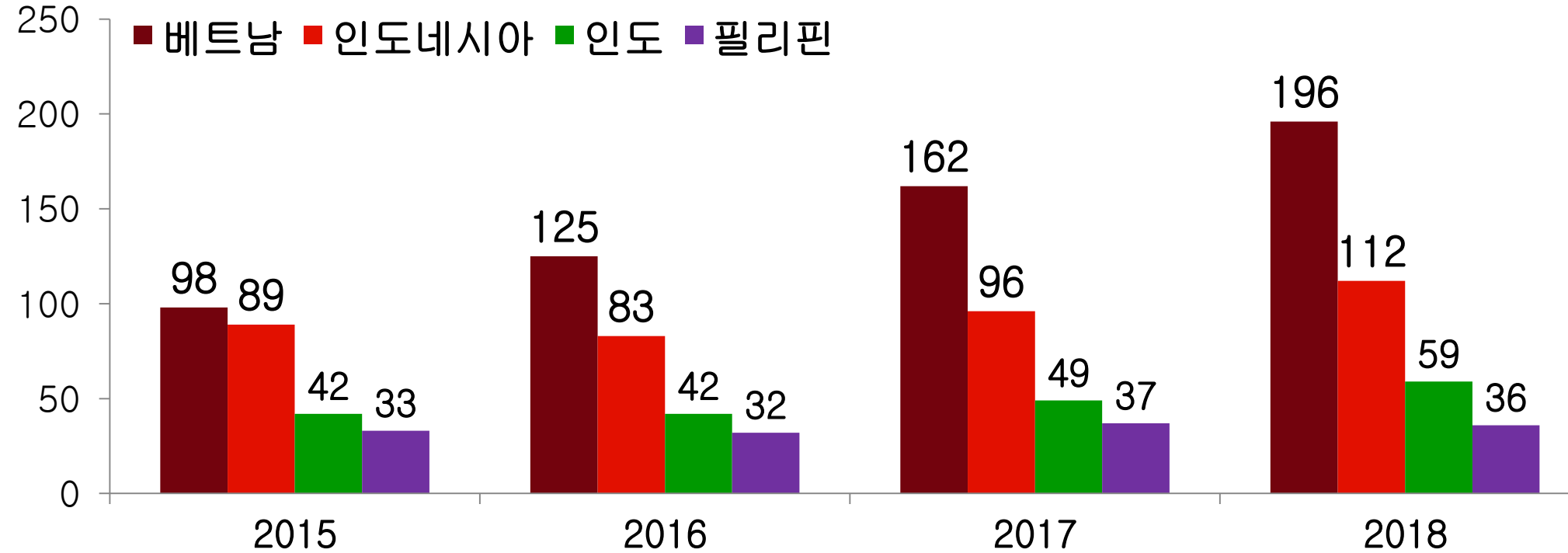
1. 신남방 4개국 경제 개관

우리나라와의 교역현황

[그림 1-4] 신남방 4개국에 대한 수출액 추이(단위 억 달러)



[그림 1-5] 신남방 4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추이(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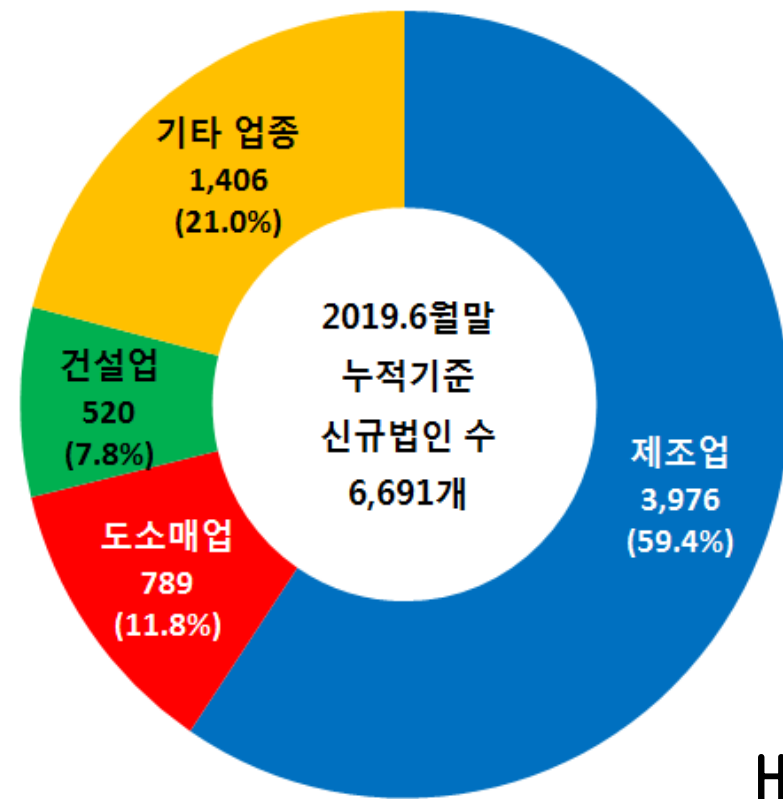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위, 아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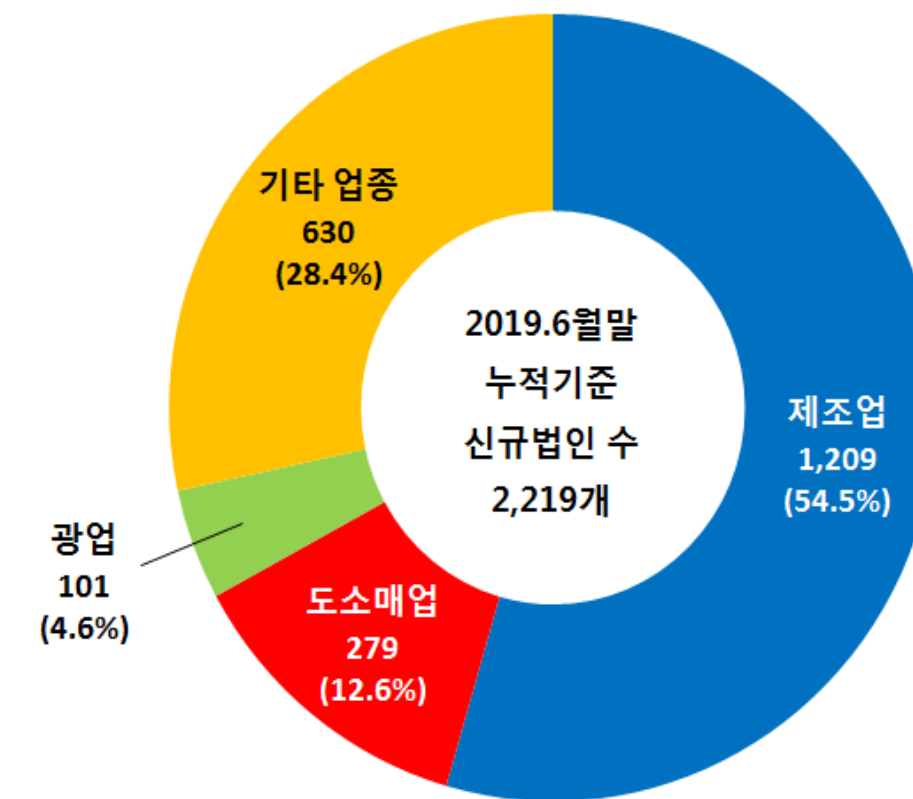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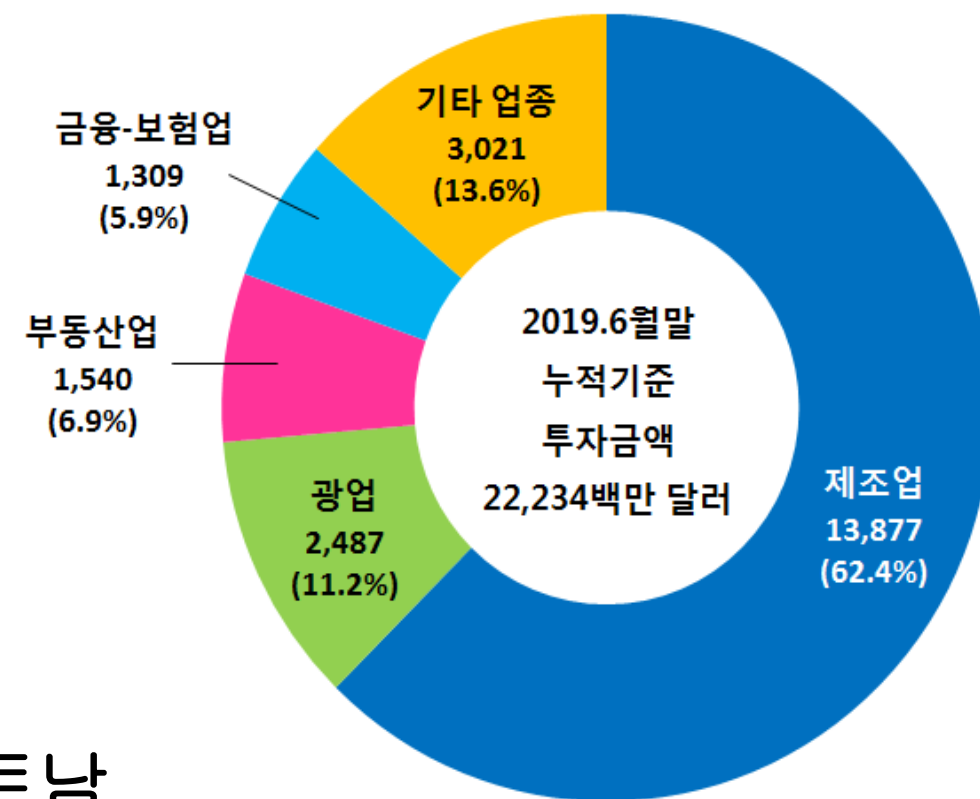
- 과도한 대 중국 의존도 완화 및 시장의 전략적 다변화 도모
-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필요성 대두
: 사드(THAAD) 배치 이후 중국의 각종 보복, 생산비용 상승,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등으로 투자여건 악화
- 넓은 시장과 지속적 성장을 견비한 신남방 국가들에의 진출 필요성 대두
- 대규모 인구 기반의 넓은 시장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및 투자처
- 이미 신남방 4개국은 2018년 우리나라 상품교역 총액의 11.0%(수출 14.1%, 수입 7.5%) 점유

1. 신남방 4개국 경제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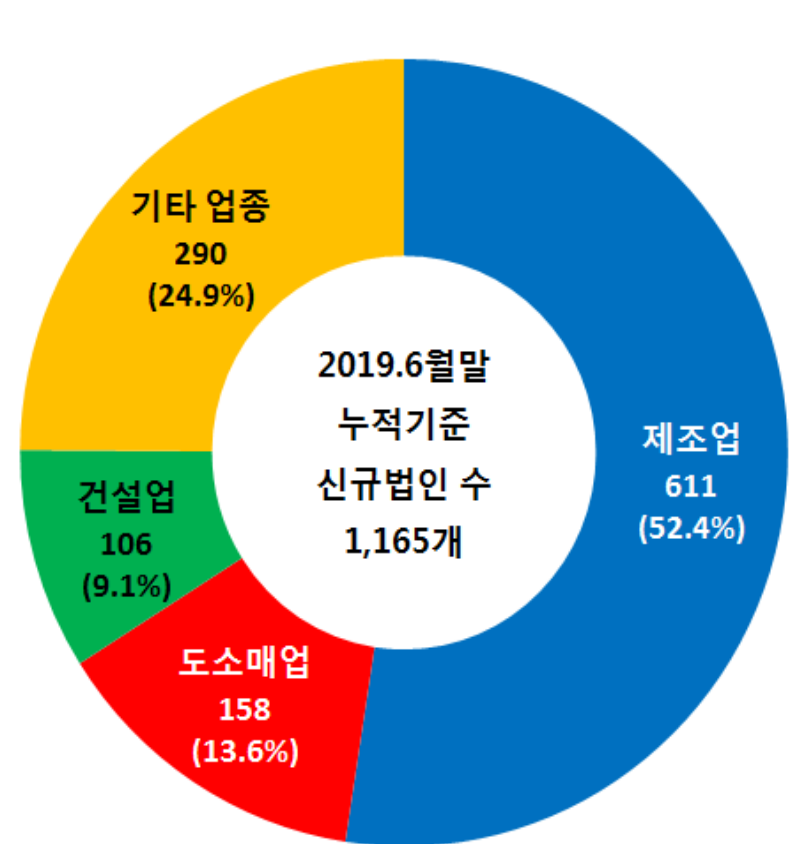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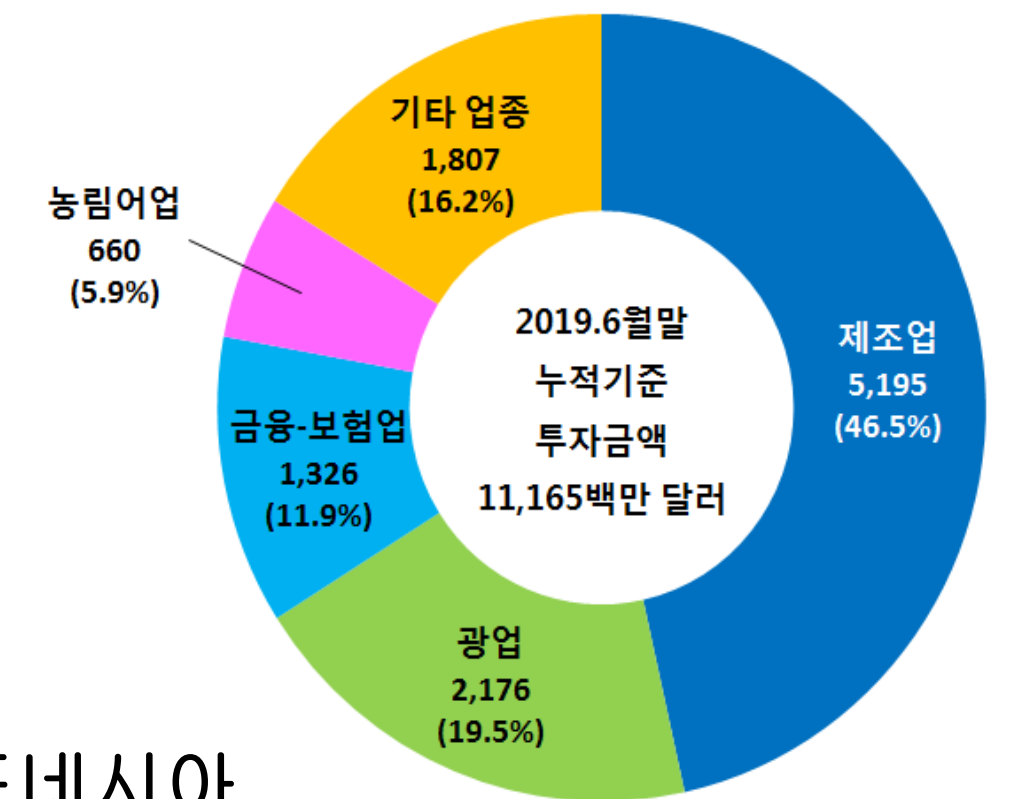
[그림 1-6] 우리 기업의 업종별 직접투자 현황(2019.6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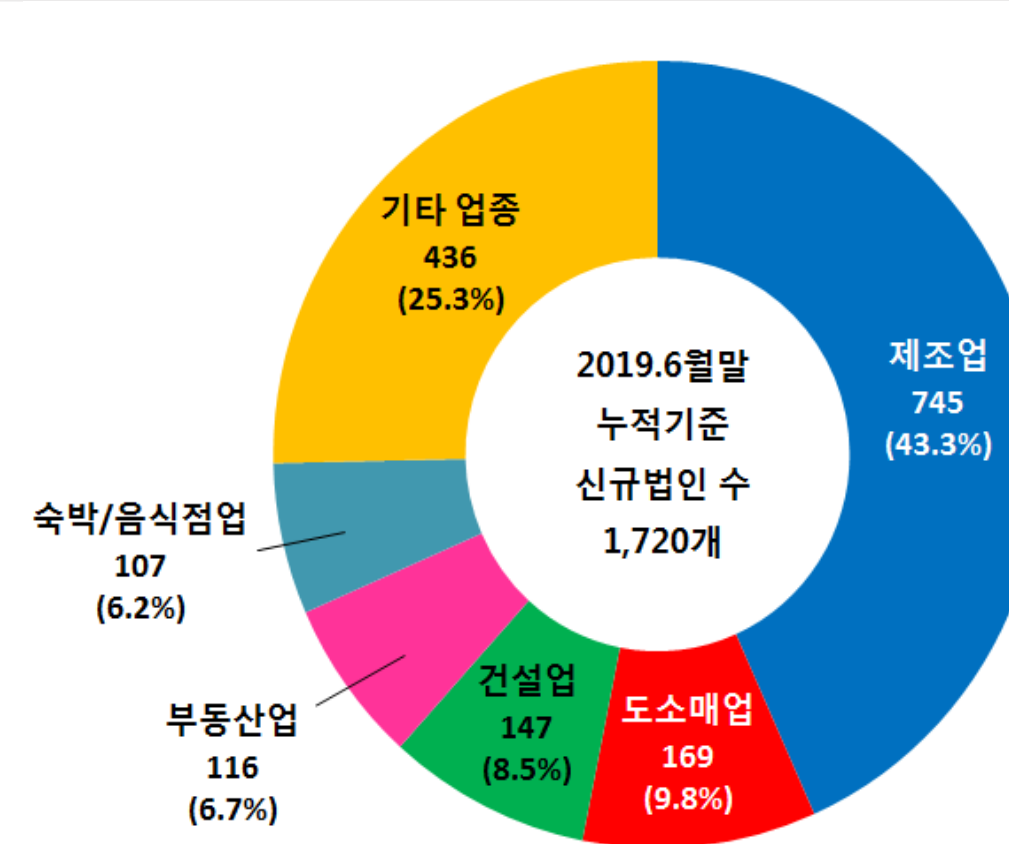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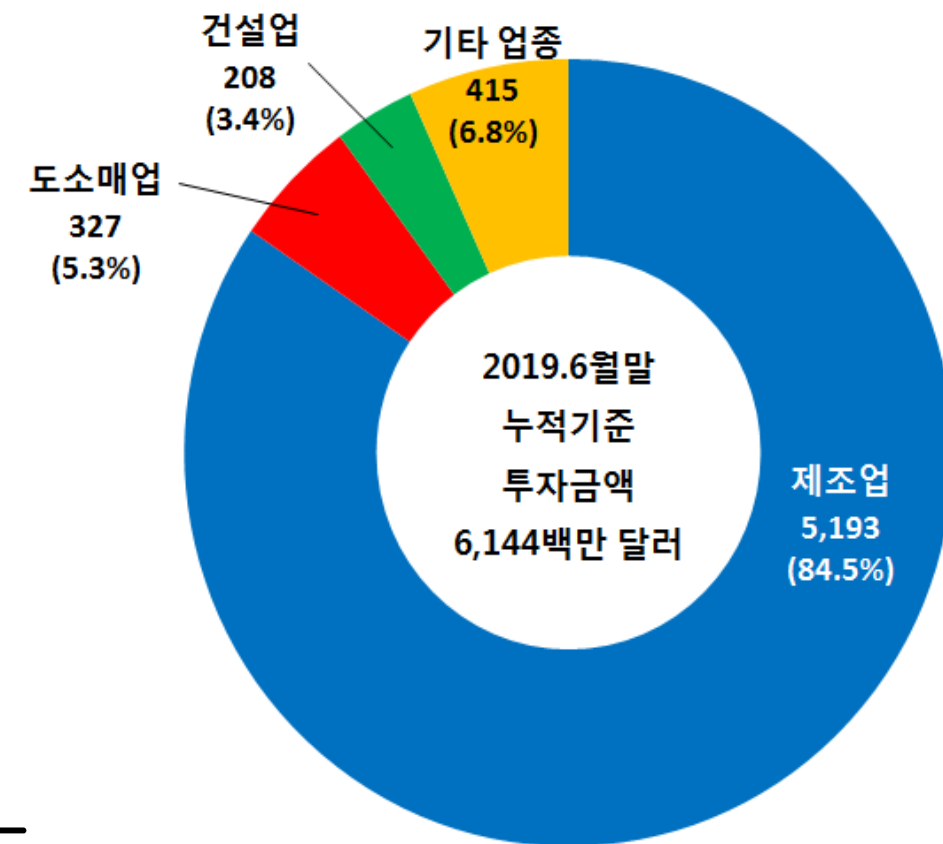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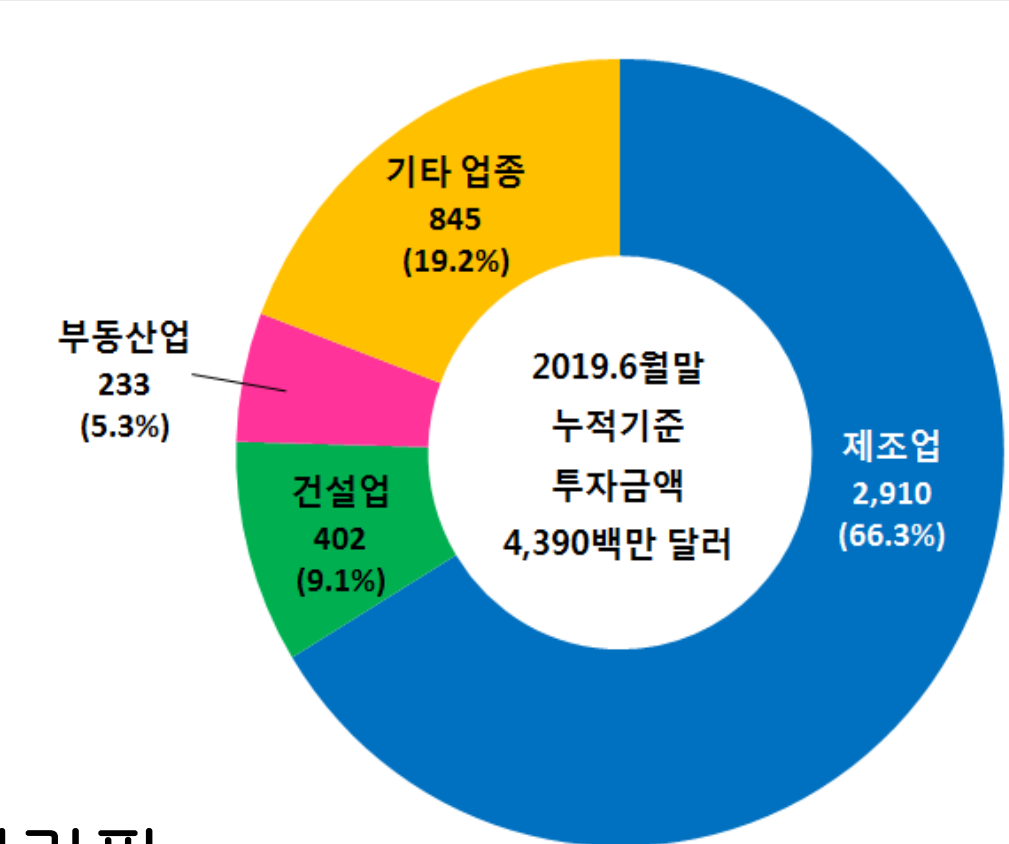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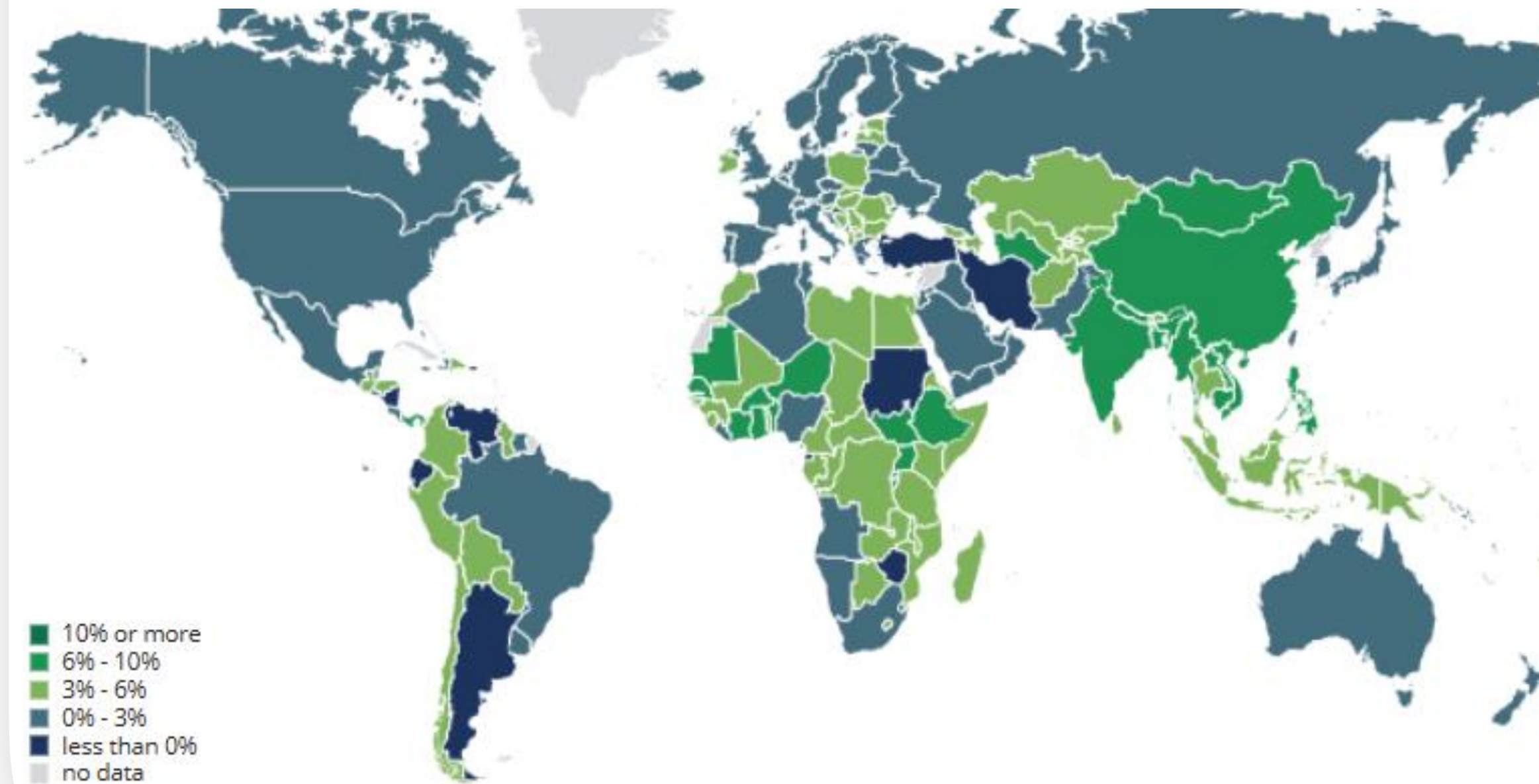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 인도



[그림 2-1] 전 세계 경제성장률 지도



자료: IMF

국내경제

[표 2-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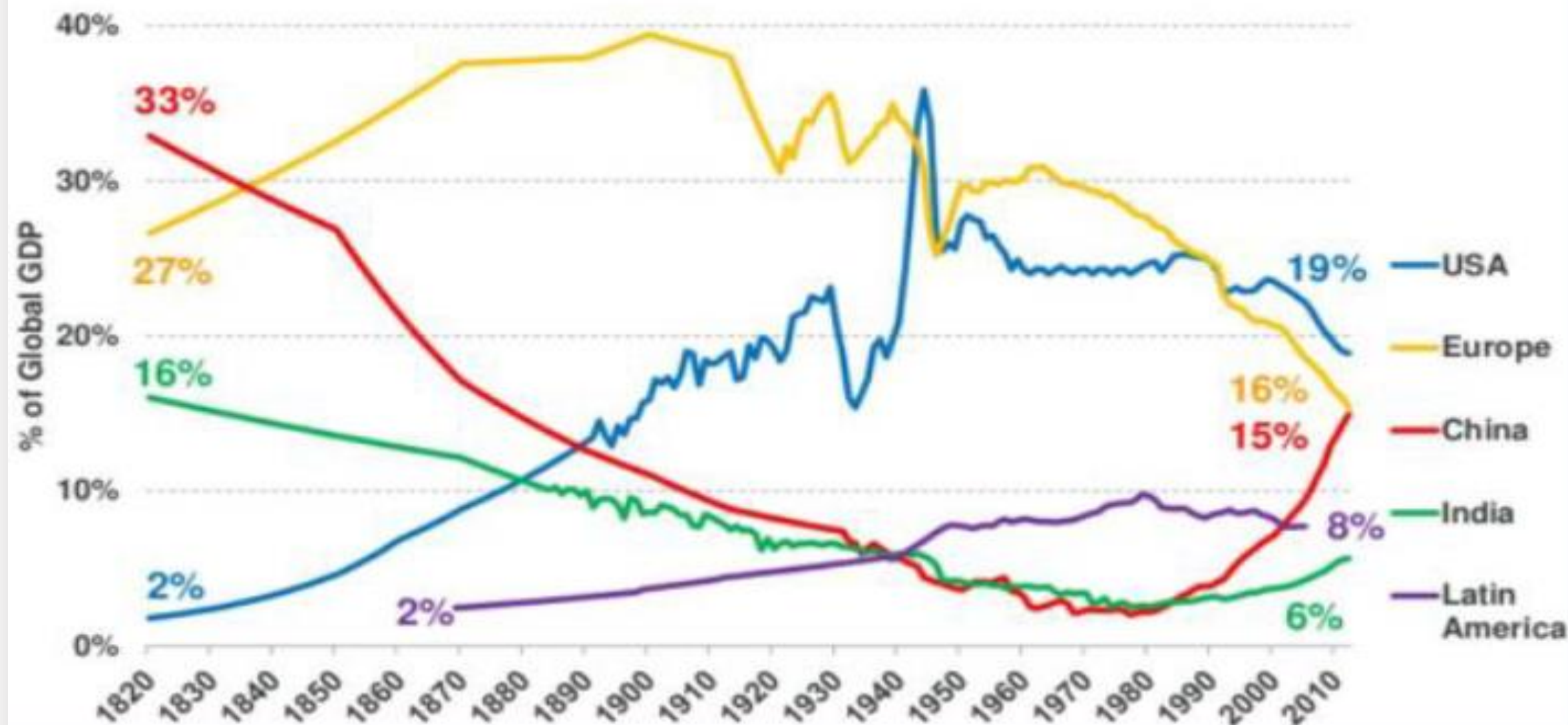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8.2	7.2	6.8	6.1	7.0
소비자물가상승률	4.5	3.6	3.4	3.4	4.1
재정수지/GDP	-7.1	-7.0	-6.4	-7.5	-7.2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2019)

- 2018년까지 인프라 투자 증가 및 제조업 수요 회복으로 인해 7%대 경제성장
- 최근 내수 진작을 위해 정책금리 인하
- 만성적 재정적자의 타파를 위한 재정건전화 노력
- 모디노믹스, 개혁, 개방을 통한 지속가능 경제성장 추구
- GST 세입 증대를 통해 인프라 등 투자여력 확보
- 기업경영여건 대폭 개선, 63위로 급부상

2. 인도

[그림 2-2] 글로벌 경제에서 인도의 위상



자료: KPCP

[표 2-2] 우리나라와의 관계 단위: 백만 달러, 건

무역현황	2016	2017	2018	주요 품목
수출	11,596	15,056	15,606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패션잡화, 합성수지
수입	4,189	4,948	5,885	석유제품, 알루미늄, 합금철, 정밀화학원료
투자현황	2016	2017	2018	2019년 6월말 누계
신규법인 수	55	113	118	1,165
투자금액	336	516	1,053	6,144

국제경제

[표 2-3]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f	2020 ^f
경상수지	-121	-382	-656	-450	412
경상수지/GDP	-0.5	-1.4	-2.4	-1.5	-1.3
상품수지	-1,075	-1,481	-1,867	-1,717	-1,680
상품수출	2,686	3,041	3,321	3,434	3,632
상품수입	3,761	4,522	5,188	5,151	5,312
외환보유액	3,366	3,851	3,698	4,148	4,288
총외채	4,713	5,297	5,729	6,215	6,760
총외채잔액/GDP	20.6	20.0	21.1	21.2	21.1
D.S.R.	9.0	9.1	9.3	10.0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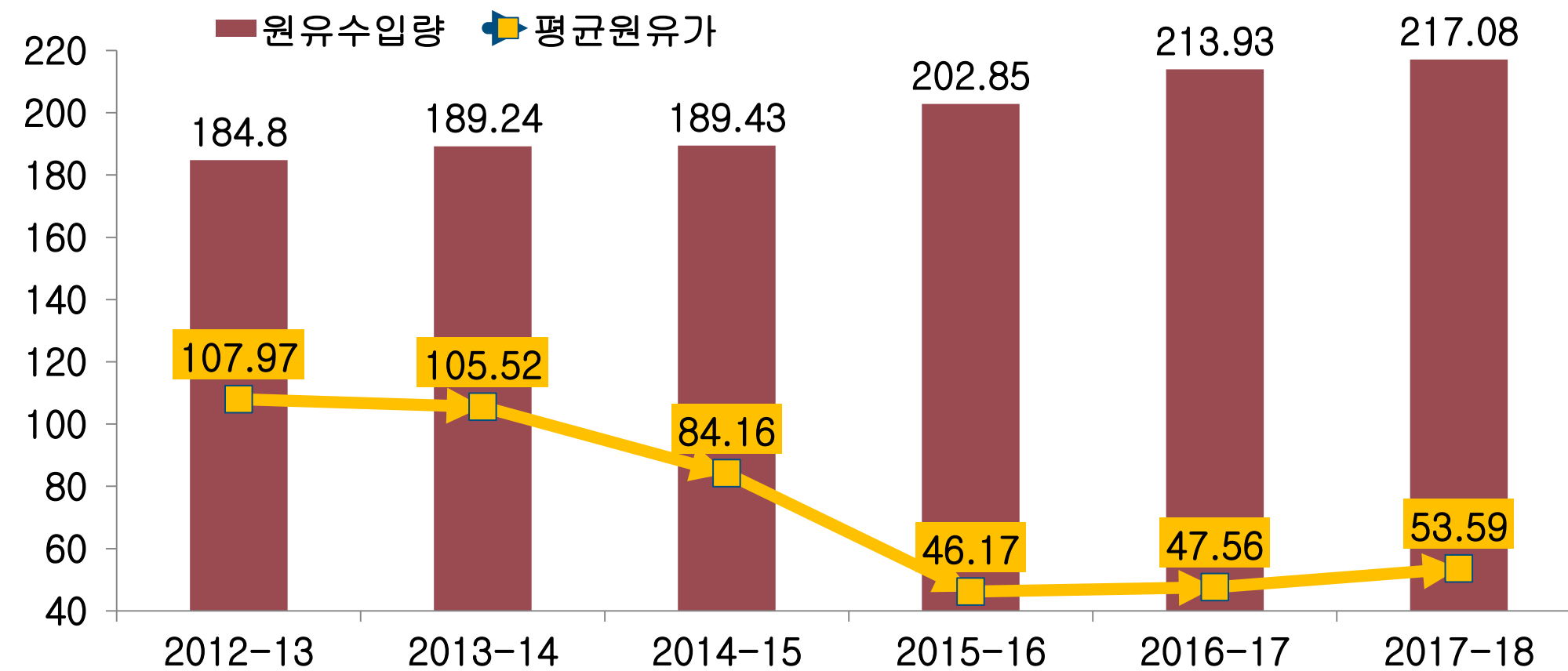
자료: IMF, EIU, OECD

- 국제유가 상승 > 원유수입액 증가 > 상품수지 적자 증가
- '12년 -2,015억 달러에서 '16년 -1,075억 달러로 개선
- '18년 국제유가 회복, 원유수입액 증가에 따라 -1,867억 달러로 다시 증가
- 세계 3위 원유소비국(4.4백만 배럴/일), 원유수요의 약 80%를 수입에 의존 : 경제성장 지속으로 원유수입량 꾸준히 증가

2. 인도

국제경제

[그림 2-3] 원유수입량 및 국제유가 추이



자료: 인도 석유천연가스부

- 미국의 이란 원유수출 제재조치는 인도의 에너지 수급에 부정적 영향
- 루피화 결제와 지리적 요건으로 원유수입의 12%를 이란에 의존
- “국제유가 10% 상승시 GDP 0.15% 감소, 소비자물가 0.2% 상승” (인도 중앙은행)
- 사이클론 등 기후 변화로 인한 불리한 환경

정치·사회 동향

인도국민당(BJP) 2019년 총선 압승,
모디 총리 2024년까지 재집권

카스트 제도의 폐해 등으로 인한 불만 속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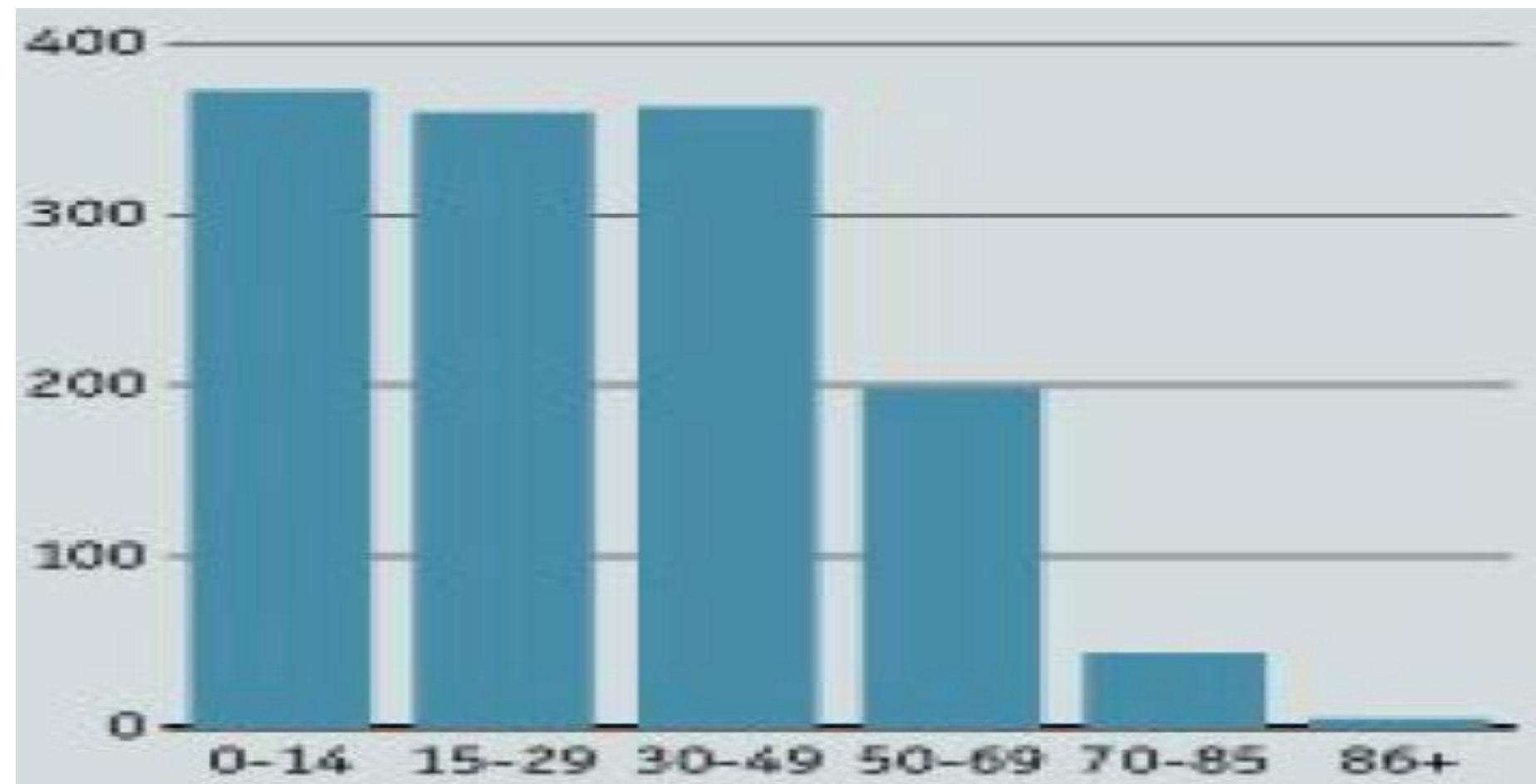
모디 행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 발생

재집권으로 정부는 친시장, 개혁정책 추진 지속 전망

2. 인도

정치·사회 동향

[그림 2-4] 연령별 인구 분포 단위: 백만 명



자료: EIU

- **세계 2위 인구대국, 절반 이상이 24세 미만**
- 약 13.5억 명(2019년 추정)의 인구 보유
- “2024년 중국을 넘어 세계 1위 인구대국 전망” (UNDESA)
- 인구의 65%가 35세 미만
-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8.5억 명 : 성장잠재력 풍부

국제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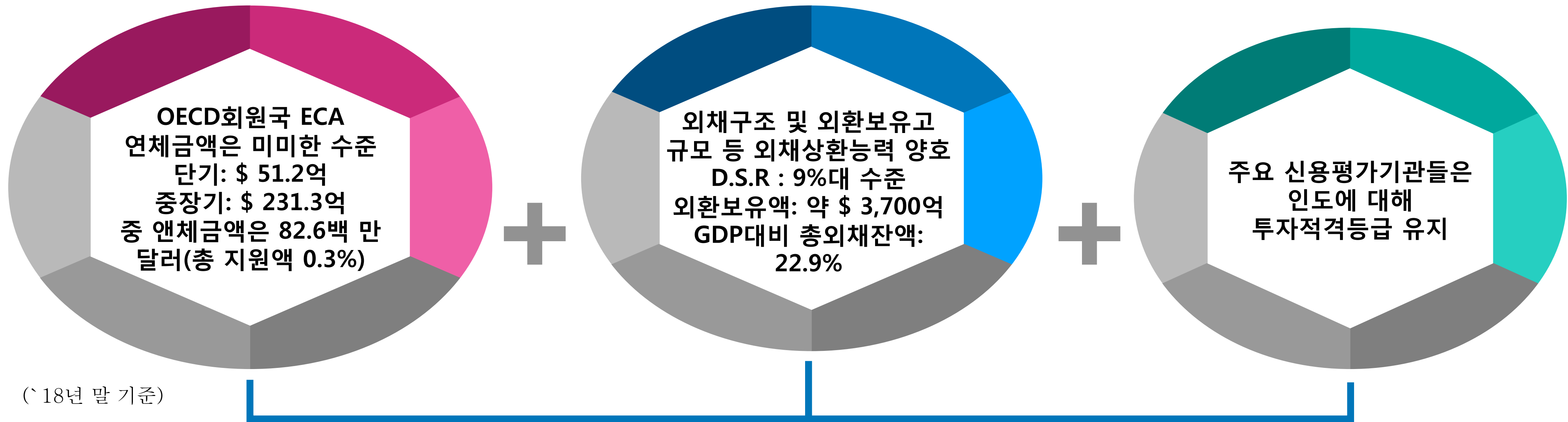
[그림 2-5] 테러 발생 지역



- **최근 파키스탄과 카슈미르 지역 분쟁 격화**
- 인도령 카슈미르의 특별지위 취소 대통령령 발표
- 이에 대한 파키스탄의 반발, 갈등이 촉발될 우려 존재
-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일본 등 주변국과 관계 강화

2. 인도

외채상환태도 & 국제시장평가



[표 2-4]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3등급 (2019.06)	3등급 (2018.06)
Moody's	Bbb2 (2019.04)	Bbb2 (2017.11)
Fitch	BBB- (2019.04)	BBB- (2018.04)

2. 인도

주요 산업

자동차 산업

- GDP의 7% 이상, 제조업의 약 45%를 점유
- 글로벌 경기침체로 판매량이 전년 대비 29.1% 감소
- 인구 및 중산층 증가로 자동차 시장 성장세 지속 전망(세계 4위 규모)

IT 산업

- GDP의 7.9%를 점유
- '10년 740억 달러 > '18년 1,670억 달러로 성장
- 세계 최대의 IT 인력 보유 : 프로그래밍 ,하드웨어 분야에 총 372.3억 달러의 FDI 유입 (19년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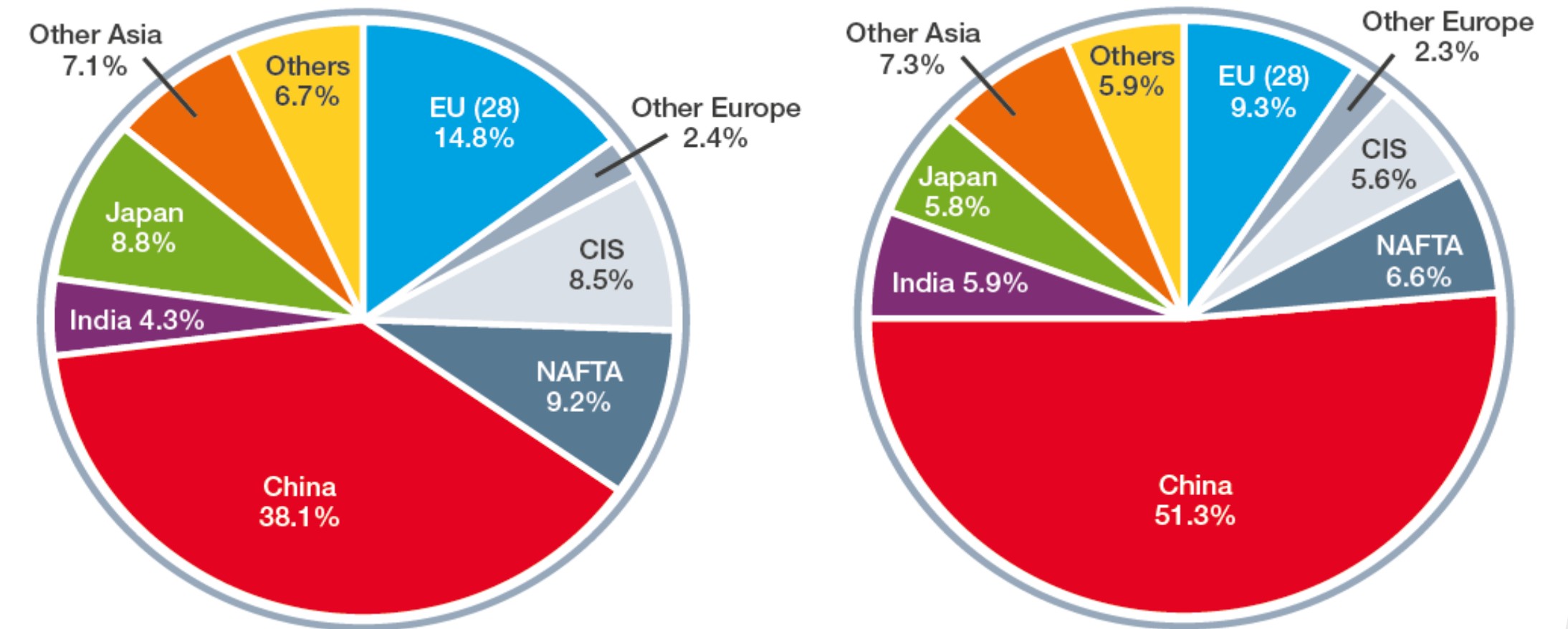
건설업

- GDP의 약 11%를 점유
- 3,300만 명 고용, 매년 약 1조 달러 규모의 주택 및 인프라 건설로 성장세 지속
- 정부는 '바라트말라 도로 개발 계획' 등 인프라에 6조 루피(892억 달러) 투자 : 전년대비 20.9% 증가

[표 2-5] 세계 주요국 철강 생산량(2018) 단위: 백만 톤

국 가	2018년		2017년	
	순위	생산량	순위	생산량
중 국	1	928.3	1	870.9
인 도	2	106.5	3	101.5
일 본	3	104.3	2	104.7
미 국	4	86.6	4	81.6
한 국	5	72.5	6	71.0

[그림 2-6] 국가별 철강 생산량 점유율



자료: 세계철강협회

2. 인도

외국인투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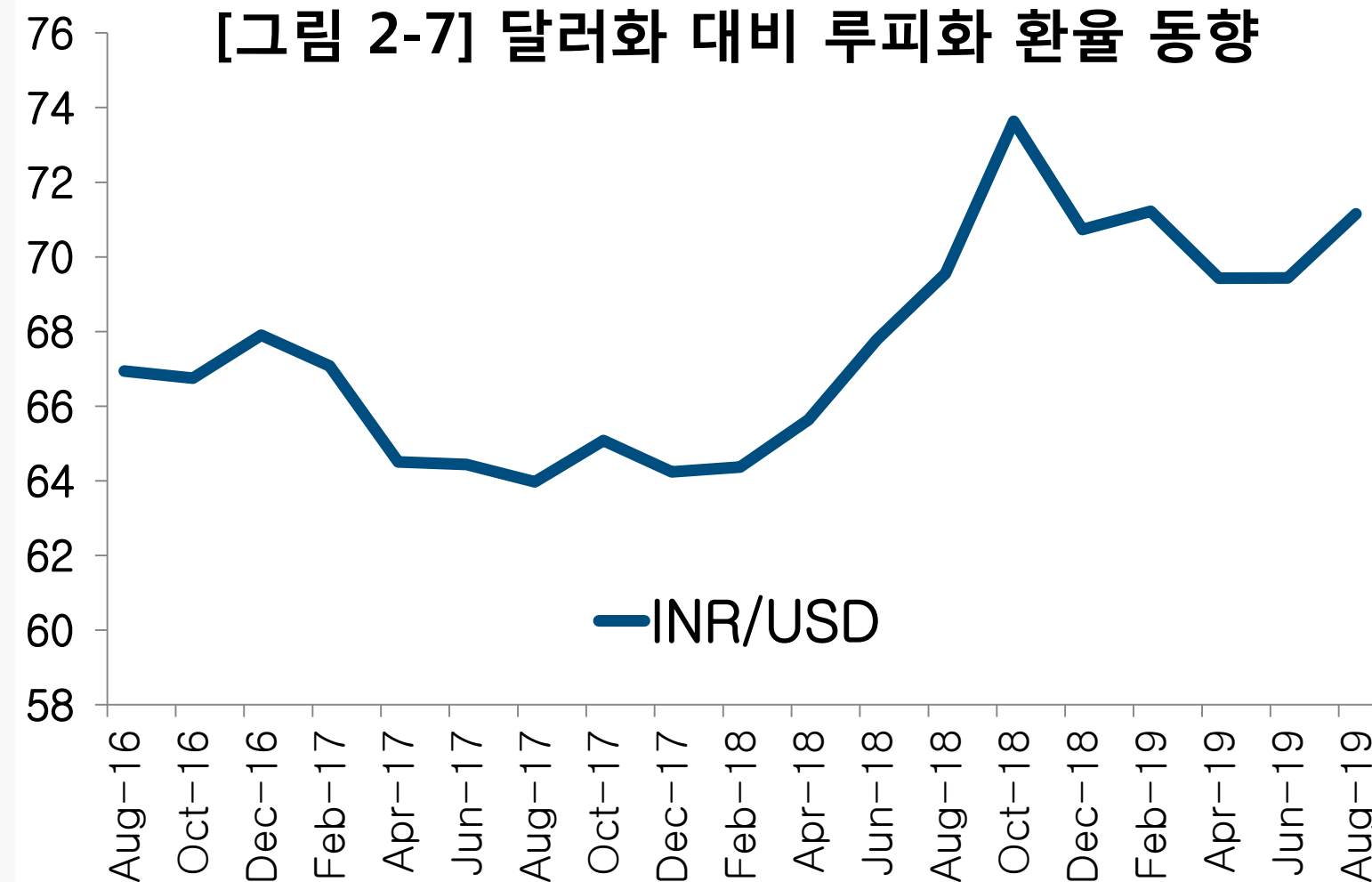
-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및 투자유치 전략 지속 추진
- 제조업 비중을 2022년까지 2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공장 운영비용 절감 및 경영환경 개선 도모
- 산업별 FDI 규제 완화 결과 최근 유입액이 증가 추세이며 향후 5년 간 지속 전망

'19~22년 FDI 유입 700억 달러 전망

: 삼성전자 뉴델리 노이다 공장 인수, 월마트의 온라인 유통업체 Flimkart 지분 인수 등 FDI 사례

외국인투자환경

외환제도



자료: IFS

- 외환관리법(FEMA)에 의해 규율, 관련 규제의 승인은 인도 중앙은행이 담당
- 동법은 인도 전역은 물론 인도 내의 거주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인도 외의 모든 지점, 사무소 및 시설에도 적용
- 대외거래 및 지불에 규제를 가하며, 외부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도 영향
- 연락사무소는 이익금 송금 불가(청산하는 경우에만 송금 가능)
- 기타 지점 및 프로젝트 회사는 세금 납부 후에 수익금 및 배당금 송금 가능
- 외환거래는 허가된 은행을 통해서 가능, 거래 목적 및 증빙자료의 제출 요구

노동제도

- 노동법은 정규직만 적용,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양산
- 100명 이상 고용 기업은 폐업, 해고 전에 정부의 사전 허가 필요
- 교통, 섬유, 금융 등의 노조에서 특히 정치적 성향이 강함
- 노조설립은 1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1/10 이상의 동의 필요
- 최저임금법에 따라 5년마다 최저임금 인상 (뉴델리는 일 534루피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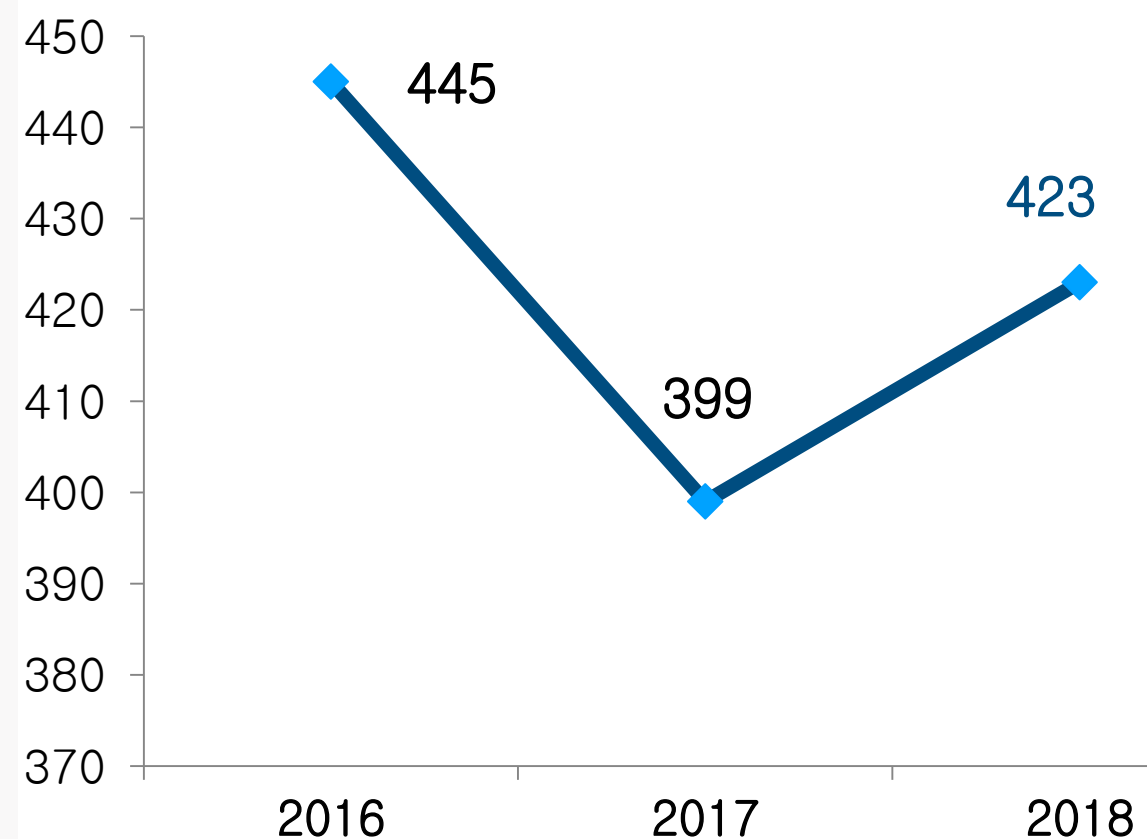
노동시장
경직

노동조합
강함

2. 인도

FDI 유입

[그림 2-8] 인도 FDI 유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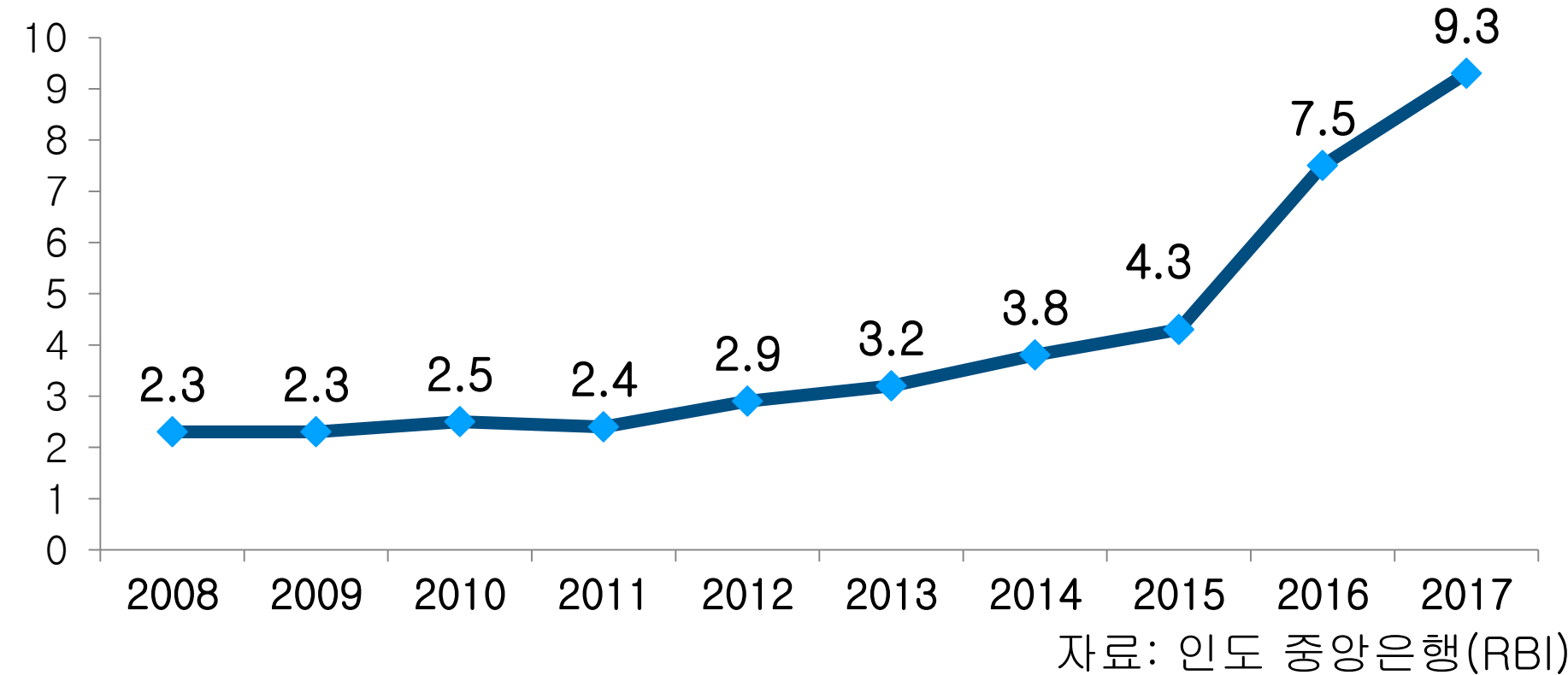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9

외국인투자환경

금융제도

[그림 2-9] 인도 은행권의 부실자산 비중



- 금융시장 진출 시 중앙은행의 승인 필요
- 화폐개혁, 세제개편 등으로 경제의 효율성이 제고되었으나, 급속한 금융성장의 부작용으로 은행권 부실자산 증가
- 대출 및 외화대출 규제 지속
- 역외사업차관(ECB)은 외화 또는 루피화 도입 가능, 평균만기 최소 3년 이상, 기준금리 +450bp p.a., 조기상환수수료율 및 연체이자율은 2.0% 범위 내 수준
- 부동산 투자, 자본시장 투자, on-lending 대출, 운영자금, 루피화 대출 상환 목적의 ECB 차입은 금지, 회계연도 당 750백만 달러를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 사전승인 필요
- 인도계 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은 ECB에 보증 제공 불허

무역제도

- 다수의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
- 주요국과 FTA 및 한, 일과 CEPA 체결, 현재 RCEP, SAFTA 출범 추진 중
- 경상수지 적자 및 루피화 약세로 수출입 규제 지속

조세제도

- 내/외국기업 간 법인세 차등 부과
- 기존 40% 법인세율에 추가 부담금과 교육세를 추가 부담
- 내국기업 법인세 인하로 투자 증진
- 통합간접세(GST) 도입 : 간접세 통합

2. 인도

글로벌경쟁력지수

구분	순위	
	2018	2019
제도	47/140	59/141
인프라	63/140	70/141
ICT도입	117/140	120/141
거시경제 안정성	49/140	43/141
보건	108/140	110/141
기술(교육)	96/140	107/141
상품시장	110/140	101/141
노동시장	75/140	103/141
금융제도	35/140	40/141
시장규모	3/140	3/141
기업 역동성	58/140	69/141
혁신 개발	31/140	35/141
종합순위	58/140	68/141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기업경영여건

구분	순위	
	2018	2019
창업	137/190	136/190
건축인허가	52/190	27/190
전력공급	24/190	22/190
재산권등록	166/190	154/190
자금조달	22/190	22/190
소액투자자보호	7/190	11/190
조세납부	121/190	115/190
대외무역	80/190	68/190
계약이행	163/190	163/190
사업청산	108/190	52/190
종합순위	11/190	63/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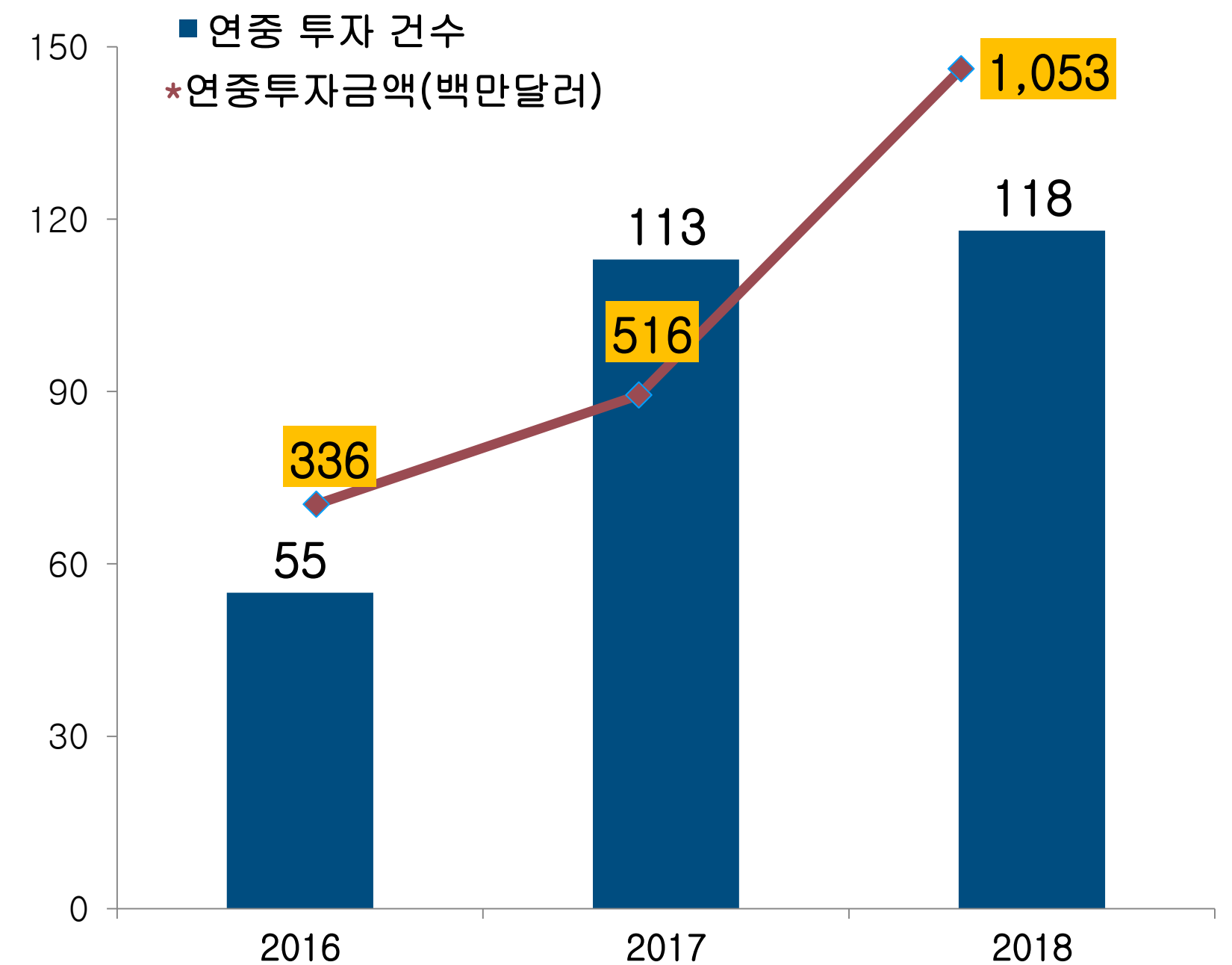
자료: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투자건수 누계: 1,165건
- 투자총액 누계: 6,144백만 달러

*투자누계는 2019. 6 기준 전체 누계 실적

외국인투자 동향

[그림.2-10] 우리나라의 대 인도 직접투자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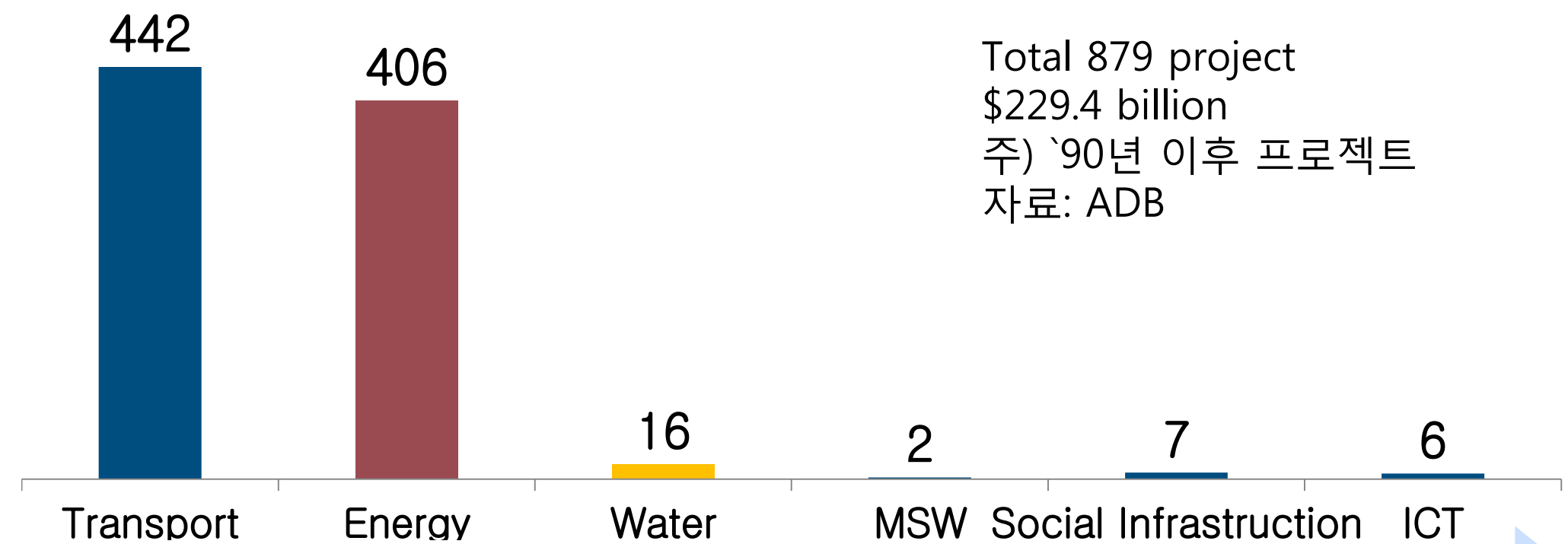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 '05~'18년은 해당연도 실적

2.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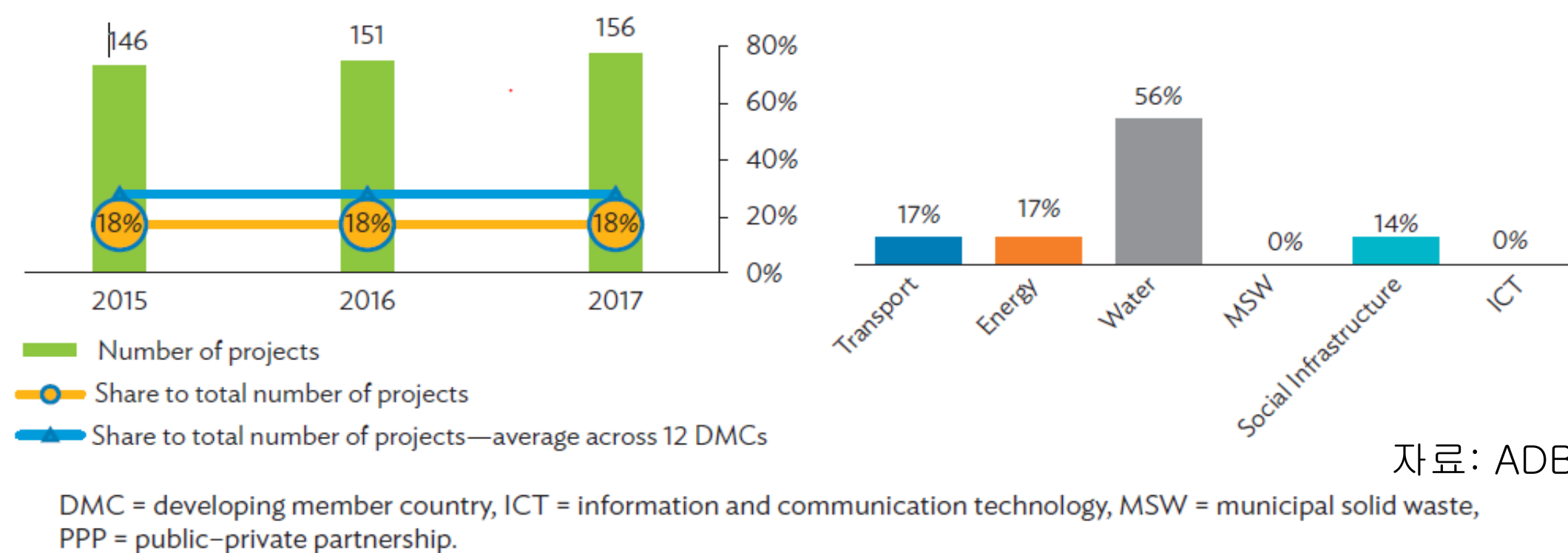
PPP 개황

- 외국인투자는 '17년에 증가했으나 누적점유율은 약 18% 수준... 주된 영역은 용수공급, 교통 및 에너지 분야
- 통합된 PPP 법령은 미비하나 PPP 체계는 일부 주 정부의 여러 단계 규정
- HAM 및 Toll-Operate-Transper 등 새로운 PPP 모델의 규범화 통해 체계를 강화하는 조치와 ADB에서 지원 중
- 헌법, 연방 및 주의 권한, 책임 구분 : 일부 지역은 인프라와 관련하여 공공 영역의 민간 투자를 포함하는 명확하고 독자적인 법 체계 적용
- 의회는 Union List에 등재된 항만, 공항, 철도, 고속도로, 내륙수로, 통신, 유전, 광물자원, 등의 문제와 관련된 입법 수행

[그림 2-12] 금융 종결 PPP 프로젝트 분야별 투자규모



[그림 2-11] 1990~2017년 외국인투자자 참여 프로그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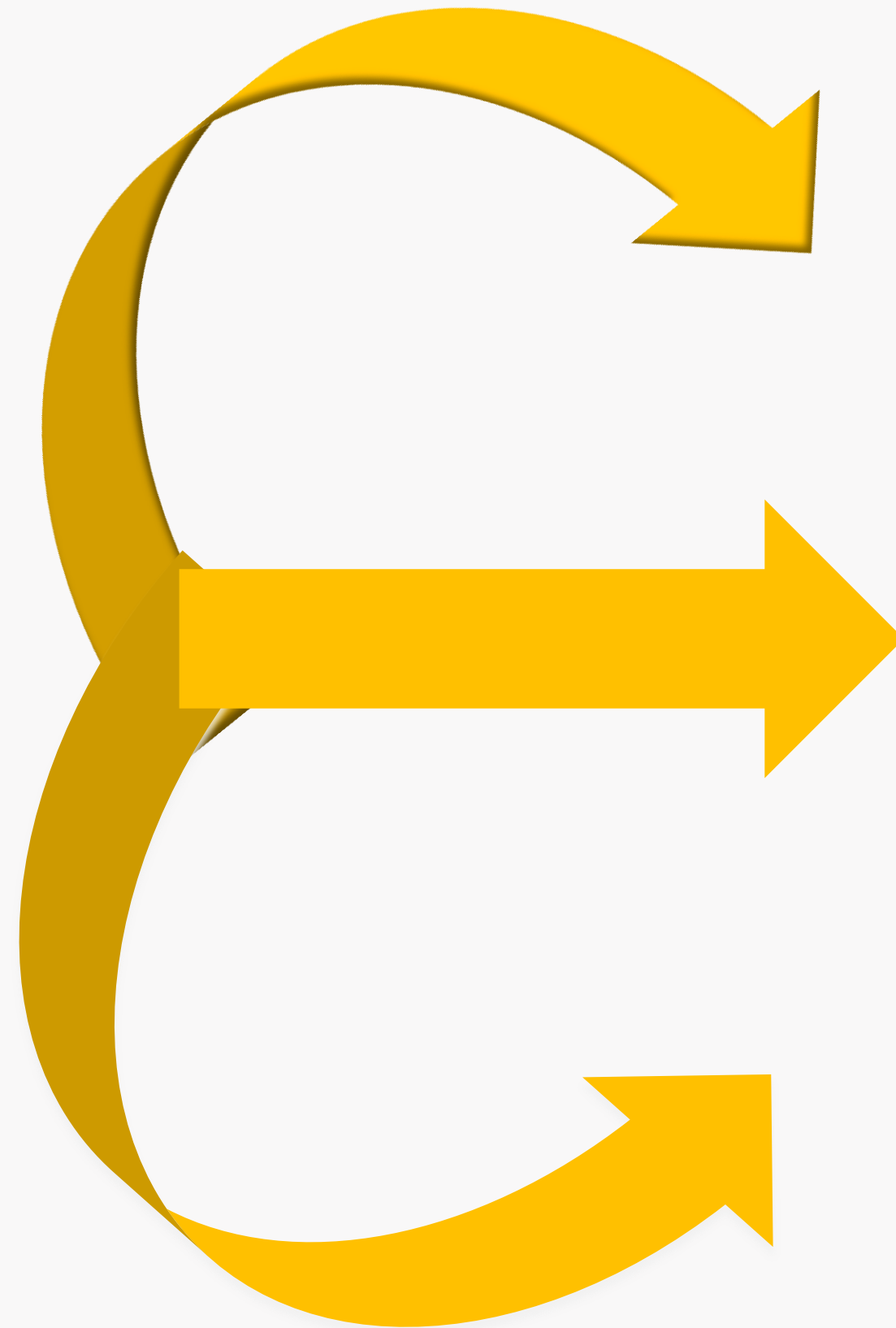
- 교통(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용수공급 및 수처리, 폐기물, 에너지(발전 및 송배전, 석유, 천연가스), 정보통신기술, 사회 인프라 등 영역에서 추진 가능
- PPP 가이드라인의 규범화 및 프로젝트 승인은 중앙정부 부처의 공공 영역이 지원 및 담당
- 연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 유지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향후 PPP 프로젝트의 추진이 필요한 상황
- '17년 통합부가가치세(GST) 개편과 세수 증대로 정부의 투자여력 확보가 가능해져 장기적 인프라 개발 시장 확대에 긍정적 전망

2. 인도

인도의 PPP 도입



- 남아시아 지역 주요 PPP 시장으로 부상
- FDI 유치를 위한 절차 간소화(자동승인, Automatic Route 도입)



PPP 관련 기관

- **PPP Cell**
 - PPP 관련 정책 문제 담당 특수조직
 - 사업타당성 분석, 정부기관 협업, 조달, 프로젝트 운영과 관리 등의 업무를 포괄함
- **PPP 평가위원회(PPPAC, Appraisal Committee)**
 - 중앙정부 차원의 프로젝트 승인 업무 담당
 - 프로젝트 규모 25억 루피(국토개발계획 50억 루피) 이상인 경우 PPPAC 평가 및 승인 대상
- **IIPDF(India Infrastructure Project Development Fund)**
 - 인도 재무부 산하 조직으로, 프로젝트 개발 지원

2. 인도

[표 2-6] 각 주별 PPP 법령

지역	규정
안드라프라데시	Andhra Pradesh infrastructure dev. Enabling act 2001
아삼	Assam policy on PPP infrastructure development
비하르	Bihar infrastructure development enabling act 2006
차티스가르	Guideline for formulation, appraisal & approval of PPP projects in Chattisgarh, 2013
고아	Goa policy on PPP
구자라트	Gujarat infrastructure development act 1999 Gujarat state viability gab funding scheme, 2007
하리아나	Haryana PPP policy
카르나타카	Karnataka infrastructure policy 2007 amended in 2015, guidelines for procurement of PPP projects through the Swiss challenge proposals route, 2010
케랄라	Policy for PPP in Kerala, 2014
오리사	Orissa PPP policy, 2007
펀자브	Punjab infrastructure dev. And regulation act 2002
라자스탄	Rajasthan infrastructure dev. Fund with an initial corpus of \$500,000 Social sector viability gab funding scheme, 2007
타밀나두	Tamil Nadu infrastructure dev. Act, 2002
우타르프라데시	Uttar Pradesh infrastructure and industrial investment policy, 2002
우타르칸트	Uttarkhand PPP policy, 2002
웨스트벵골	West Bengal policy on infrastructure dev. Through PPP 2003
마디아프라데시	Scheme and guidelines for Madhya Pradesh project dev. fund, 2009 Guidelines for PPP, 2009 PPP policy (draft stage)

[그림 2-13] PPP 사업의 외국인 지분 참여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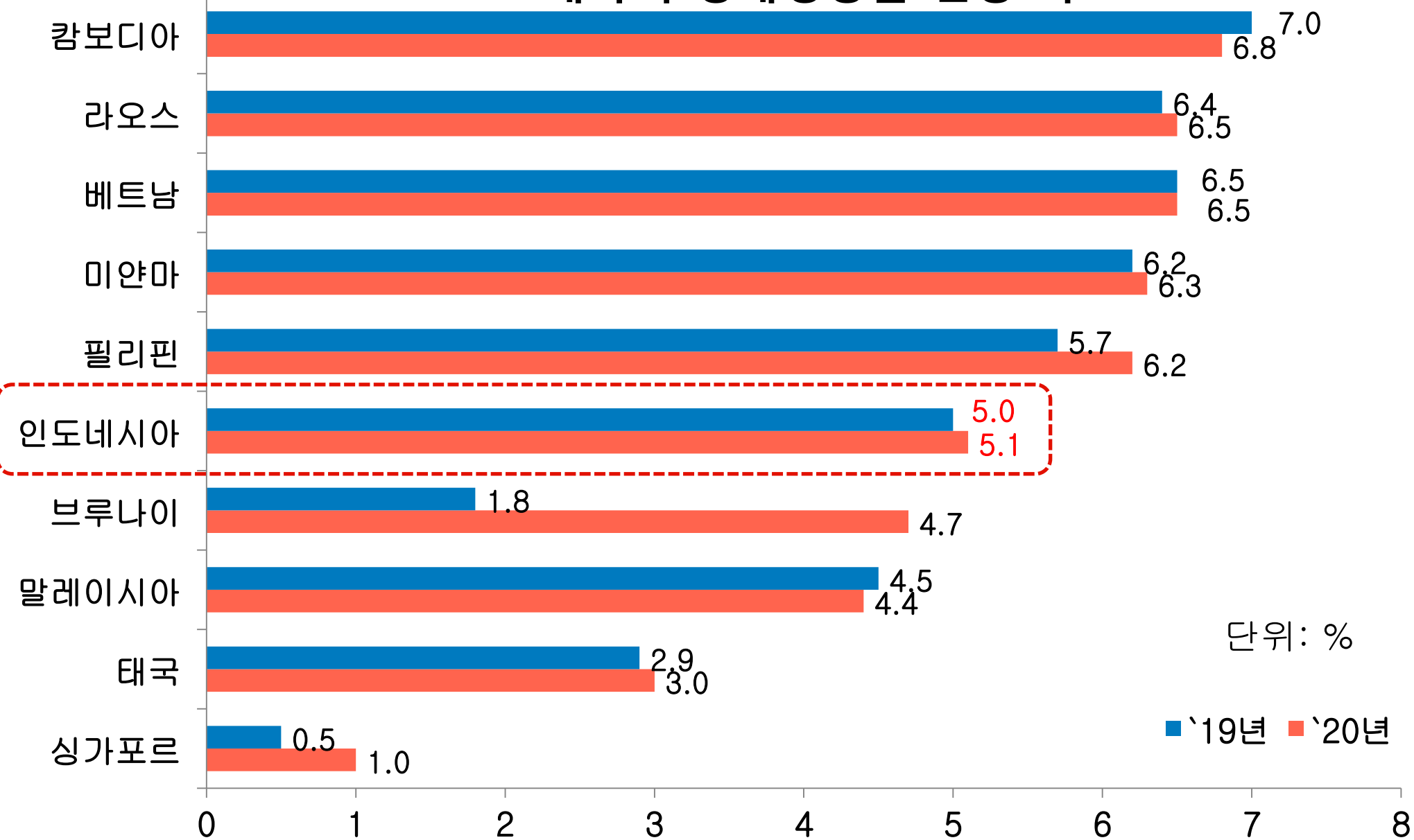
	2016	2017		2016	2017
Transport			Energy		
Roads	100%	100%	Power generation	100%	100%
Railways	100%	100%	Power transmission	100% ^a	100%
Ports	100%	100%	Power distribution	100%	100%
Airports	100%	100%	Oil and gas	100%	100%
Water and wastewater			Municipal solid waste	100%	100%
Bulk water supply and treatment	100%	100%	Social infrastructure		
Water distribution	100%	100%	Healthcare infrastructure	100%	100%
Wastewater treatment	100%	100%	Healthcare services	100%	100%
Wastewater collection	100%	100%	Education infrastructure	100%	100%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ducation services	100%	100%
Fixed line infrastructure	100%	100%	Government buildings	0%	0%
Fixed line services	100%	100%	Prisons and correction centers	0%	0%
Wireless/mobile infrastructure	100%	100%	Social housing	0%	0%
Wireless/mobile services	100%	100%	Sport and leisure facilities	100%	100%

자료: ADB

3. 인도네시아



ASEAN 10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비교



자료: IMF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국내경제

[표 3-1]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f	2020 ^f
경제성장률	5.0	5.1	5.2	5.0	5.1
소비자물가상승률	3.5	3.8	3.2	3.2	3.3
재정수지/GDP	-2.5	-2.5	-1.8	-1.9	-1.8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2019)

- 정부지출과 기업 투자 증대로 5% 대 경제성장세 지속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세가 지속,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 정부 재정지출이 확대될 예정이나, 세수 증대로 재정수지 적자 점진적 축소 전망

3. 인도네시아

[표 3-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f	2020 ^f
경상수지	-170	-162	-310	-273	-277
경상수지/GDP	-1.8	-1.6	-3.0	-2.5	-2.3
상품수지	153	188	-4	55	67
상품수출	1,445	1,689	1,807	1,585	1,622
상품수입	1,292	1,501	1,812	1,531	1,555
외환보유액	1,109	1,241	1,148	1,046	981
총외채	3,210	3,544	3,787	4,116	4,484
총외채잔액/GDP	34.4	34.9	37.0	37.0	37.2
D.S.R.	14.8	11.9	8.9	10.5	11.3

자료: IMF, EIU, OECD

- **상품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지속**
- 2018년 상품수입이 전년대비 20.7% 증가하며 상품수출 증가세(7.0%)를 초과하여 상품수지 적자 전환
- 상품수지 적자는 전체 수입액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자재/중간재 수입이 최근 총투자 확대 및 인프라 확충에 따라 증가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

국제경제

[표 3-3] 주요 ASEAN 국가별 경제지표 비교 단위: 억 달러, %

구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GDP 규모	10,225	3,586	5,049	2,413	3,309
총수출/GDP	21.3	72.4	67.6	107.8	31.0
상품수출/GDP	17.7	57.5	49.7	101.0	15.7
FDI/GDP	1.3	0.8	-1.4	6.2	1.8

자료: IMF, EIU, OECD

-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출 비중**
- 인접국가 대비 경제 규모는 큰 편이나, 총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상품수출은 GDP 대비 18%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낮은 수출경쟁력의 원인은 원자재에 대한 관세, 낮은 노동생산성, 비효율적 보조금 등으로 분석됨**
- 수출 증대, FDI 유입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외화 수급원을 확보하는 노력 필요

3. 인도네시아

정치·사회 동향

- **Joko Widodo(조코위) 대통령의 연임으로 정치적 안정성 지속**
- 2019년 10월 공식 취임한 조코위 대통령은 경제성장 지속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 갈 전망
- 한편, 2기 내각 구성 결과 강력한 개혁보다는 정권의 안정성 확보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평가됨.
- **이슬람 극단주의, 분리독립 운동 등 테러 위협이 상존하며, 9월 법 개정 관련 대규모 시위 발생**
- 2019년 9월 보수적인 부패방지위원회 법 및 형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대규모 시위 발생

국제 관계

-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노선 추구**
- 독립 이후 특정 국가나 입장에 구속되지 않고 외국과의 협력 추구
- 조코위 행정부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확대를 외교관계에서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도 적극적
- **무역협정 체결 적극 추진**
- 2019년 1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희망

[표 3-4] 한-인도네시아 교역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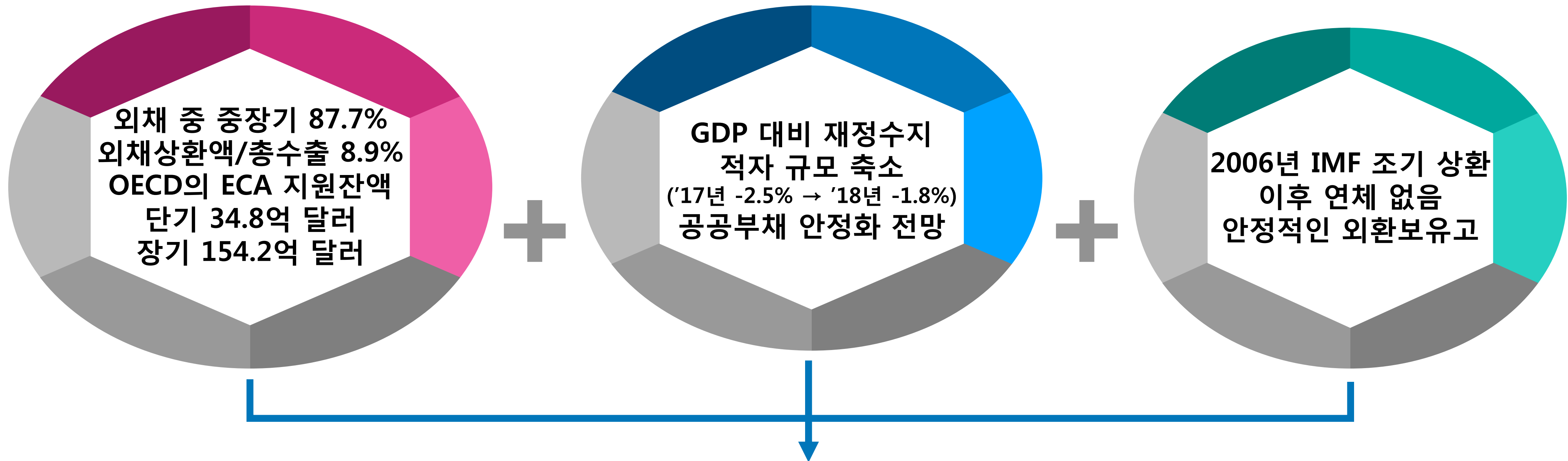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 품목
수출	6,609	8,404	8,833	석유제품, 철강판, 합성수지
수입	8,285	9,571	11,161	석탄, 천연가스, 동광, 의류

자료: 무역협회

3. 인도네시아

외채상환태도 & 국제시장평가



[표 3-5]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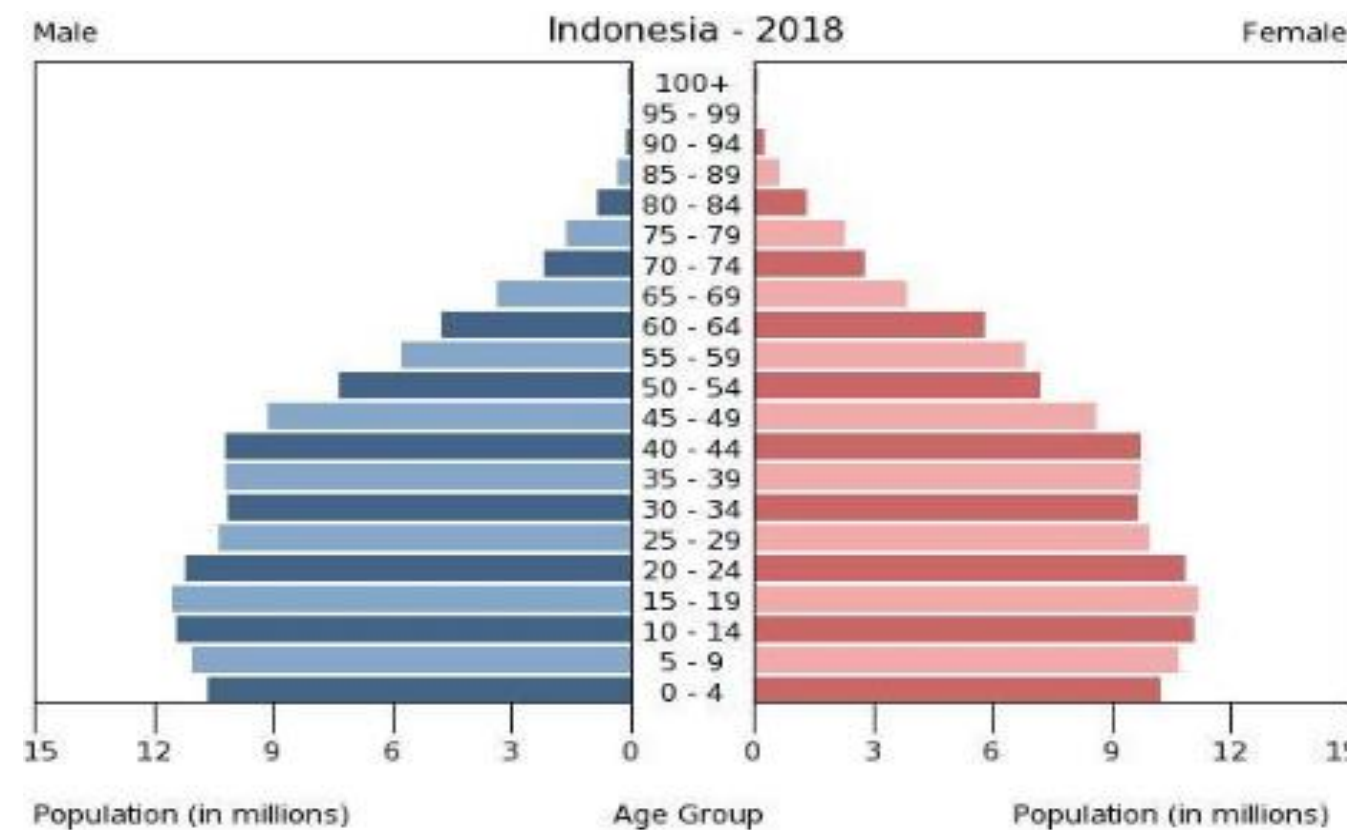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3등급 (2019.06)	3등급 (2018.06)
Moody's	Baa2 (2018.04)	Baa3 (2017.02)
Fitch	BBB (2019.03)	BBB (2018.09)

3. 인도네시아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자원 부국**
- 팜오일 세계 1위, 고무 세계 2위, 카카오 세계 3위, 커피 세계 4위 생산국이자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4위
- **젊은 인구대국**
- 2019년 추정 2.7억 명의 인구(세계 4위)가 거대한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인구의 약 절반이 30세 이하로 노동집약적 산업 발전에 유리

[그림 3-1] 인도네시아 인구 구조(2018)



자료: CIA World Factbook

주요 산업

- **섬유 봉제산업 : 유리한 조건 vs 대내외 제약**
- 2018년 인도네시아의 섬유 봉제산업은 매출액 180억 달러, 고용인구 약 300만 명으로 추산
- 최저임금 상승(2019년 8% 인상), 복잡한 투자승인 절차, 물류 인프라 부족, 높은 원자재 수입 의존이 산업 발전에 장애물
- **석유산업 : 매장량 고갈 및 설비 노후화로 생산량 감소 추세**
- 2018년 일평균 원유 생산량은 81만 배럴로 1990년대 이후 지속 감소 추세이며, 2003년 이후 원유 순수입국으로 전환
- 2026년까지 원유 정제능력 증대(200만 b/d), 환경규제 기준 대응 등 원유 생산능력 확충 및 정유설비 고도화를 위한 정유개발 마스터 플랜(RDMP) 추진 중
- **인프라 부문 : 대규모 프로젝트 자원 마련이 관건**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3,9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 자원 마련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 PPP 활성화 등 검토 중

3.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절차

• 외국인투자촉진법

- 2016년 5월 투자제한 업종 리스트가 네거티브 리스트로 개편, 관광/정보통신/보건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 확대
- 2018년 7월부터 모든 주요 인/허가에 온라인 일괄제출 시스템 도입 :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 외국인투자 기본 요건

- ① 네거티브 리스트의 외국인투자 금지업종이 아닐 것
- ② 투자자/주주의 인원이 최소 2명 이상일 것
- ③ 최소 투자액은 토지/건물 제외 100억 루피아, 최소 발행자본금은 25억 루피아(약 17.6만 달러)

• 외국인투자 절차

- 외국인이 1%의 지분이라도 보유할 경우 외자투자자로 간주하며, 외국인에게는 외자투자만 허용됨
- 외자투자자는 반드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최소 2명이 먼저 정부로부터 투자등록서를 받아야 함

외국인투자 우대조치

• 법인세 감면(2018 재무부령)

- 조세감면 승인을 받은 회사는 상업생산 개시일로부터 최소 5년부터 최대 20년까지 법인세 100%를 감면받고, 이후 2년간 50%까지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음

[표 3-6] 투자규모별 법인세 감면 기간

혜택 종류	투자규모(루피아)	혜택 기간	만기 이후
50% 면세	1,000억~5,000억	5년	2년 간 25%
	5,000억~1조	5년	
100% 면세	1조~5조	7년	2년 간 50%
	5조~15조	10년	
	15~30조	15년	
	30조 이상	20년	

자료: KOTRA

- 감면대상은 18개 선도 산업분야 : 금속(강철 또는 비강철) 생산업, 석유 및 가스의 정제업 및 석유화학 산업, 유·무기 기초화학 산업, 제작원료산업, 방사선, 전기 치료장비 제조업, 반도체 웨이퍼 등 부품 제조업 등

3.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환경

조세제도

- 법인세율 25% 수준 유지
- 가전, 고급자동차 등에 특별소비세 부과(실질적으로 10~125%)
- 전기차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관세 인하, 과표기준 변경 등 세제 개편

금융제도

- 2018년 5월 기준 은행권 대출규모는 전년대비 11.5% 증가, 2018년 말 기준 부실채권 비중은 2.4%
- 외투기업에 대한 역외대출은 중앙은행과 재무부의 사전 승인 및 현지 외국환은행을 통한 수취가 의무적

무역제도

- 신포괄무역법 제정(2014년) : 정부 주도의 관세율 부과 및 물량 규제로 수입 억제 노력
- 최혜국대우 관세율 인상(2015년) : 철강제품 최대 20%, 소비재와 최종재는 최대 50%까지 인상

외환제도

- 금융위기 방지를 위해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등 유·출입 규제 지속
- 루피아화 가치는 2019년 이후 안정세

노동제도

- 우수인력 부족 / 높은 임금상승률(8%)
- 사회보장관리공단에서 산재, 노후, 사망, 건강보험이 포함된 사회보장 프로그램 운영 중
- 근로관계 해지는 지역별 노동분쟁 조정위원회의 승인 필요

3. 인도네시아

글로벌경쟁력지수

구분	순위	
	2018	2019
제도	48/140	51/141
인프라	71/140	72/141
ICT도입	50/140	72/141
거시경제 안정성	51/140	54/141
보건	95/140	96/141
기술(교육)	62/140	65/141
상품시장	51/140	49/141
노동시장	82/140	85/141
금융제도	52/140	58/141
시장규모	8/140	7/141
기업 역동성	30/140	29/141
혁신 개발	68/140	74/141
종합순위	45/140	50/141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기업경영여건

구분	순위	
	2018	2019
창업	134/190	140/190
건축인허가	112/190	110/190
전력공급	33/190	33/190
재산권등록	100/190	106/190
자금조달	44/190	48/190
소액투자자보호	51/190	37/190
조세납부	112/190	81/190
대외무역	116/190	116/190
계약이행	146/190	139/190
사업청산	36/190	38/190
종합순위	73/190	73/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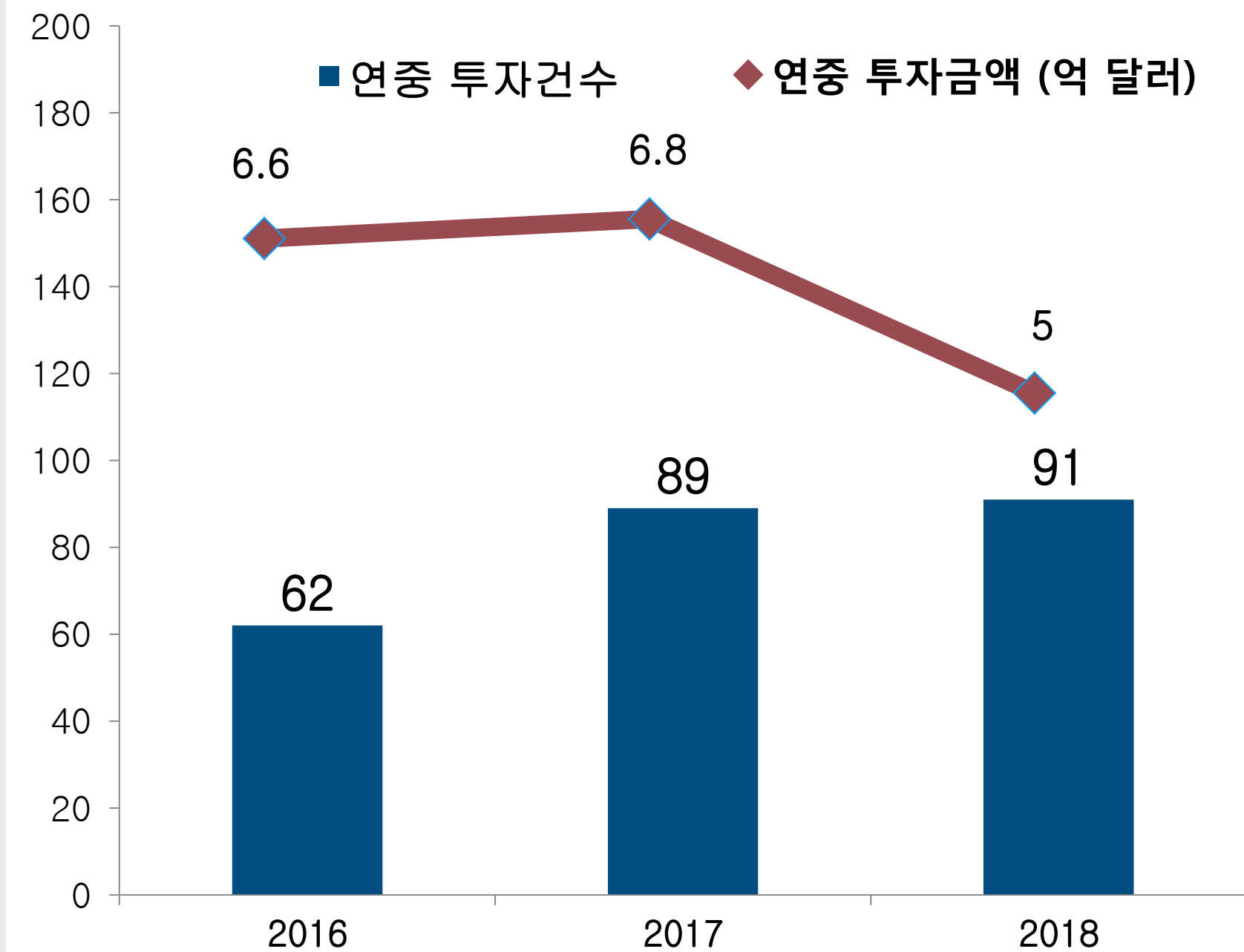
자료: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투자건수 누계: 2,219건
- 투자총액 누계: 112억 달러

* 2019. 6 기준

외국인투자 동향

[그림 3-2]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직접투자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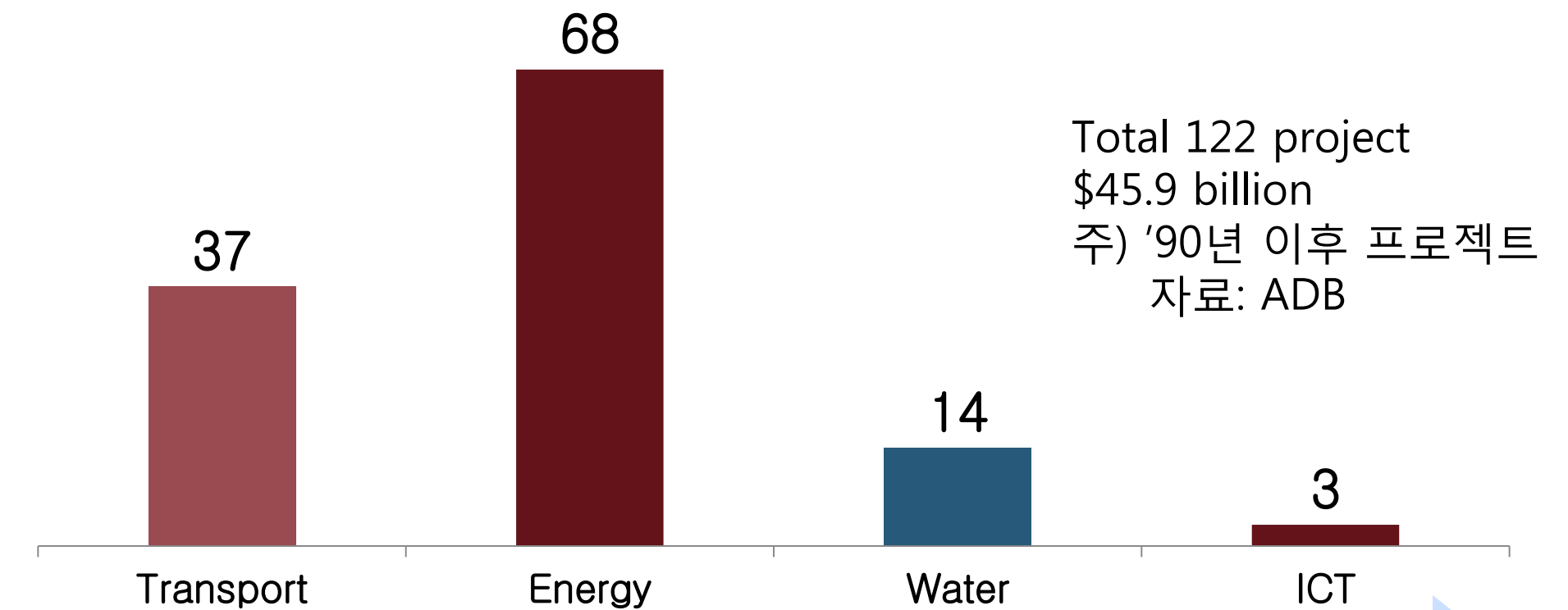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 '05~'18년은 해당연도 실적

3.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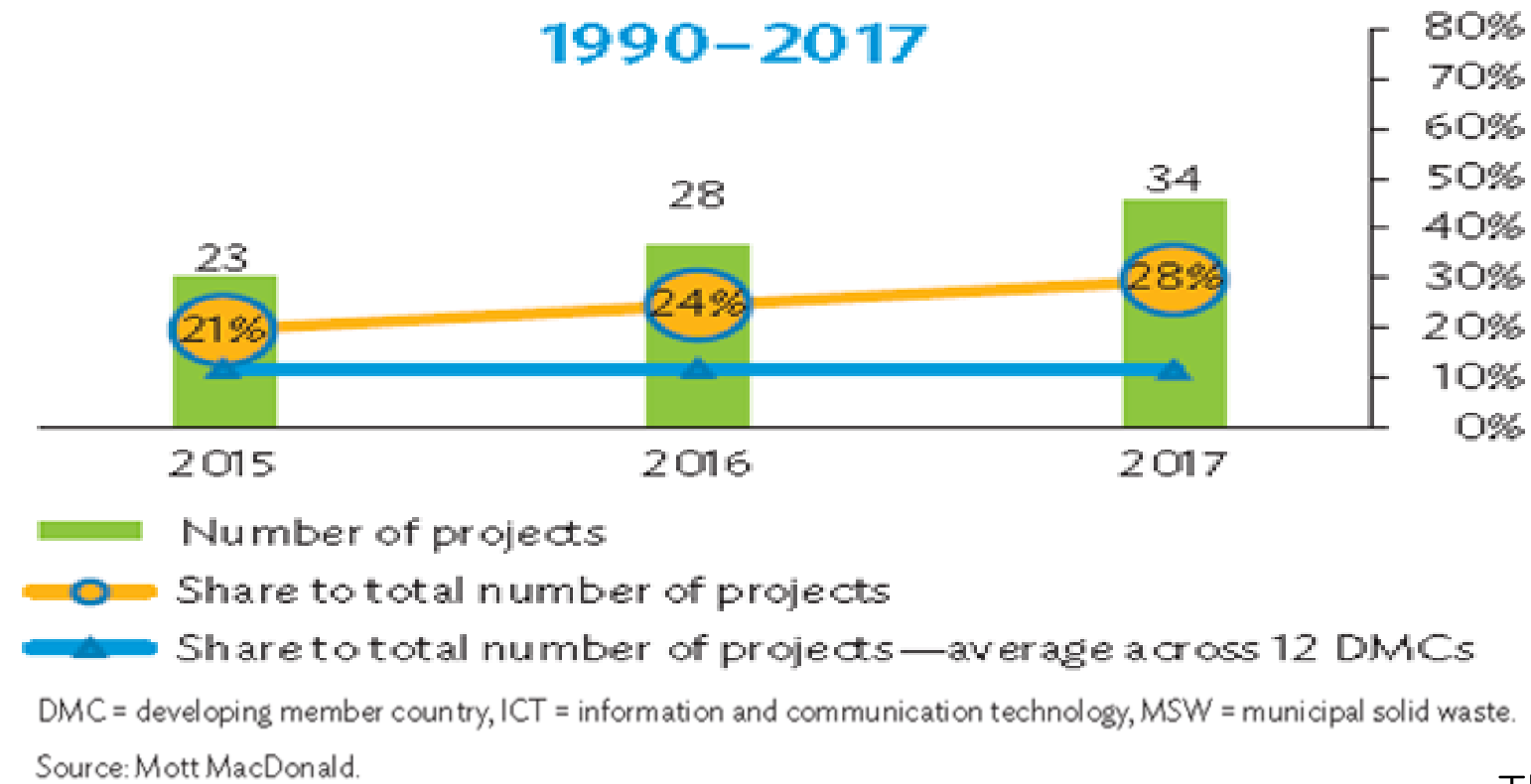
PPP 개황

- 1990년 이후 금융조건 확정 프로젝트는 122건
- 에너지 부문(68건)에 절반 이상의 프로젝트가 집중
- 2017년 기준 외국인이 사업주 또는 대주인 프로젝트는 각각 65건 및 33건이고, ECA 또는 국제금융기관 참여 사업은 34건으로 개도국 평균 상회

[그림 3-3] 금융 종결 PPP 프로젝트 분야별 투자규모



[그림 3-4] '90~17년 누적 외국인투자자 참여 프로그램 현황



자료: ADB

- 과거 상당수의 PPP 프로젝트에서 토지수용 절차 지연으로 인한 차질이 발생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토지수용 절차 소요기간을 512일로 제한
- 계약 담당 정부부처의 관리능력 부족, 사업준비 및 승인 과정의 투명성 결여 등이 PPP 사업의 제약 요인으로 분류됨

3.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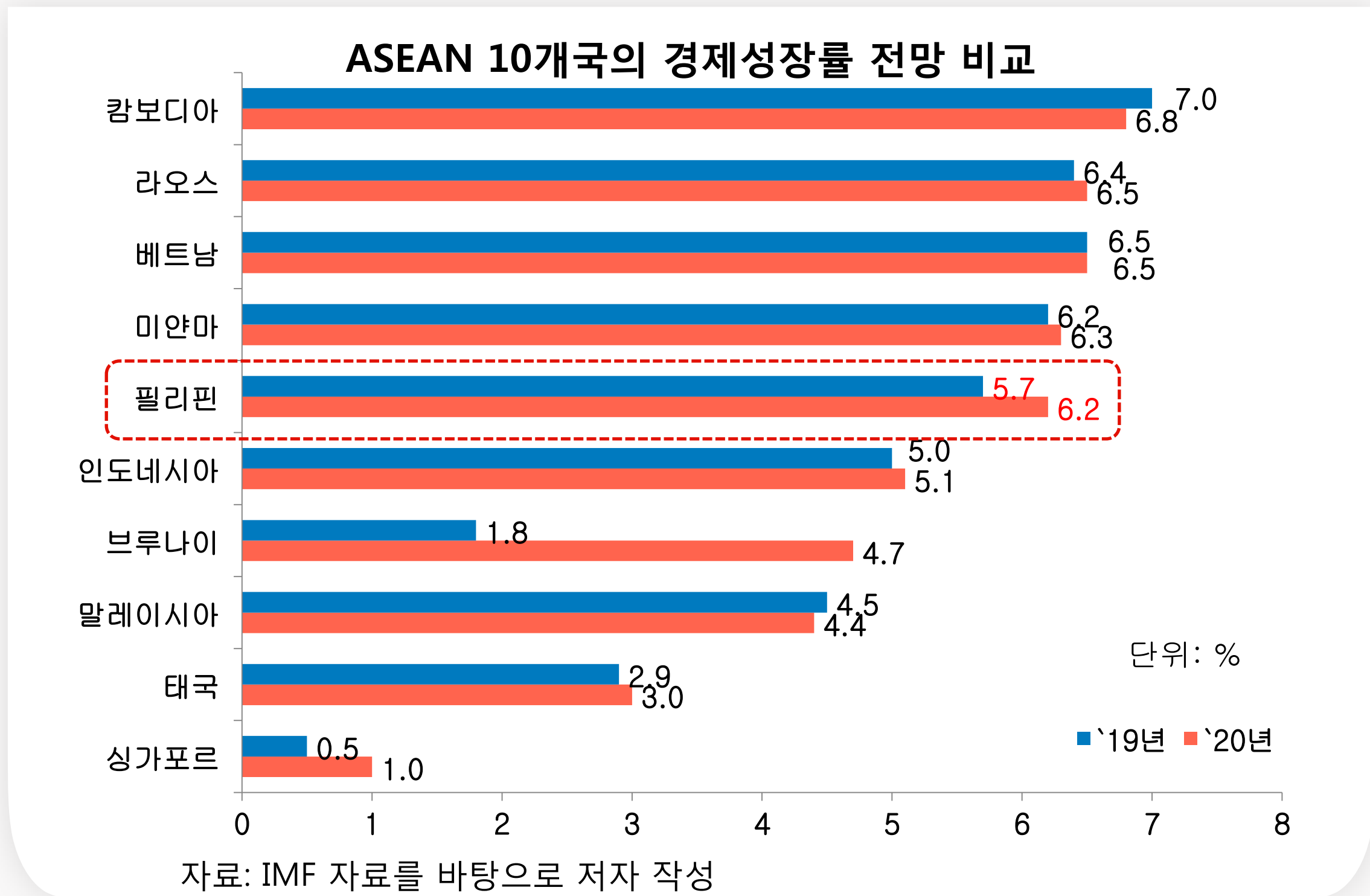
PPP 제도 개관

- **PPP 법령**
-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대통령령(Presidential Regulation No.38 of 2015), 국가개발기획부령(Bappenas Regulation No.4 of 2015) 등이 있음
- **PPP 형태 및 분야**
- 현 법령 하에서 PPP 계약 형태가 특별히 규정되지 않았고, 추진방식도 BOT, BOOT, O&M 등 다양함 / 분야 역시 교통, 에너지, 수자원, ICT, 사회적 인프라 등 제한사항이 없음
- **분쟁해결 절차**
- 계약서 외에 별도의 기준이 되는 분쟁해결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 합의에 실패할 경우 주로 싱가포르 중재 재판소의 결정을 따름
- **외국인투자자 지분 제한**
- 2017년 기준 에너지 부문은 석유·천연가스(75%) 외에는 외국인 지분을 제한이 없어 외국인투자자에 가장 많이 개방된 부문
- 교통운송 부문 중 철도, 항만, 공항은 49%의 외국인 지분을 상한이 존재하며, 여타 부문은 67~100%

[그림 3-5] PPP 사업의 외국인 지분 참여 한도

	2016	2017		2016	2017
Transport			Energy		
Roads ^b	100%	100%	Power generation ^c	100%	100%
Railways	49%	49%	Power transmission ^d	100%	100%
Ports	49%	49%	Power distribution ^e	100%	100%
Airports	49%	49%	Oil and gas ^f	75%	75%
Water and wastewater			Municipal solid waste^g	100%	100%
Bulk water supply and treatment	n/a	n/a	Social infrastructure		
Maximum allowed foreign ownership of equity in greenfield projects					
Water distribution	n/a ^h	n/a	Healthcare infrastructure ⁱ	67%	67%
Wastewater treatment	100%	100%	Healthcare services ^j	67%	67%
Wastewater collection	100%	100%	Education infrastructure ^k	67%	67%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ducation services ^l	67%	67%
Fixed line infrastructure	67%	67%	Government buildings ^m	67%	67%
Fixed line services	67%	67%	Prisons and correction centers	100%	100%
Wireless/mobile infrastructure	67%	67%	Social housing	100%	100%
Wireless/mobile services	67%	67%	Sport and leisure facilities ⁿ	67%	67%

4. 필리핀



국내경제

[표 4-1] 필리핀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6	2017	2018	2019 ^f	2020 ^f
경제성장률	6.9	6.7	6.2	5.7	6.2
소비자물가상승률	1.3	2.9	5.2	2.5	2.3
재정수지/GDP	-0.4	-0.4	-1.6	-1.1	-1.7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2019)

- 2019년 상반기 예산 승인 지연으로 경제성장률 하락했으나, 6%대 경제성장 회복 예상
- 기준금리 인하, 쌀 관세법,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안정화
- 필리핀 개발계획(PDP)에 따른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4. 필리핀

[표 4-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f	2020 ^f
경상수지	-1,199	-2,143	-8,729	-3,983	-6,205
경상수지/GDP	-0.4	-0.7	-2.6	-1.1	-1.6
상품수지	-35,549	-40,215	-50,972	-47,687	-50,621
상품수출	42,734	51,814	51,985	51,998	52,943
상품수입	78,283	92,029	102,958	99,686	103,564
외환보유액	71,853	71,598	69,382	76,584	76,697
총외채	74,763	73,098	86,100	86,300	86,500
총외채잔액/GDP	24.5	23.3	26.0	24.2	22.6
D.S.R.	8.6	7.2	8.0	7.9	7.6

자료: IMF, EIU, OECD

• 필리핀 수출개발계획(PEDP)

- 수출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5~17 필리핀 수출개발계획(PEDP) 결과 2017년 전년대비 수출증가율 목표치 달성에 성공(9.5% 증가)
- 2018. 6월 발표한 2018~22 PEDP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제조업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여 2017년 687억 달러 수준에서 2022년 1,2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 추진

국제경제

•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

- 원자재 수출 위주의 산업화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자본재와 소비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여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 기록

• 2016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 지속 중

-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BPO와 관광업에 따른 서비스수지, 해외근로자 송금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2002년부터 14년 연속 흑자를 기록
- 그러나 2016년 이후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로 전환

• 해외근로자 송금액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세계 4대 해외인력 송출국의 하나로, 해외근로자 송금액은 GDP의 10%에 달하여 필리핀 경제에 큰 영향
- 외환보유고 유지 및 국내소비 촉진에 긍정적이거나, 장기적인 자본투자로 연결되기 어려운 한계

• 세계적 수준의 BPO 산업환경 유지

- 필리핀 내 BPO 연간 소득규모는 270억 달러로 GDP의 약 7%이며, 근로자 수는 140만 명으로 전체 노동가능 인구의 3.1%
- 다만, 현재 BPO 산업의 70%가 미국 기업 아웃소싱임을 감안할 때, 트럼프 정권의 국내기업 보호정책은 잠재적 위험요소

4. 필리핀

정치·사회 동향

- **두테르테 정권, 2019년 5월 총선 승리로 정책 추진력 확보**
-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 연방제 시행, 내전 종결, 3자녀 제한정책, 대 중국관계 개선, 부패 척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 후 미미한 개혁 성과, 인권침해, 재벌 및 족벌 중심의 경제=정치활동으로 대내외적 비판
-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유당(LP), 기독교인무슬림민주당(Lakas-CMD), 민족주의인민연맹(NPC) 등을 필리핀민주당(PDP-Laban Party) 연합체로 회유하여 세력 확보
- 2019. 5월 선거에서 두테르테 측근 세력이 하원의원(총 292석) 200석 이상, 상원의원(총 12석 선출) 중 9석 차지
- **방사모로 기본법으로 민다나오 갈등 완화**
- 2018. 8월 민다나오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사모로 기본법'에 최종 서명하여 갈등 종식 기반 마련
- 민다나오 내 무슬림 자치정부와 80석 규모의 의회 허가
- 민다나오 지역 세수의 75%가 자치정부에 귀속될 예정

국제 관계

- **중국과의 관계 개선**
- '친미 반중'으로 요약되는 전통적 외교 정책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실리 외교노선 추구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 갈등은 지속
- **일본과 우호관계 지속**
- 일본은 필리핀의 제1위 교역대상국이자 주요 투자국
- 2017년 아베 총리는 필리핀에 향후 5년 간 1조 엔 규모의 원조 및 투자 약속

[표 4-3] 한-필리핀 교역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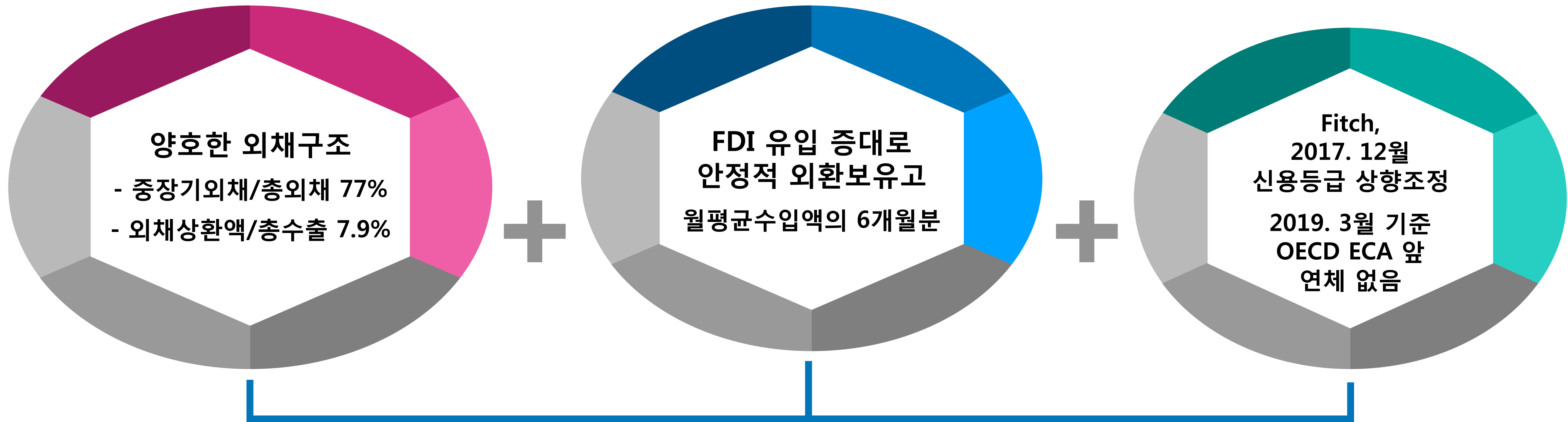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 품목
수출	7,278	10,594	12,037	전자전기 제품, 광물성 연료, 산업용 전자제품
수입	3,229	3,702	3,569	산업용 전자제품, 농산물

자료: 무역협회

4. 필리핀

외채상환태도 & 국제시장평가



[표 4-4]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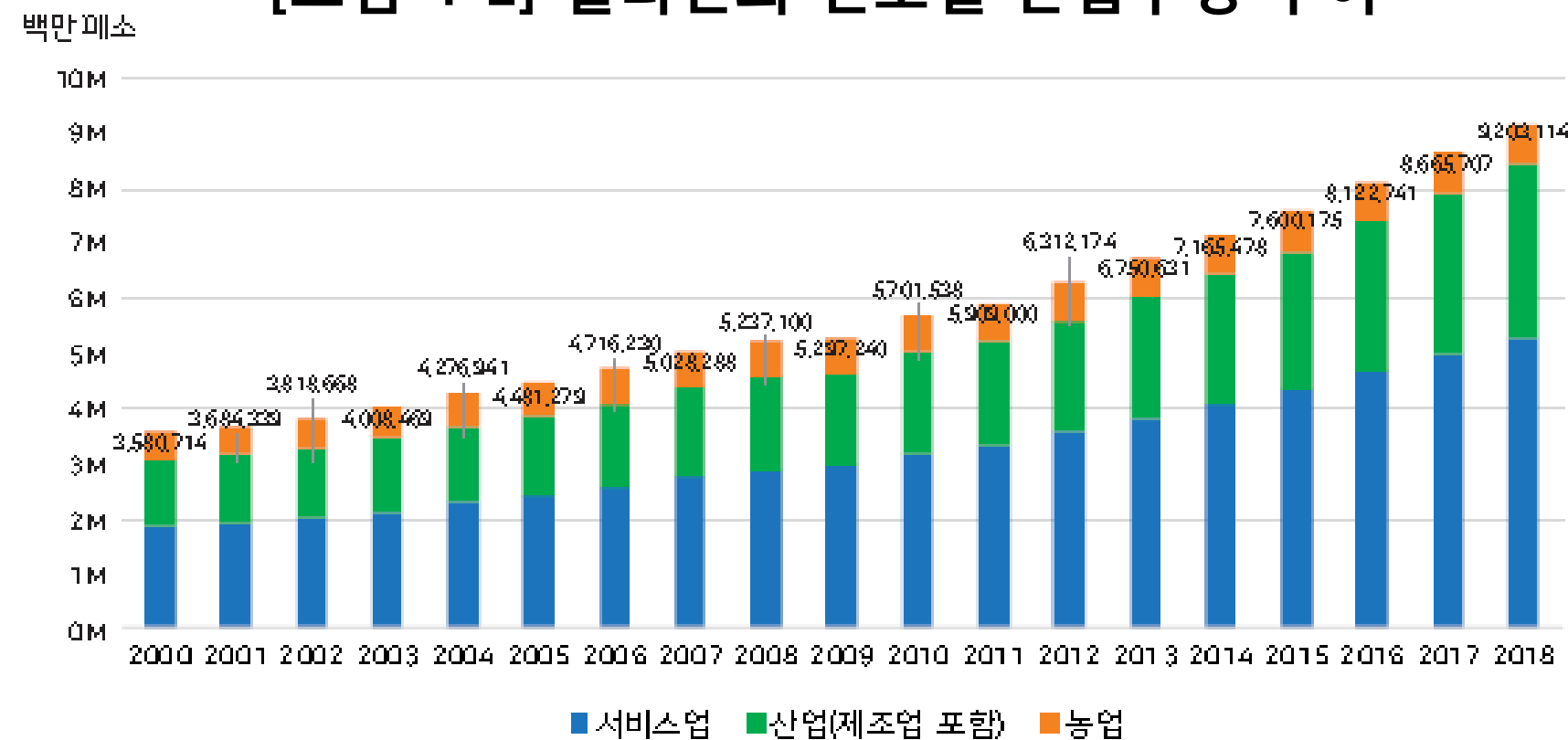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3등급 (2019.06)	3등급 (2018.06)
Moody's	Baa2 (2014.12)	Baa3 (2013.10)
Fitch	BBB (2017.12)	BBB- (2013.03)

4. 필리핀

산업 구조

- 서비스업이 GDP의 60% 및 고용의 50% 점유
- 필리핀 경제구조(2018년 말 기준)
 - 서비스업(유통, IT, 금융, 무역, 자동차 수리 등) 60.0%
 - 산업/제조업 (자동차, 화학제품, 플라스틱, 제지 등) 30.7%
 - 농업(쌀, 바나나, 코코넛, 파인애플, 생선, 돼지 등) 9.3%
- 제조업 강화, 농업-서비스업 연계, 가치사슬 글로벌화를 위한 '포괄적 국가산업전략'(CNIS) 추진

[그림 4-1] 필리핀의 연도별 산업구성 추이



자료: 필리핀 통계청

주요 산업

- 포괄적 자동차 산업 부활전략(CARS)
 - 2015년 대통령 승인 행정명령 182조에 의거한 아시아 내 선도적 자동차 부품 제조국 부상 정책
 - 6년 간 매년 약 87백만 달러 수준의 보조금 지원 계획
 - 생산 조건(ex. 플라스틱 부품 연간 20만개 이상) 충족 시 지원
- 서비스업의 경우 IT-BPM 분야가 성장 주도
 - 서비스업 : 2010~14년 중에는 건설, 금융, 부동산 분야 성장이 가장 두드러진 반면 교통, 통신 분야 성장세는 저조
 - 풍부한 영어구사 인력, 고객 중심적 마인드로 2010년 국가별 보이스 (voice) 기반 산업규모에서 인도를 제치고 1위 차지
- 낮은 농업 생산성과 농촌 빈곤 문제
 - 1980년대 농업은 필리핀 경제의 약 25%를 차지
 - 정부의 서비스업 · 제조업 장려 기조로 농업 분야 투자 부족
 - 최근 농업 기계화 사업, WB 농촌개발사업, 농산물보험공사 운영 등으로 농업 분야 지원 다양화 추진
 - 단순한 농산물 생산을 넘어선 Agribusiness 구축 추진

4. 필리핀

외국인투자환경

-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 두테르테 행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여 정부 예산의 1/3을 인프라 개발 사업("Build, Build, Build") 사업에 배정
 - 원조(ODA), 외국인투자 등의 재원을 모색하고 외국인 지분 규제 완화
 - 인프라 투자 확대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 지속 중
- **주요 산업에서 여전히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 존재**
 - 다수의 사업에서 외국인투자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유통, 부동산 등 주요 산업에서는 여전히 지분 제한이 존재
 - 필리핀 정부는 2년마다 외국인투자 제한 목록(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을 발표
- **일부 산업에서 정부의 개입 사례 증가**
 - 광산, 도박, 관광 산업 위주로 정부가 사업 계약 및 운영에 불시 개입하는 사례 증가
 - 공산당 반군 연관 의혹 광산 사업 중단 위협(2017.11월), 마닐라 카지노 사업 계약 불시 해지(2018 8월), 보라카이 리조트 사업 계약 불시 해지(2018.4월), 보라카이 관광 불시 중단(2018.4월), 마닐라 베이 관광 불시 중단(2019.1월) 등

4. 필리핀

외국인투자환경

조세제도

- 포괄적 세제개혁 추진(1~4차)
: 법인세 인하, 개인소득세율 인하, VAT 면제범위 축소, 유류세 인상 등
- 법인세율 인하가 주요 내용인 2차 법안이 의회 통과 지연 중
- ※ 법인세율 인하 목표:
30%(현재) → 28%(2019) → 25%(2021)

금융제도

- 독립적인 중앙은행(BSP)의 안정적인 금융·통화정책 운용
- 외국인은 Philippine Stock Exchange를 통한 주식 투자 및 채권 발행 가능(중앙정부 허가 취득 후)

무역제도

-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주의 표방
- 현실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입규제 존재
- ASEAN 회원국, 일본-필리핀 FTA 등
- 한국-필리핀 FTA 논의 중

외환제도

- 개인 및 법인의 자유로운 외환거래 및 해외송금이 가능
- 폐소화는 일시적 강세였으나 약세 전환 요인 다수

노동제도

- 계약직 악습 관련 고용노동부의 활발한 정책 추진 (노동한정 노사계약 규제, 비정규직 전환 명령 등)
- 노-사 갈등 발생시 노동자 앞 고용노동부의 중재를 통한 합의 지원

4. 필리핀

글로벌경쟁력지수

구분	순위	
	2018	2019
제도	101/140	87/141
인프라	92/140	96/141
ICT도입	67/140	88/141
거시경제 안정성	43/140	55/141
보건	101/140	102/141
기술(교육)	67/140	67/141
상품시장	60/140	52/141
노동시장	36/140	39/141
금융제도	39/140	43/141
시장규모	32/140	31/141
기업 역동성	39/140	44/141
혁신 개발	67/140	72/141
종합순위	56/140	64/141

자료: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기업경영여건

구분	순위	
	2018	2019
창업	166/190	171/190
건축인허가	94/190	85/190
전력공급	29/190	32/190
재산권등록	116/190	120/190
자금조달	184/190	132/190
소액투자자보호	132/190	72/190
조세납부	94/190	95/190
대외무역	104/190	113/190
계약이행	151/190	152/190
사업청산	63/190	65/190
종합순위	124/190	95/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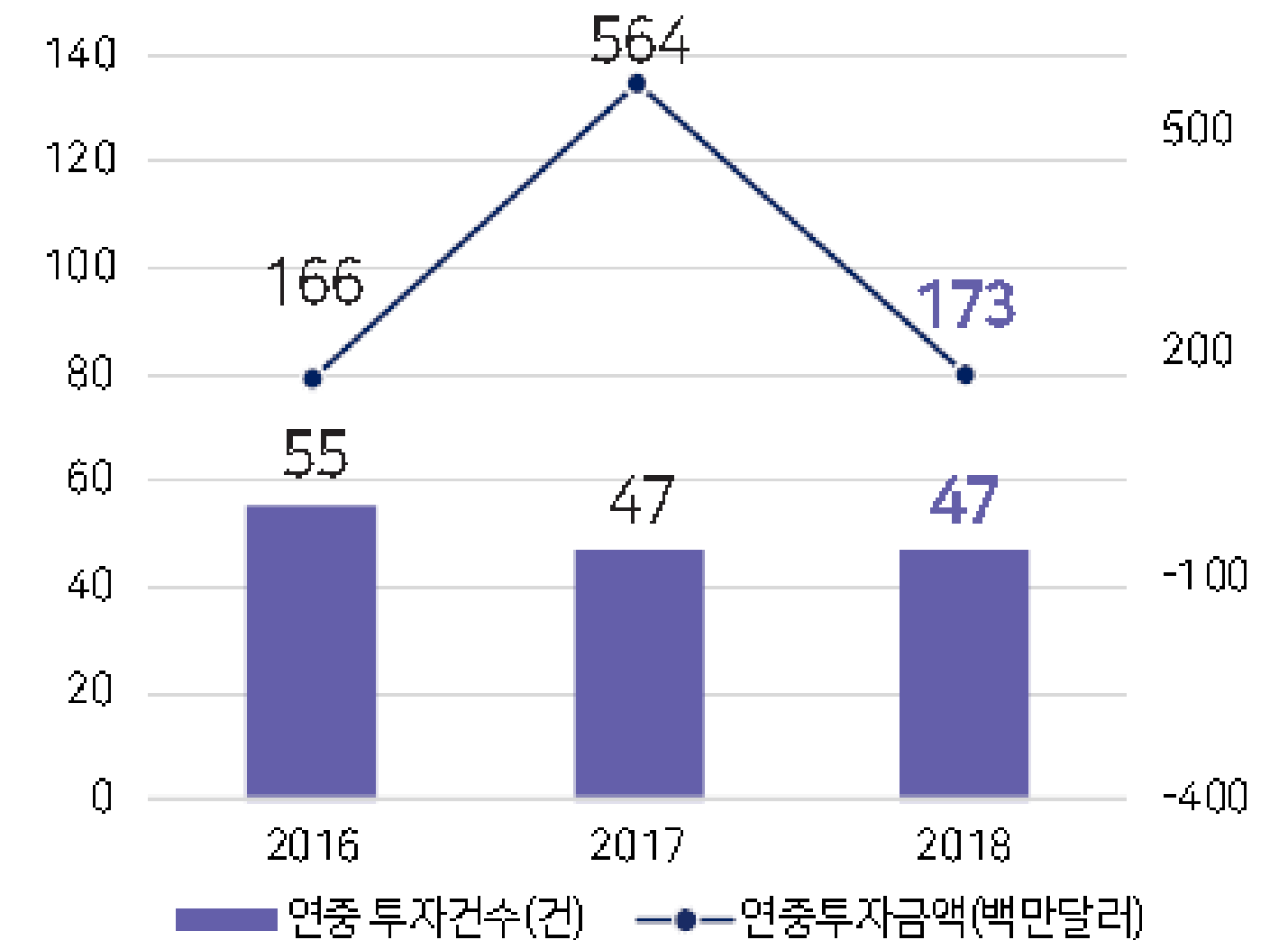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 투자건수 누계: 1,720건
- 투자총액 누계: 4,390백만 달러

* 2019. 6 기준

외국인투자 동향

[그림 4-2] 한국의 대 필리핀 직접투자 실적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 '05~'18년은 해당연도 실적

4. 필리핀

PPP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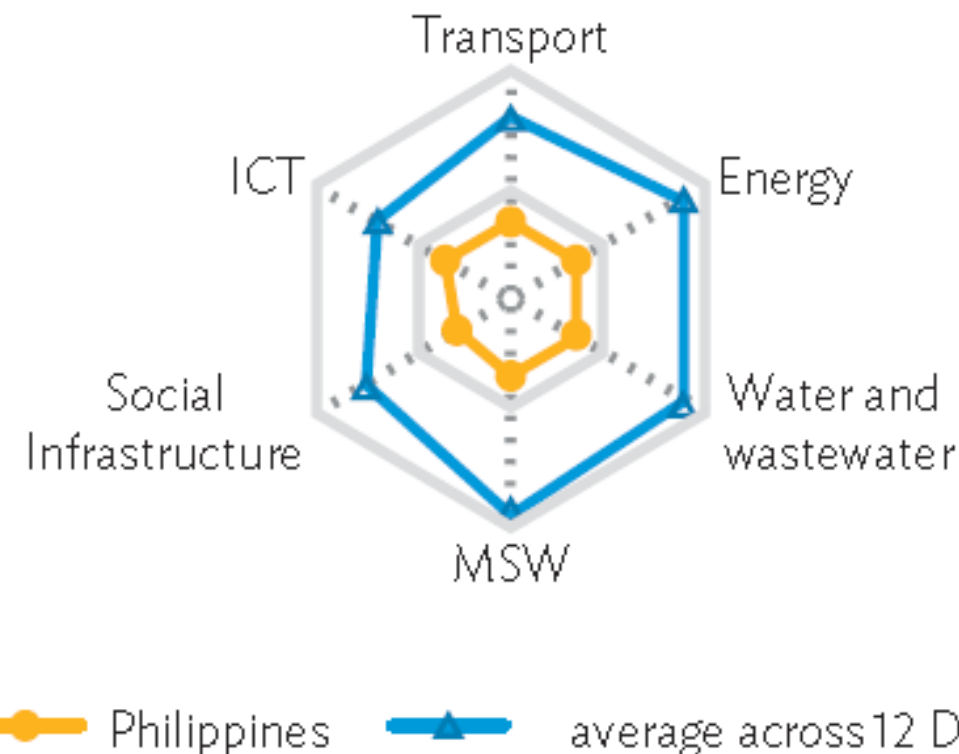
- BOT법(Republic Act 7718) 제정 :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BOT 인프라 개발에 민간 부문 개입
 - 발전소, 도로, 수자원 시설, 도축장, 정부 청사 건물 등 다양
- 필리핀 PPP 프로젝트의 핵심은 에너지 부문
 - 1990~2017년 총 117건 중 에너지 80건, 수자원 6건, 기타 1건
- 비교적 선진적, 개방적 PPP 시장 환경이지만 여전히 다양한 규제 존재
 - 공익사업 시 프로젝트 회사 소유주가 필리핀인이거나 지분율 60% 이상 의무, 필리핀인 건설 노동자 고용 의무 등

[표 4-5] 필리핀의 PPP 사업 현황 (2019. 9월 말 기준)

사업 단계	형태	개 수	사업비용 (십억 페소)
진행 중 사업	정부 고시	15	242.77
	민간 제안	4	821.59
	합 계	19	1,064.36
파이프라인 사업	정부 고시	15	0.38
	민간 제안	35	2,941.47
	합 계	50	2,941.85

자료: PPP Center

[그림 4-6] 그린필드 PPP 사업 외국인 투자지분율 상한 분포



DMC = developing member country, 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MSW = municipal solid waste, PPP = public-private partnership.

자료: Mott MacDonald

- PPP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현지 상업은행이 주도
- 민간제언형 사업(unsolicited proposal)에 수용적
 - ※ 단, 파이프라인 사업과 다르고, 필리핀 정부의 보증·자본금 참여가 필요 없으며, 제안 후 경쟁입찰을 진행해야 하고, 제안자 앞 입찰 가점이나 인센티브는 없음
-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외국인 투자지분율 상한 적용
 - ※ 정부는 점진적인 지분율 규제 완화 의지
 - ※ 세부사항은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에 명시

4. 필리핀

PPP 관련 프로그램

• PPP 센터 운영

- PPP 사업 촉진을 위한 기관 : 사업 자문 제공, 사업이행 모니터링, 사업개발모니터링기금 관리, DB 관리, 표준 계약서 제공(예정) 등
- PPP 센터 홈페이지(ppp.gov.ph)에서 최신 파이프라인 사업 목록 등 다양한 정보 열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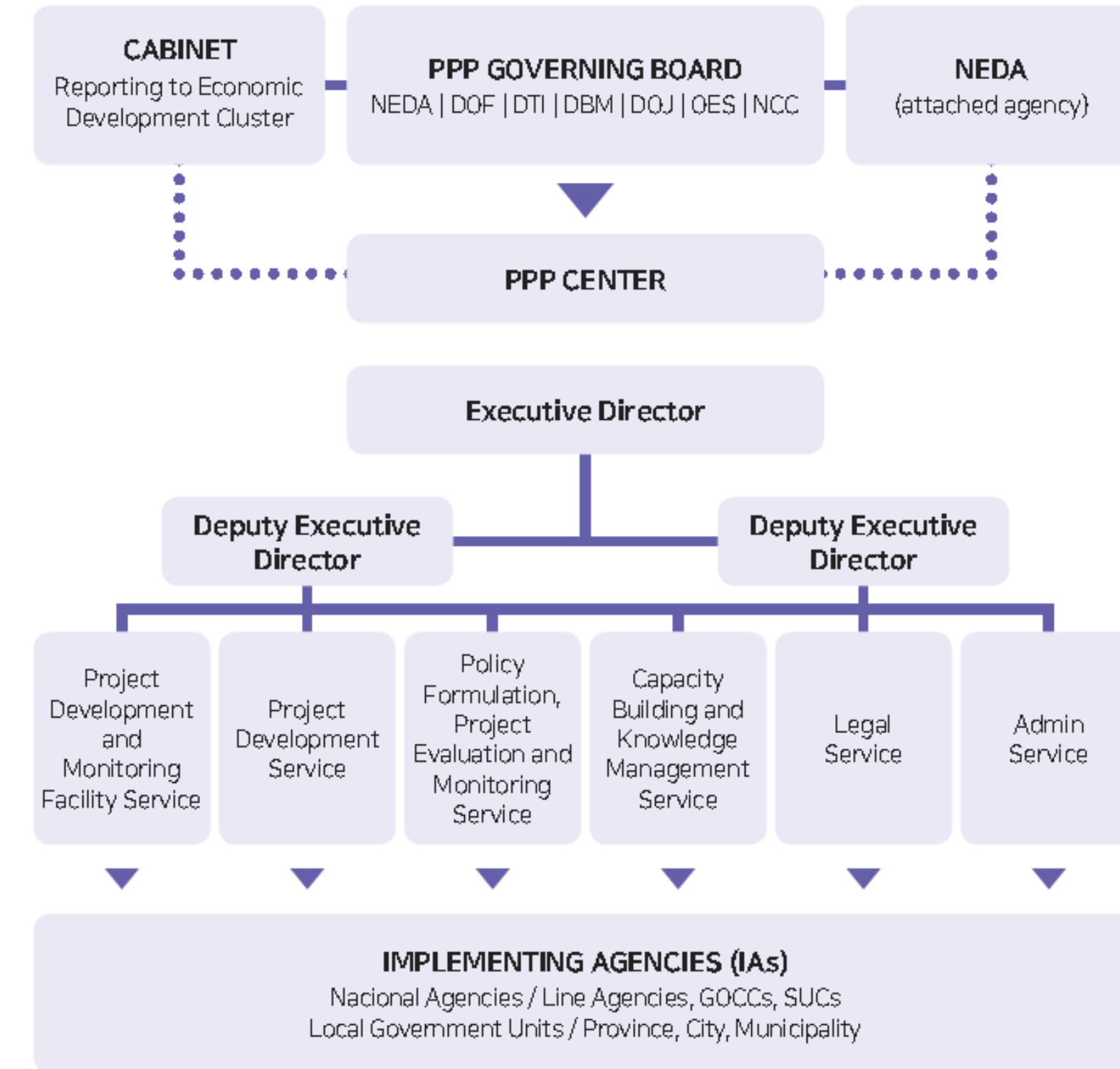
• 사업개발모니터링기금(PDMF)

- PDMF(Project Development and Monitoring Facility)는 입찰 과정 및 금융종결 전 단계 사업의 개발에 필요한 컨설턴트 연계 및 비용을 지원
- 컨설턴트 패널을 구성하여 2021년까지 계약 체결
- EY Singapore, McKinsey, KPMG, Jacobs 등
- 2010년 도입 후 90개의 요청 사업 중 51개 지원

• 일반적 위험 분배 매트릭스(GPRAM)

- GPRAM(Generic Preferred Risks Allocation Matrix)는 필리핀 정부가 발표한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에 대한 경감 방안 및 책임 소재 가이드
- 필리핀 정부를 보호하는 성격이 강한 편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는 권고사항이나 분쟁 발생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그림 4-4] 필리핀 내 PPP 관련 기관 및 체계



• (PPP 정책 추진) PPP Governing Board

• (사업 검토 및 의결) 투자조정위원회, 개발청(NEDA) 이사회, 지방 정부 이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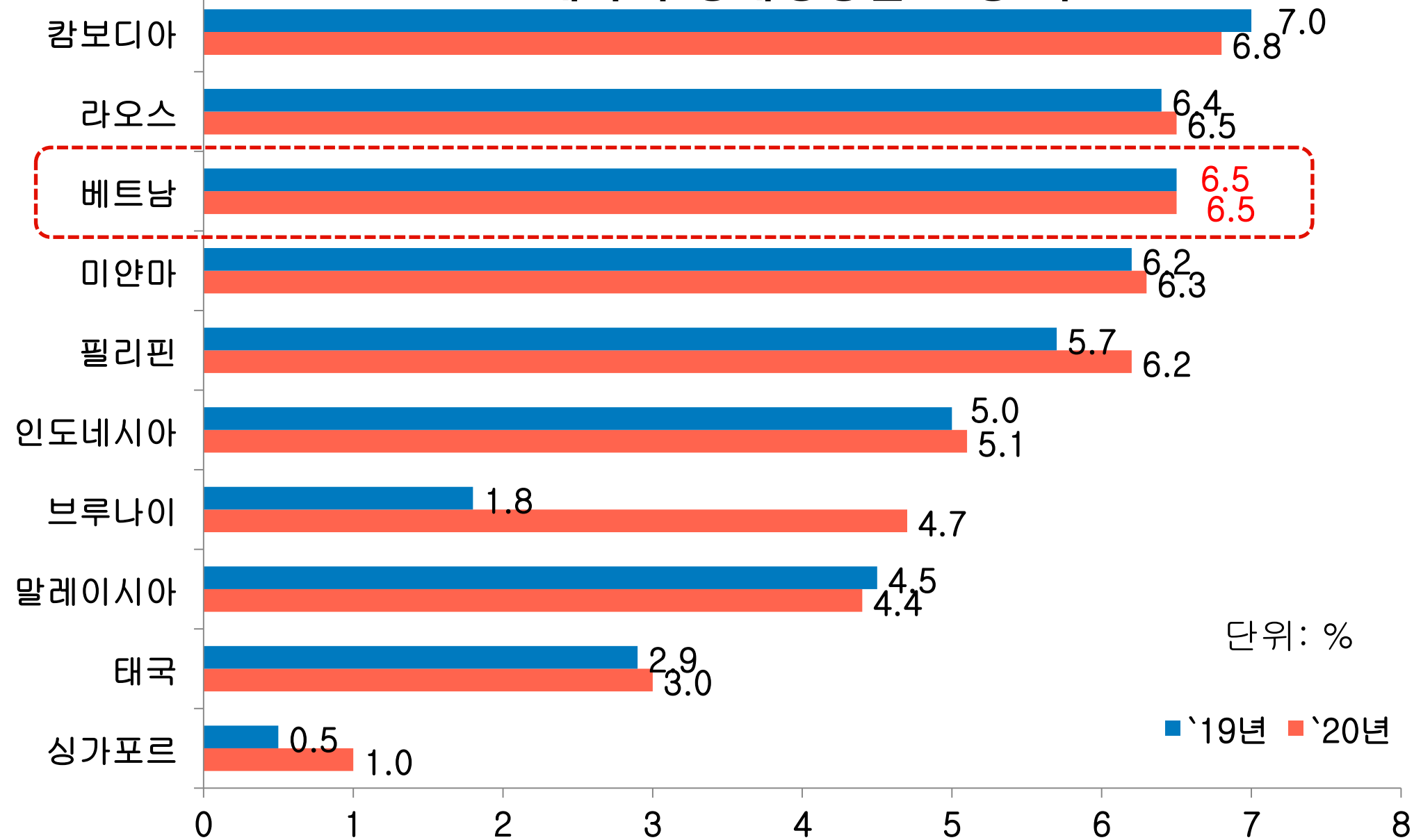
• (실제 사업 진행) 정부 부처, 공기업, 지방정부, 국립대학

• (PPP 사업 지원) PPP 센터

5. 베트남

면적 331천 km²
1인당 GDP 2,740달러('19f)
GDP 2,616억 달러('19f)
인구 95.5백만 명('19f)


ASEAN 10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비교



자료: IMF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국내경제

[표 5-1] 베트남 주요 경제지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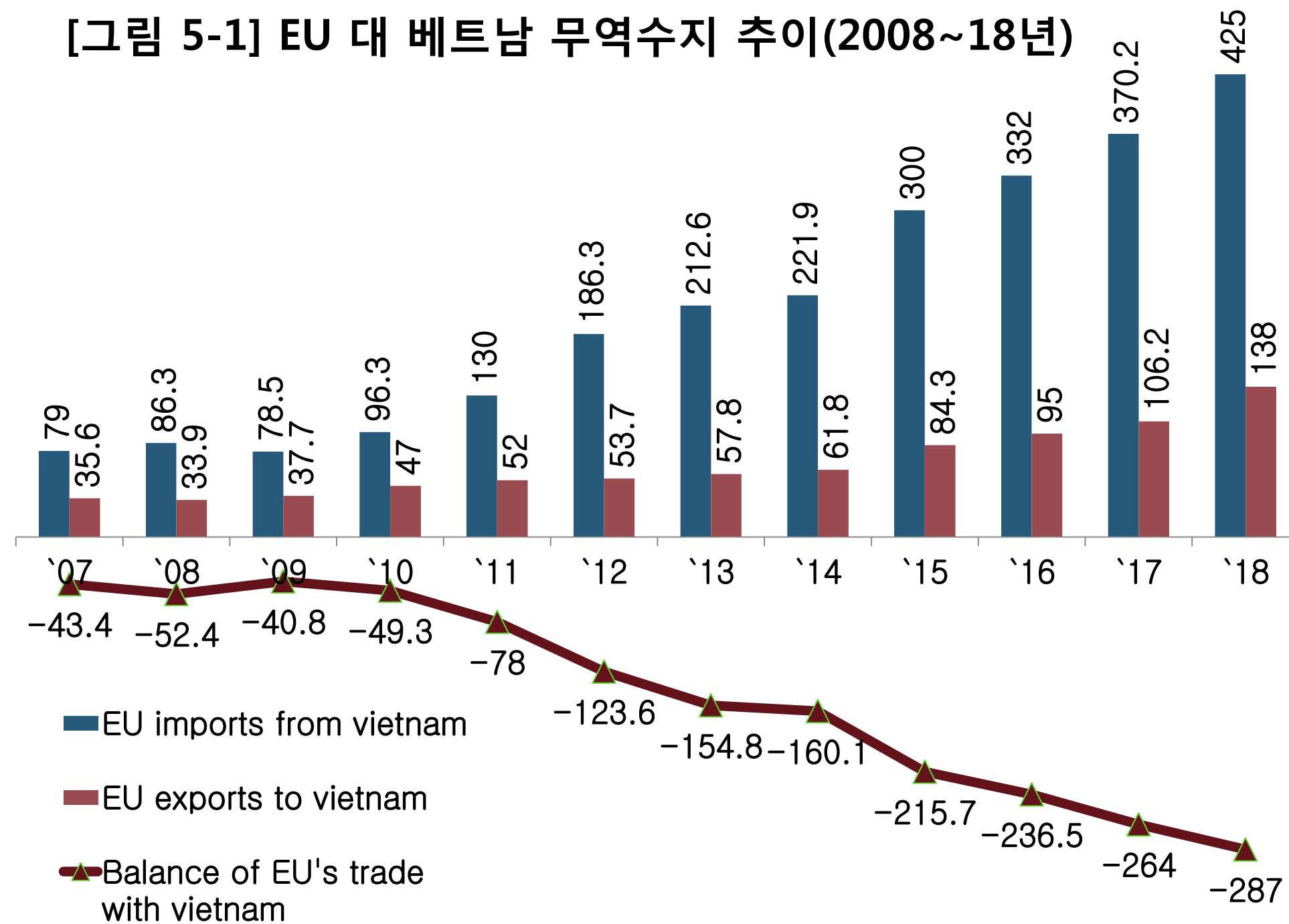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6.2	6.8	7.1	6.5	6.5
소비자물가상승률	2.7	3.5	3.5	3.6	3.8
재정수지/GDP	-4.7	-4.8	-4.6	-4.4	-4.3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2019)

- '18년 내수소비 증가, 수출 확대로 11년 만의 경제성장률 최고치 달성
- '19년 3분기 성장률 7.3% 시현 등 경제성장세 지속
- '1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수준 유지
- 인프라 및 복지비용 등 정부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 기조 지속
- 열악한 인프라 환경이 경제성장의 걸림돌
- 무역의존적 경제구조로 수출 중요성 증대

5.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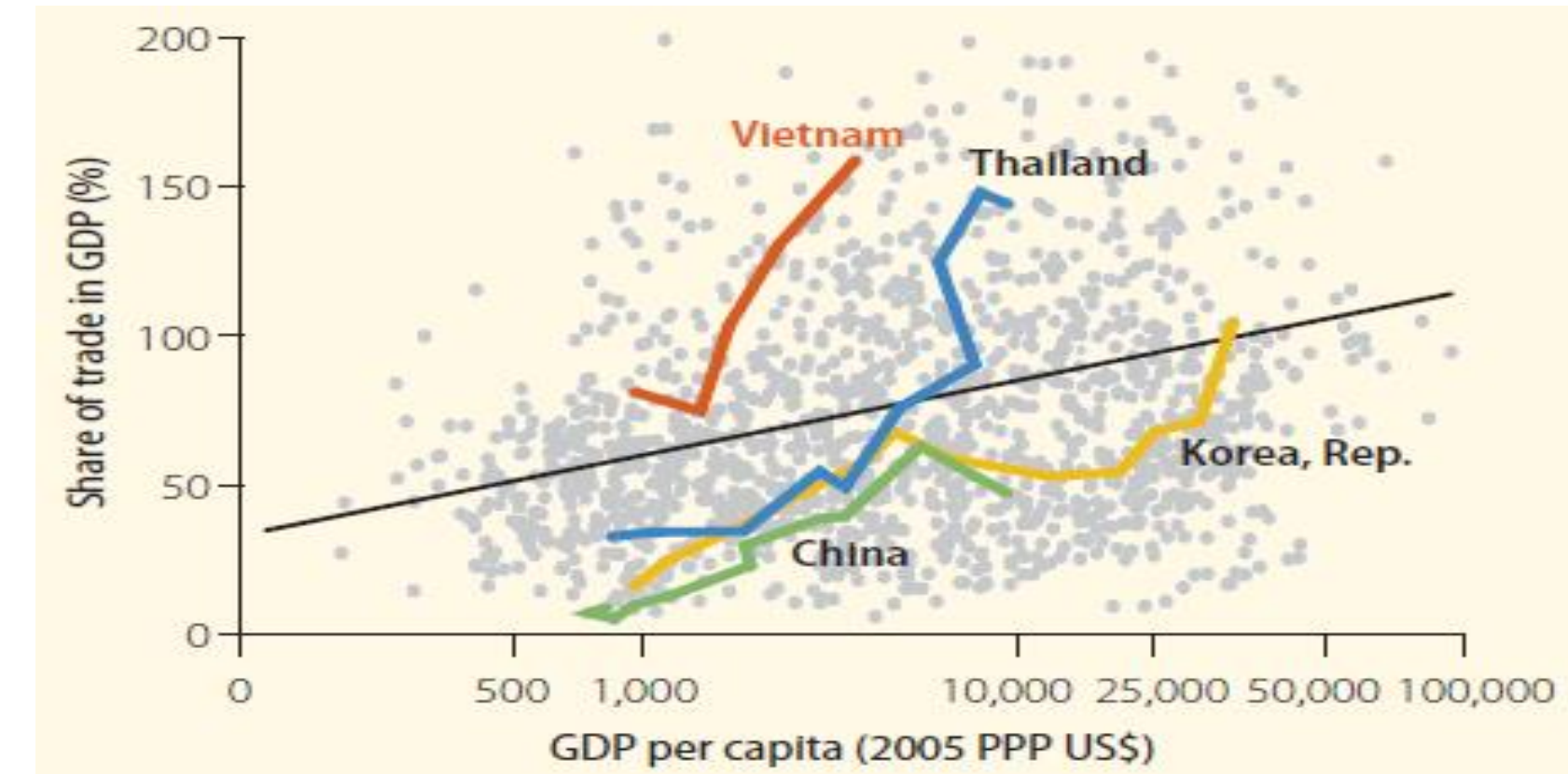
[그림 5-1] EU 대 베트남 무역수지 추이(2008~18년)



자료: 베트남 통계청

- **주력 품목의 수출실적 개선으로 무역수지 흑자**
- GDP 대비 총수출 비중 & 총수출증가율 상승세
- 아시아 개도국 최초로 EU와 FTA 체결

[그림 5-2] 베트남의 GDP 대비 대외무역 비중



자료: 세계은행, 베트남 기획투자부

[표 5-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f	2020 ^f
경상수지	-16	52	59	45	70
경상수지/GDP	-0.7	2.4	2.4	1.7	2.5
상품수지	140	114	165	156	151
상품수출	1,766	2,146	2,437	2,558	2,699
상품수입	1,626	2,032	2,272	2,409	2,548
외환보유액	362	487	551	656	669
총외채	894	1,083	1,203	1,343	1,491
총외채잔액/GDP	44.4	49.1	49.9	51.3	52.4
D.S.R.	3.9	6.0	4.3	4.5	4.7

자료: IMF, EIU, OECD

5.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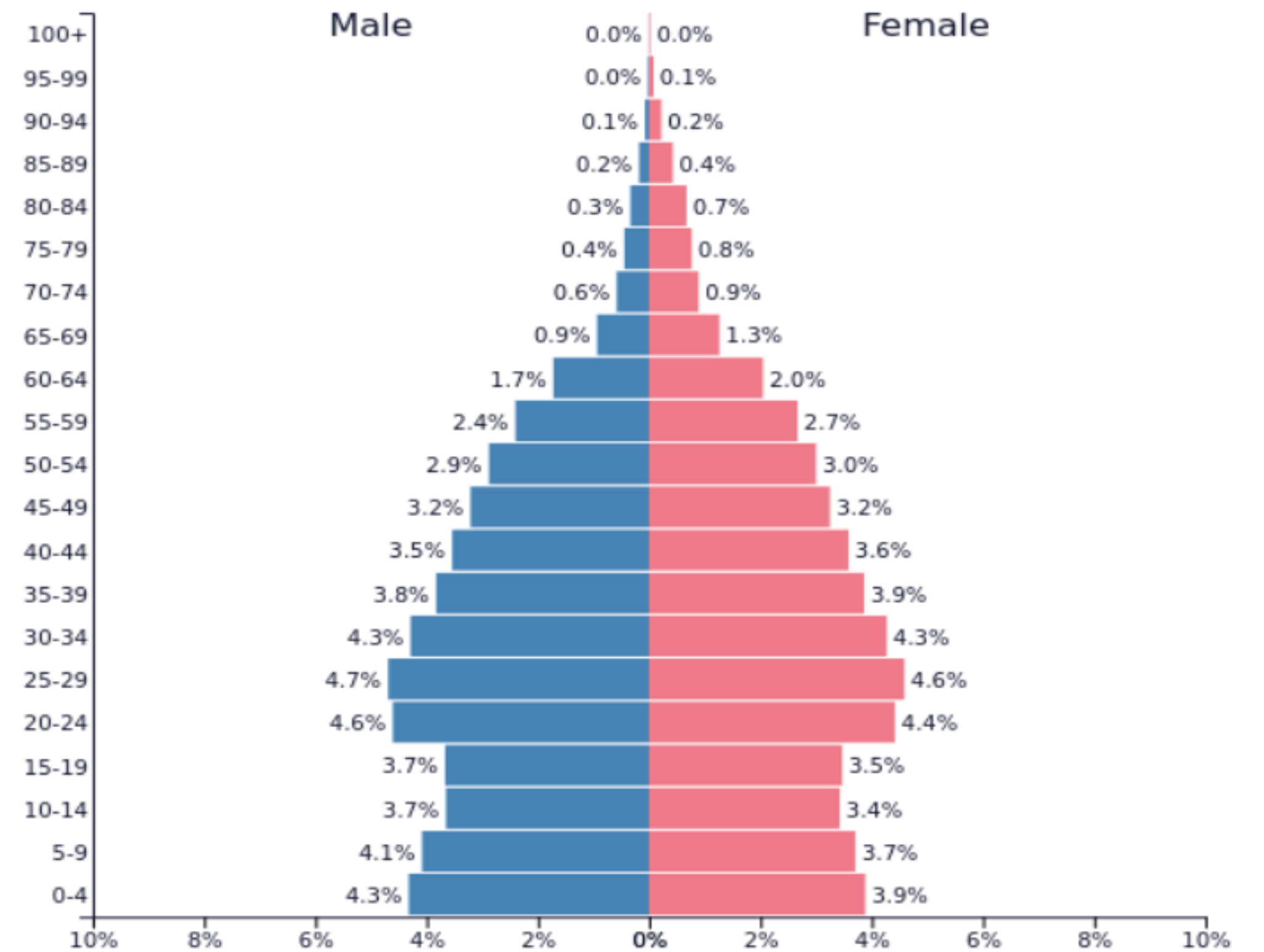
정치·사회 동향

- 응우옌 푸 쯩 서기장의 국가주석 겸직으로 정치 안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과도한 권력 집중 우려
- 공산당 내 갈등이 존재하나 정권유지에 문제 없으며, 일당 체제의 반대세력이 미약

안전성 지속 전망

-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구 1억 명(2025년 추정)에 이르는 소비시장 성장 기대
- 젊은 인구구조와 중산층 증가는 소비시장의 발전, 도시화 진행으로 이어져 인프라 구축의 수요 증가

[그림 5-3] 베트남 연령대별 인구 비중(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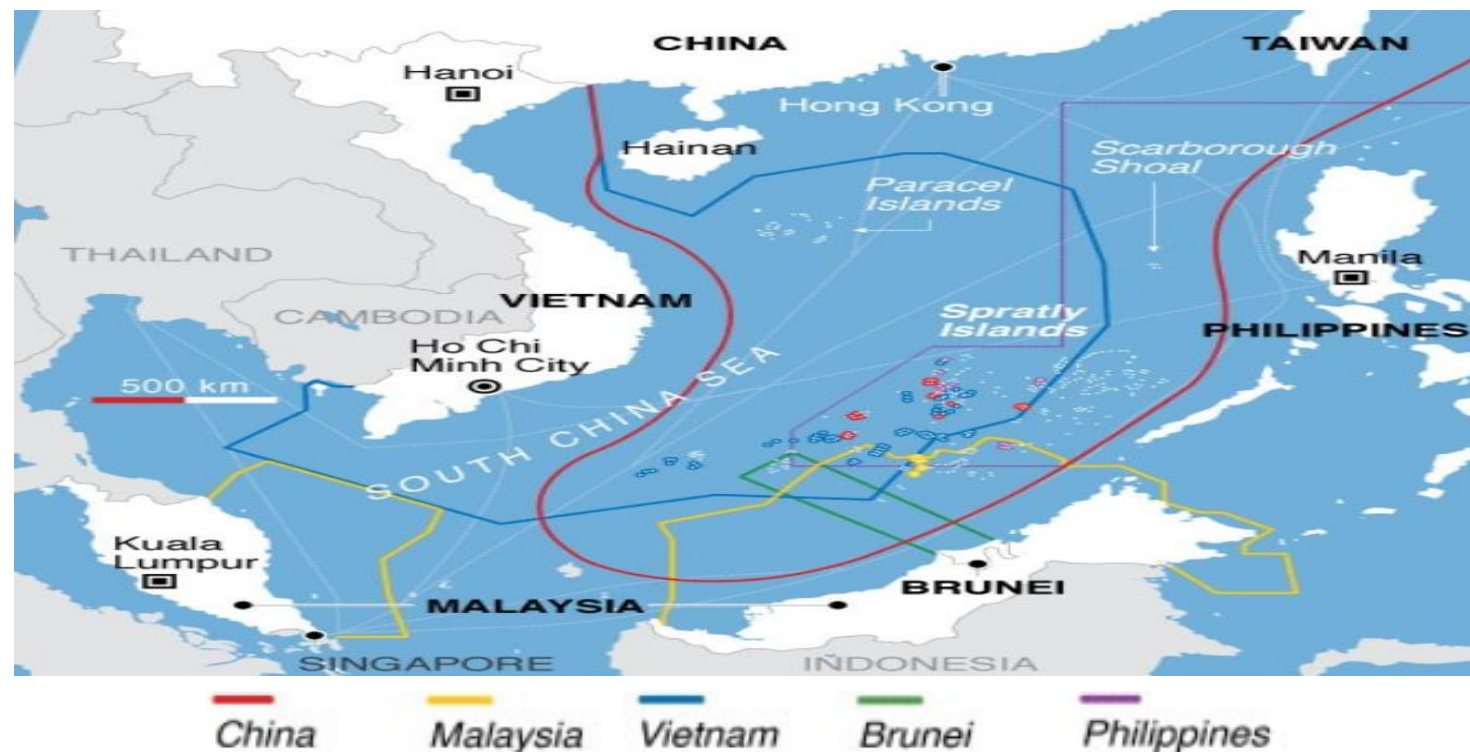
자료: PopulationPyramid.net

5. 베트남

국제관계

- 중국과는 남중국해 문제로 영유권 분쟁 지속
- 중국에 대응코자 미국, 일본 인도 등과 안보동맹 강화 추진

[그림 5-4]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현황



자료: Voice of America (*각 선은 당사국들이 주장하는 영해 경계선)

[표 5-3] 한-베트남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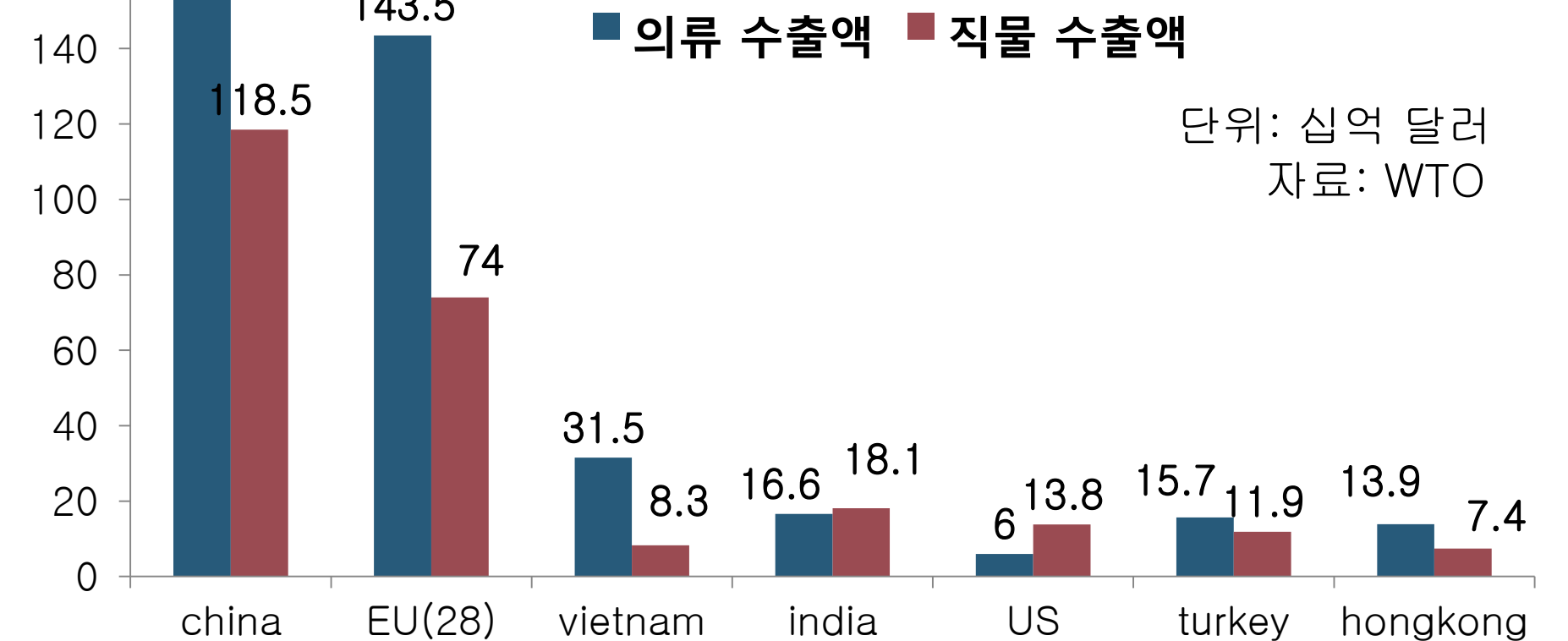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	주요 품목
수출	32,630	47,753	48,628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2,495	16,176	19,631	무선통신기기, 의류, 신변잡화

자료: 무역협회

주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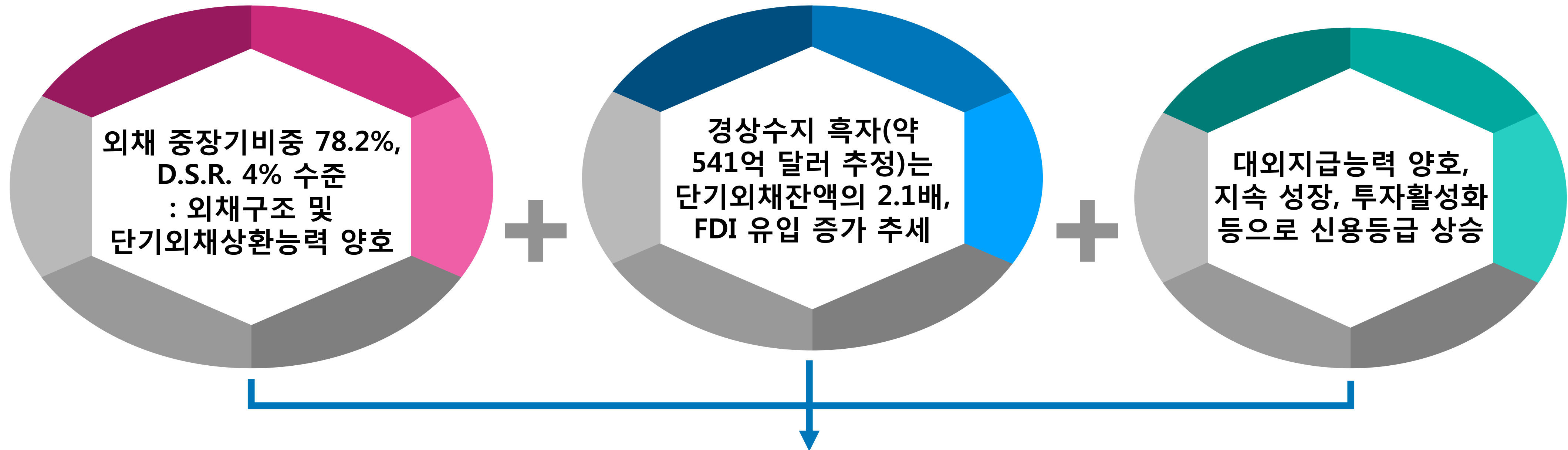
-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이 상품수출 견인
 - 전기기계류: 1,172억 달러(총수출액의 40.4%로 1위)
 - 컴퓨터부품: 159억 달러(총수출액의 5.5%로 3위)
- 제2의 수출 주력분야는 섬유/의류 산업
 - 섬유/의류 수출규모는 최근 5년 간 연평균 15% 성장 : 2018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16.1% 증가(360억 달러)
 -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EU와의 FTA 체결로 섬유/의류 분야 외국 투자 증가 전망

[그림 5-5] 전 세계 의류/직물 수출국(2018)



5. 베트남

외채상환태도 & 국제시장평가



[표 5-4]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4등급 (2019.06)	5등급 (2018.06)
Moody's	Ba3 (2018.08)	B1 (2017.04)
Fitch	BB (2019.05)	BB- (2018.05)

5. 베트남

투자정책

- 법인세율 2%p 인하 : 20%(2016)
- 외국인기업 입주 시, 법인세 2년 면제
- 4년 간 법인세 50% 감면
- 인접국보다 낮은 법인세율

세금우대 혜택

- 일반우대지역 : 10년 간 17%
- 특정산업*(일반우대지역, 경제특구) : 15년 간 10%
- 첨단 과학기술, SOC, S/W분야에 한하여 우대세율 적용

외국인투자환경

무역제도(관세수준/무역제한)

수입품 원산국 관계에 따라 3가지 관세율 적용

일반관세율

*다른 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수입품에 적용

특혜관세율(MFN 관세율)

*특혜관세협정 체결국의 수입품 또는 자유무역지대 수입 시 적용

특별특혜관세율

수입금지 품목 규정

수입금지 물품 규정

*시행령 69/2018/ND-CP

군사기술 장비,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 중고소비재, 의료장비 및 차량, 중고 IT장비, 출판물, 라디오

외환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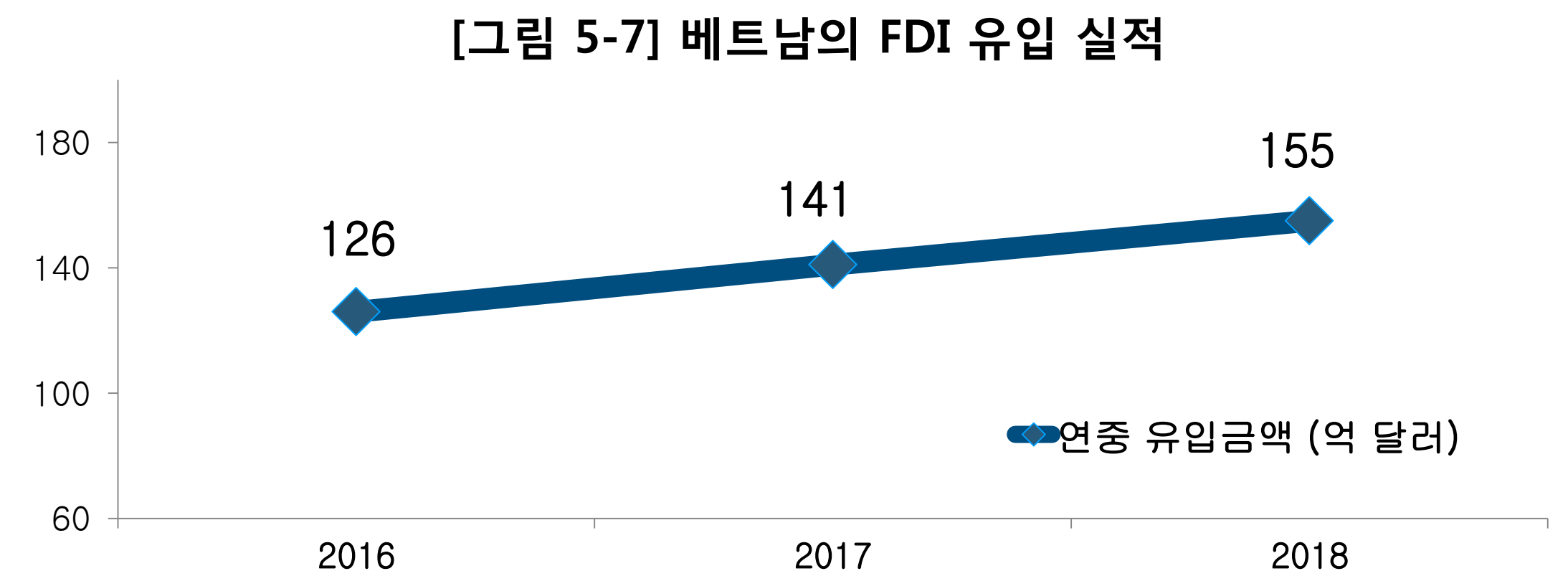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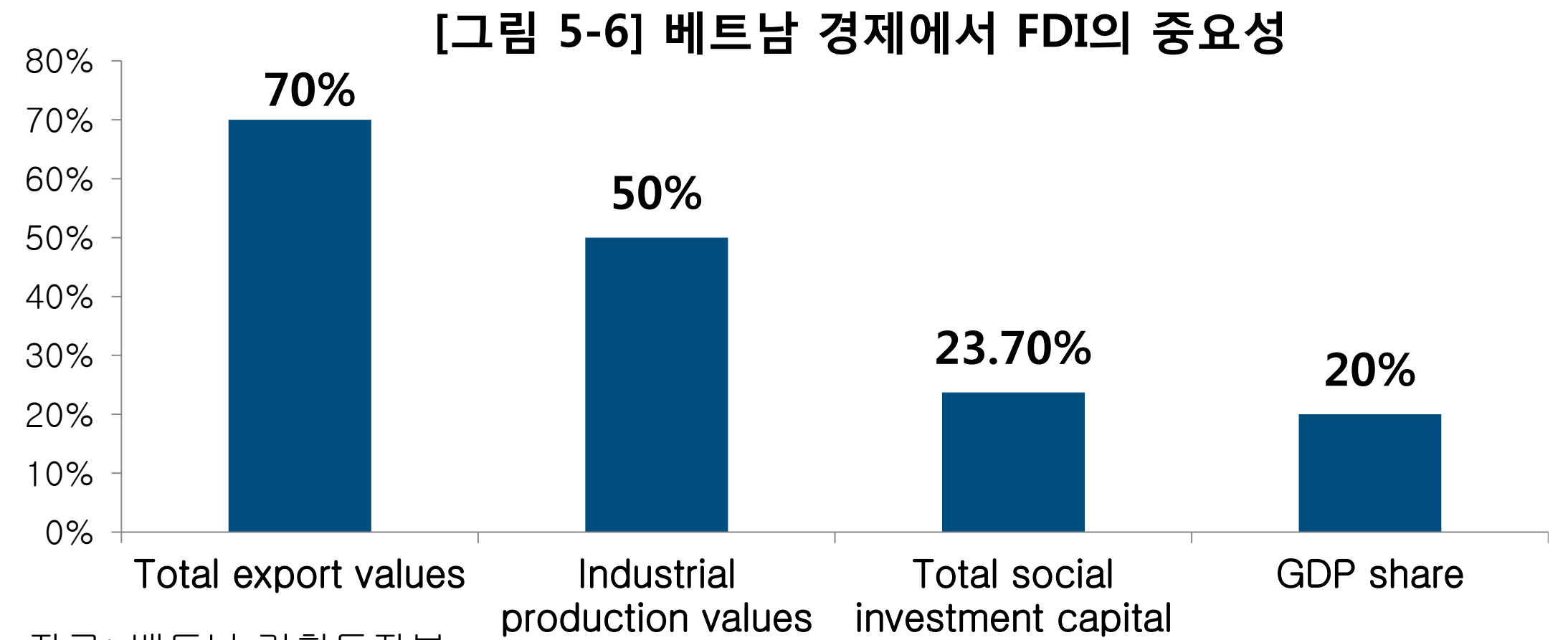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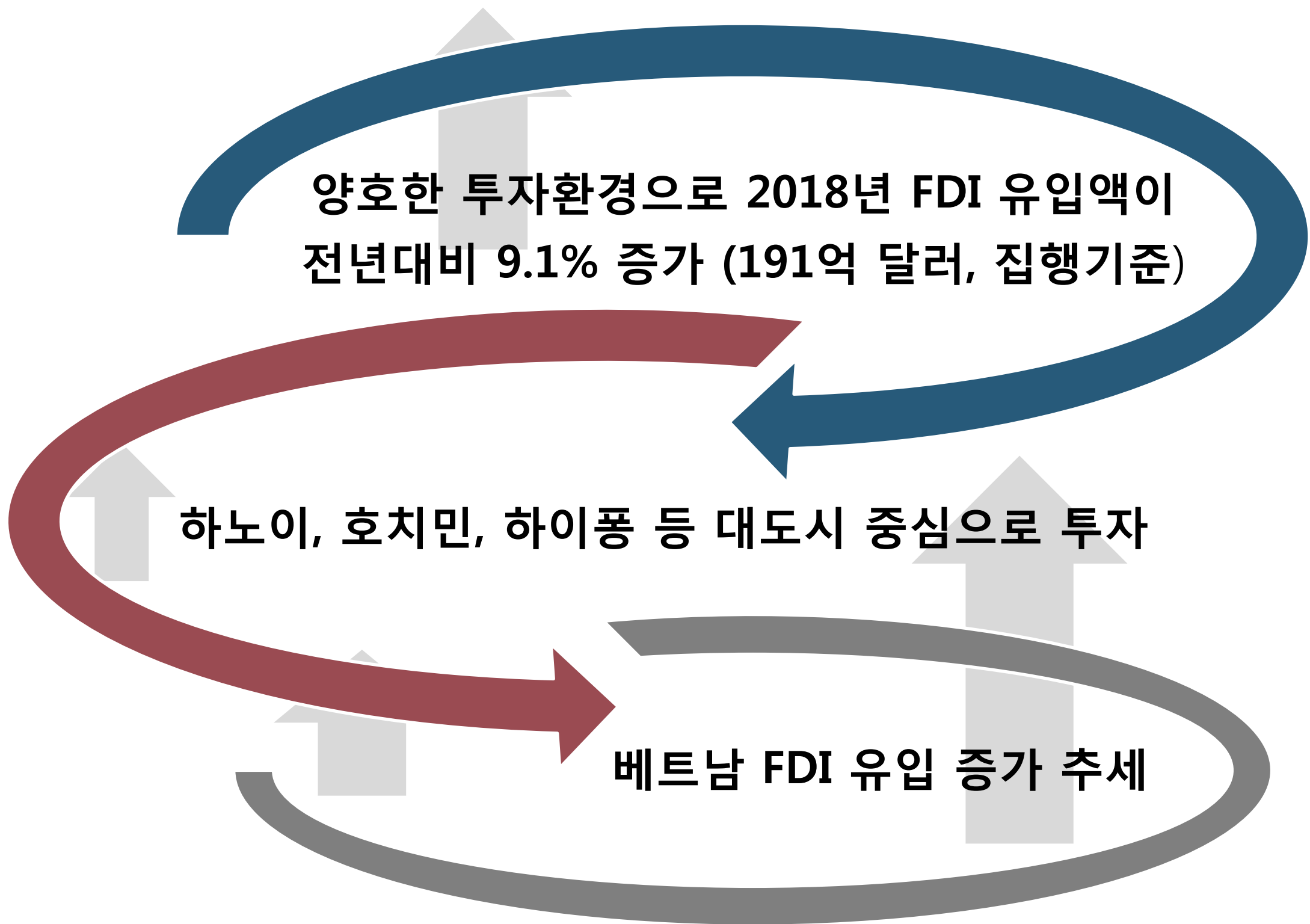
- 중앙은행(SBV)에서 변동 폭 상하 3% 내, 달러 대비 동화 환율 엄격 관리
- 역내 투자 시 동화 환전 의무, 대내 지급&계약 거래 시 통화 결제
- 은행 지정계좌 통한 외환 송금 가능

금융제도

- 금융산업 경쟁력이 낮고 외화대출 규제 존재
- 국영 상업은행의 독과점 체제
- 외화대출의 경우는 수입대금 결제용으로만 허용

5.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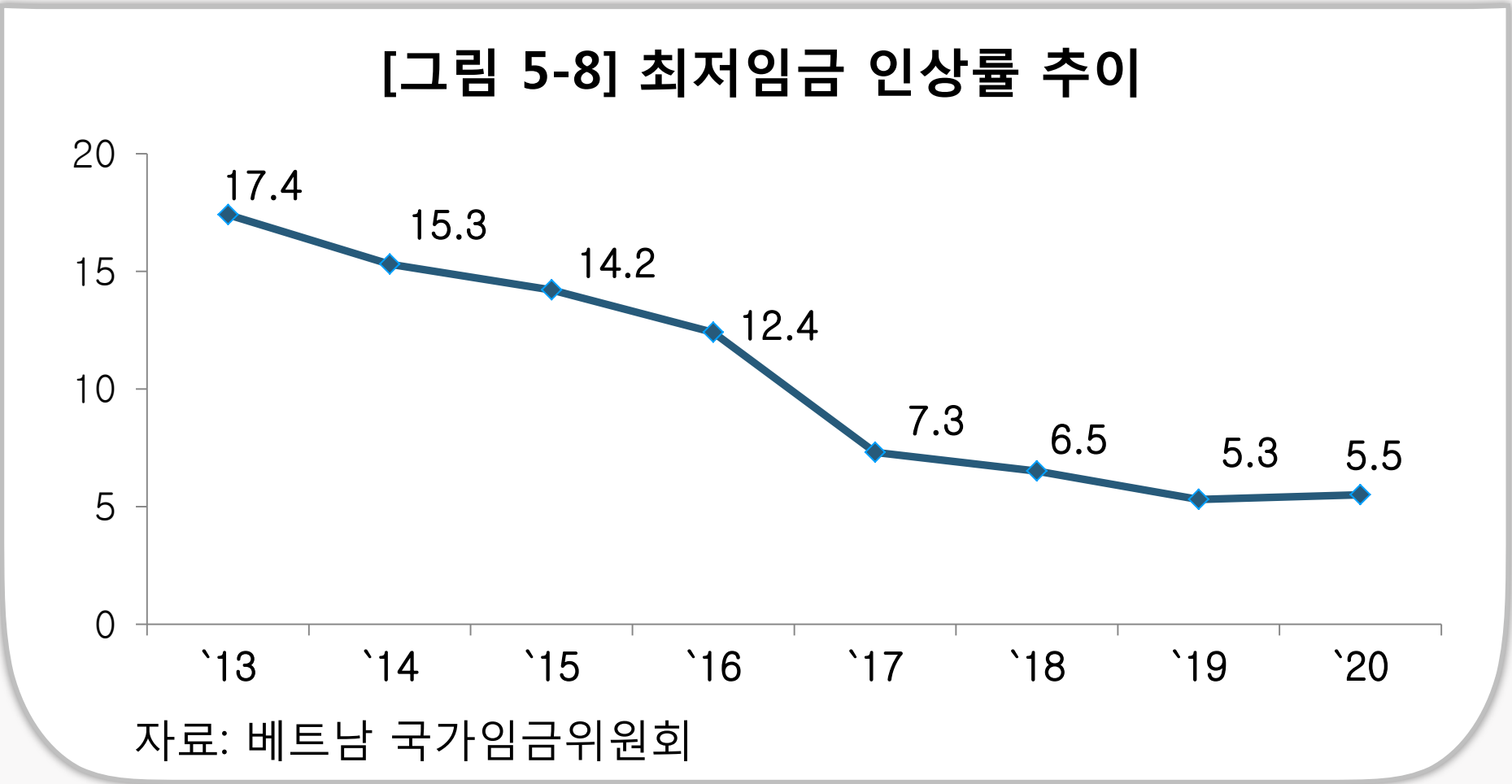
외국인투자환경(FDI)



5. 베트남

외국인투자환경(노동)

최저임금 인상률



지역별

[표 5-5] 지역별 최저임금 현황(월 급여 기준)

구분	2019년	2020년(안)	인상률
1지역	4,180	4,420	5.7%
2지역	3,710	3,710	5.7%
3지역	3,250	3,250	5.5%
4지역	2,920	2,920	5.1%
평균			5.5%

노동제도

- 노동자 우대정책
- 지역별 최저임금 제도 차등 적용
- 각 지역 산업단지, 경제구 등에 본사를 둔 경우 가장 높은 지역의 최저임금을 적용
- 기술근로자는 최소 7% 더 높은 임금 지급



현황

- 인건비 증가로 기업 부담 가중
- 최근 10년 간 4배 이상 인상
- 지역별로 최저임금 달리 적용
- 임금인상이 물가상승률을 압도

5. 베트남

글로벌경쟁력지수

구분	순위	순위
	2018	2019
제도	94/140	89/141
인프라	75/140	77/141
ICT도입	95/140	41/141
거시경제 안정성	64/140	64/141
보건	28/140	71/141
기술(교육)	97/140	93/141
상품시장	102/140	79/141
노동시장	90/140	83/141
금융제도	59/140	60/141
시장규모	29/140	26/141
기업 역동성	101/140	89/141
혁신 개발	82/140	76/141
종합순위	77/140	67/141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기업경영여건

구분	순위	
	2018	2019
창업	104/190	156/190
건축인허가	21/190	25/190
전력공급	27/190	27/190
재산권등록	60/190	64/190
자금조달	32/190	25/190
소액투자자보호	89/190	97/190
조세납부	131/190	109/190
대외무역	100/190	104/190
계약이행	62/190	68/190
사업청산	133/190	122/190
종합순위	69/190	70/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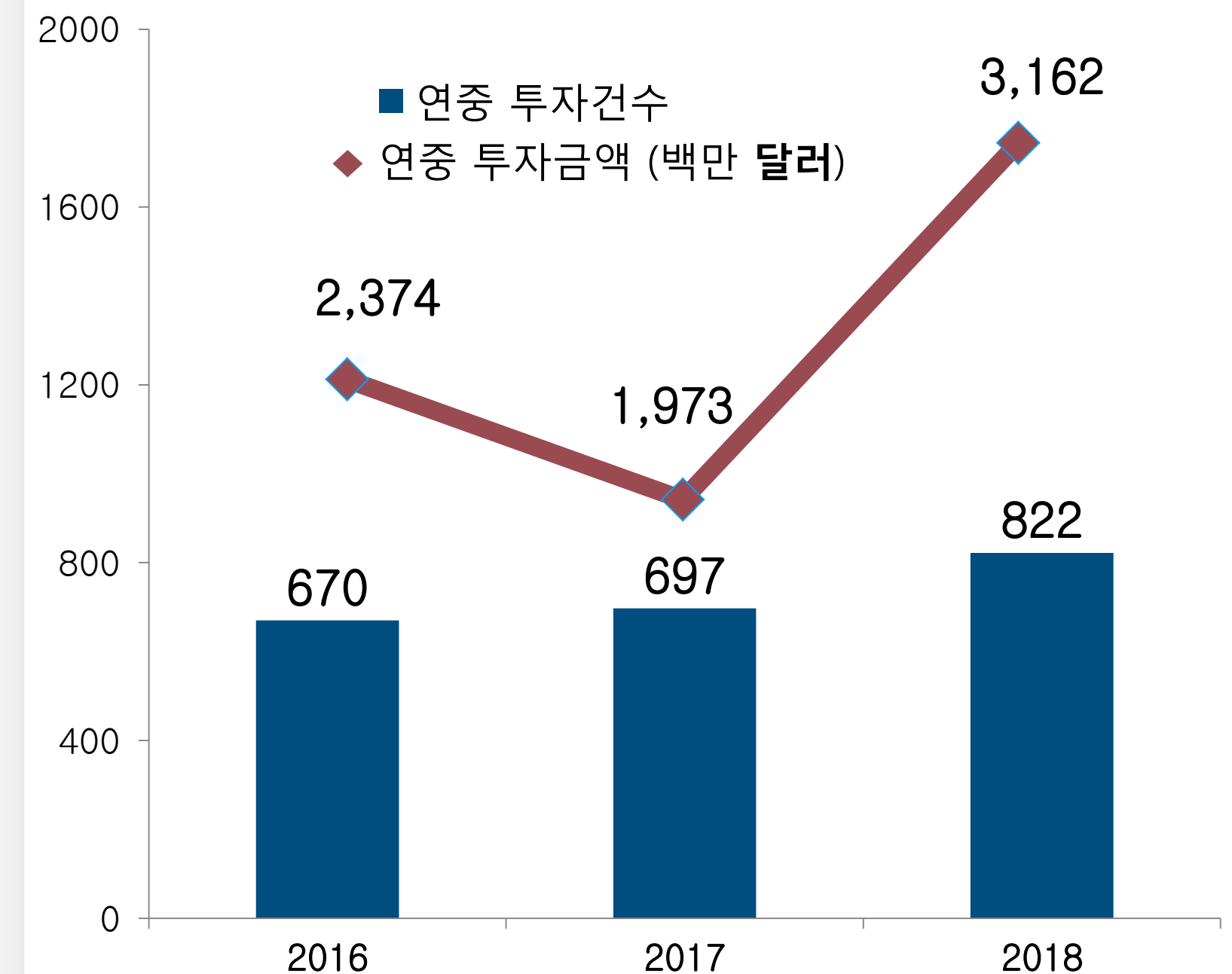
자료: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투자건수 누계: 6,691건
- 투자총액 누계: 22,234

*투자누계는 2019. 6 기준 전체 누계 실적

외국인투자 동향

[그림 5-9] 한국의 대 베트남 직접투자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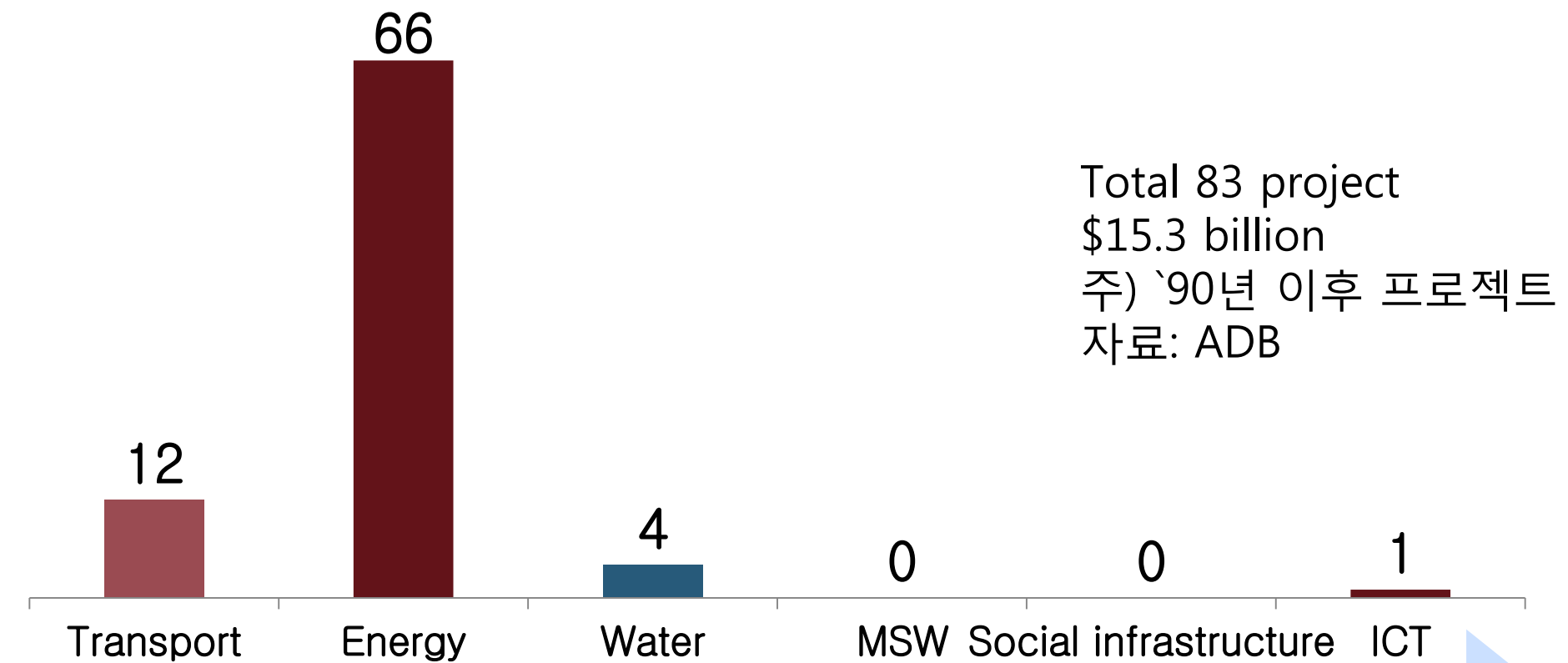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 2005~18년은 해당연도 실적

5.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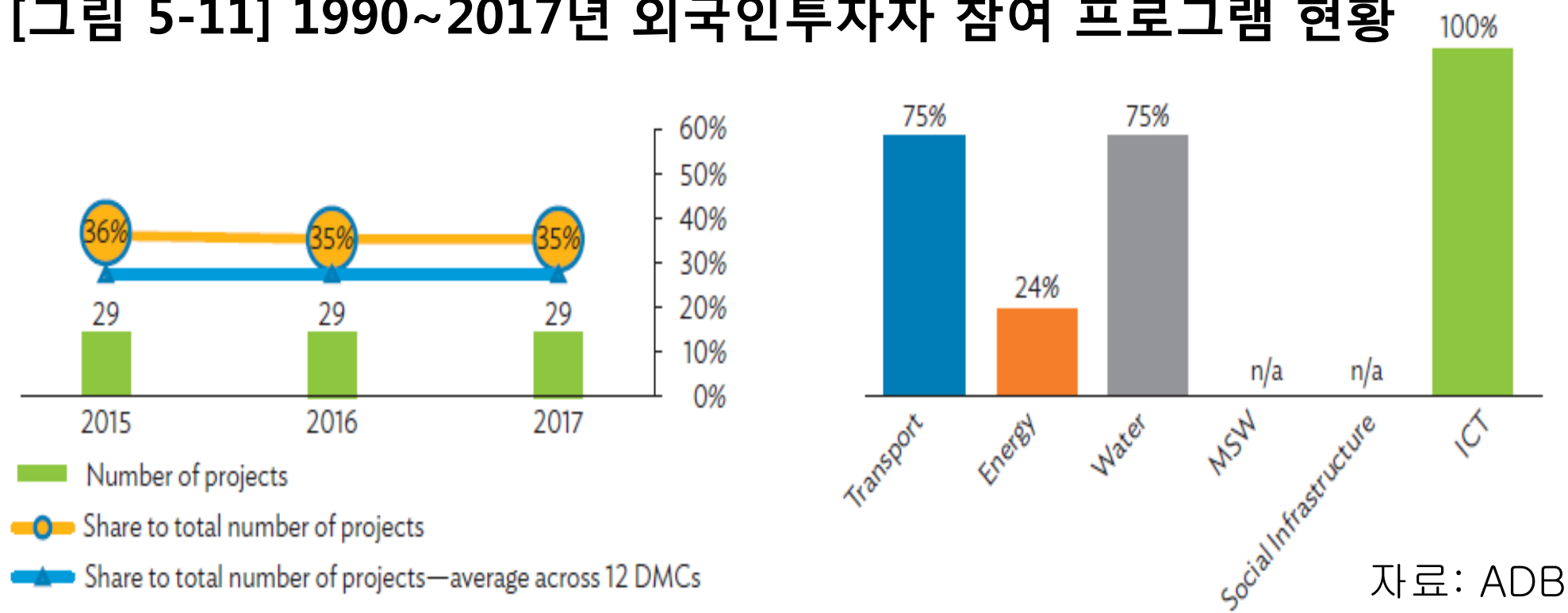
PPP 개황

- 83건의 프로젝트, 153억 달러 규모 투자
- 인프라 건설은 국영기업이 주도(국영기업 비중 60%)
- 공정한 입찰경쟁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제도적 노력 중

[그림 5-10] 금융 종결 PPP 프로젝트 분야별 투자규모



[그림 5-11] 1990~2017년 외국인투자자 참여 프로그램 현황



DMC = developing member country, 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MSW = municipal solid waste, PPP = public-private partne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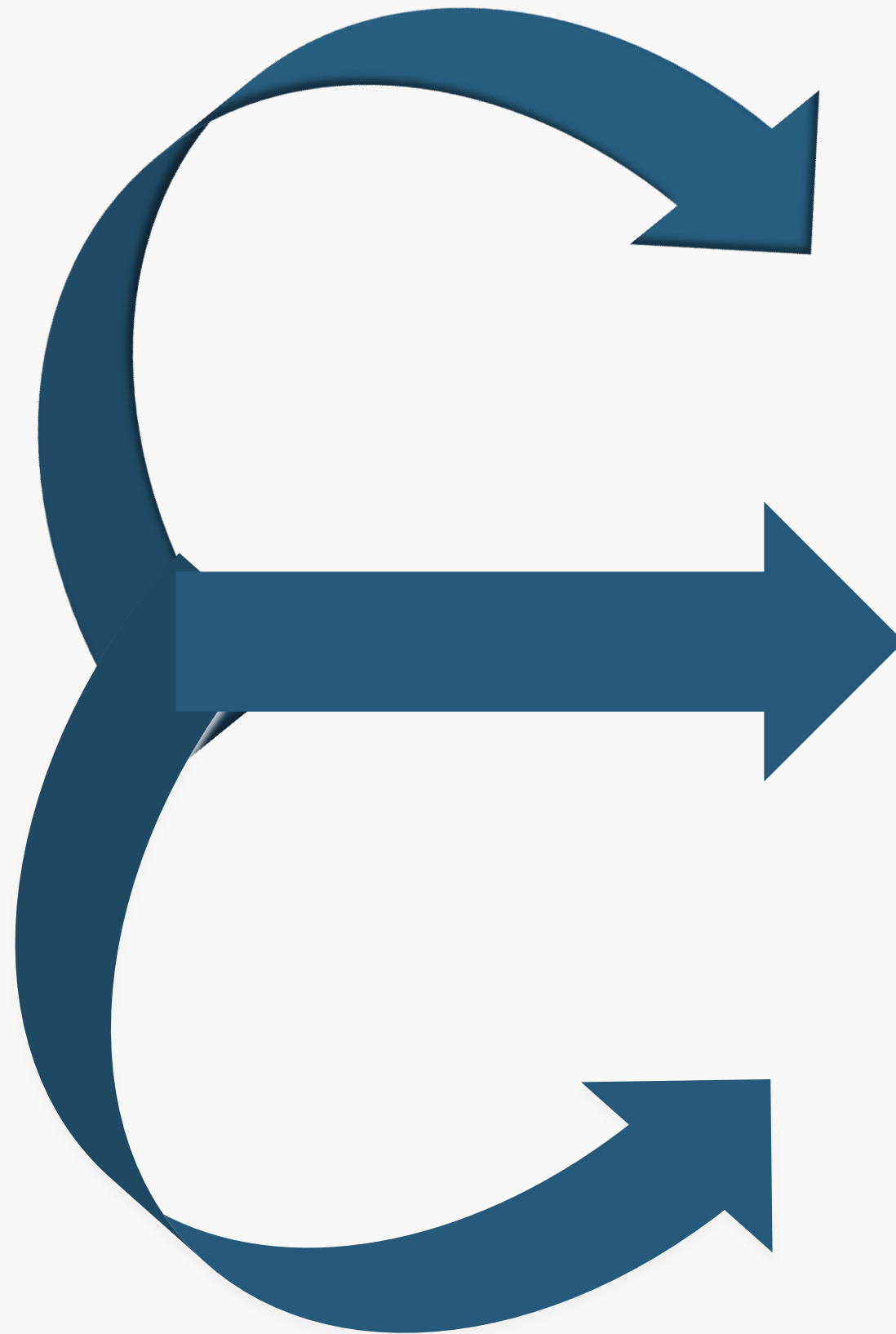
- 프로젝트 개발 펀드(PDF)출범
- 2020년까지 외국인투자가 필요한 127개 후보사업 발표 : 40개 프로젝트는 PPP 형태로 추진할 계획 (추진 분야: 교통, 편의시설, 사회인프라 등)
- 외국인투자법(초안) 제정

5. 베트남

베트남의 PPP 도입



- 공공부채 규모 증가
-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의 민간참여 방식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계획



PPP 관련 기관

- **기획투자부**
 - 프로젝트 수행과 각 지방정부 인민위원회 및 중앙정부 사이의 협업을 조율
 - 기술적 지원 및 역량 구축, PPP 관련 법 체계 구축, 투자자금 조달 등 담당
- **PPP 운영위원회**
 - 여타 정부기관과의 협업 도모, PPP 법 체계 정립, 시스템 설계 관련 총리를 보좌
 - 위원장은 부총리, 부의장은 기획투자부 장관과 금융부 차관
- **PPP 프로젝트 투자이사회**
 - 교통운송부 산하 조직
 - BOT 형태의 교통 인프라 시설 관련 프로젝트 관리 담당

5. 베트남

PPP 사업추진 분야

- 운송
- 도로조명, 급수 및 배수시스템, 수처리, 주택정비
- 의료, 교육, 문화, 스포츠
- 농업 및 농촌개발
- 발전소, 송전설비
- 기타 총리가 지정하는 사업

PPP 계약 형태

기존

- BOT
- BTO
- BT

Decree 15 방식 추가

- BOO
- BLT
- BTL
- O&M

[그림 5-12] PPP 사업의 외국인 지분 참여 한도

	2016	2017		2016	2017
Transport			Energy		
Roads	100%	100%	Power generation	100%	100%
Railways	Various	Various	Power transmission	100%	100%
Ports	Various	Various	Power distribution	100%	100%
Airports	30%	30%	Oil and gas	100%	100%
Water and wastewater			Municipal solid waste		
Bulk water supply and treatment	100%	100%		100%	100%
Water distribution	100%	100%	Social infrastructure		
Wastewater treatment	100%	100%	Healthcare infrastructure	100%	100%
Wastewater collection	100%	100%	Healthcare services	100%	100%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ducation infrastructure	100%	100%
Fixed line infrastructure	49%	49%	Education services	100%	100%
Fixed line services	65%	65%	Government buildings	0%	0%
Wireless/mobile infrastructure	49%	49%	Prisons and correction centers	0%	0%
Wireless/mobile services	65%	65%	Social housing	100%	100%
			Sport and leisure facilities	49%	49%

FOR MORE INFORMATION,
keri.koreaexim.go.kr

WE FINANCE
GLOBAL KOREA

감사합니다